

통아시아에서 빛은 미래의 세계정치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10



**EAI**  
EAST ASIA INSTITUTE

## EAI 사랑방이란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 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목차

<b>1.미국의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과 미일동맹.2</b>	
사세보 해상자위대 사료관.....	안현
<b>2.Revisiting the Trilateral Tension in the Taiwan Strait .....39</b>	
JMSDF Sasebo Museum .....	TaeWoo Kang
<b>3.임진왜란 시기 조선 도자기 기술의 일본전파: .....118</b>	
규슈 도자기 문화관 .....	조현희
<b>4.일본외교의 ‘도덕적 현실주의’ .....169</b>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	송승윤
<b>5.굽히는 제국과 열린 쇄국: .....221</b>	
데지마.....	조이언
<b>6.19 세기 일본, 영 제국과 조우하다 .....264</b>	
글로버가든 .....	윤도원
<b>7.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 .....300</b>	
규슈 국립박물관.....	김성아
<b>8.번리(藩籬)체제의 양무(洋務)적 운용 .....329</b>	
일청강화기념관 .....	송지혜

# 미국의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과 미일동맹

## 사세보 해상자위대 사료관

안현

한국외국어대학교

### 들어가며

2023 년, 미국은 통합억지 전략을 도입하여 억지를 보다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전략 변화에 맞추어 3 대 문서 개정을 통해 자국의 안보전략을 수정하였으며,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전략을 위한 역량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세보 항은 일본의 군항으로, 통합억지 전략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현장입니다. 본고에서는 우선 통합억지전략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피고,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미일연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일본이 여러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통합억지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분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통합억지와



미일연대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살펴봄을 통해서 사세보 향을 비롯한 미일연대의 장이 어떠한 방향과 깊이로 진행될 것인가를 살피고, 나아가 중국에게 미일연대가 도전요인이 될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 미국의 통합억지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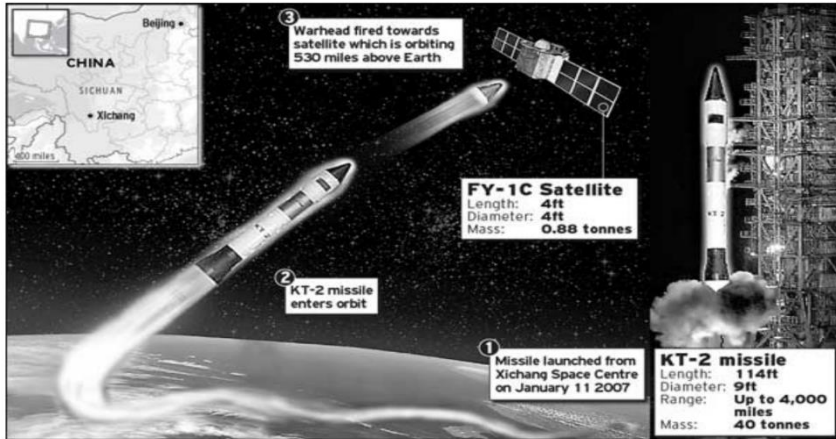
억지이론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핵의 사용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탄생하였으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Jervis 가 이러한 변화를 3 개의 물결로 구분한한 이래로(Jervis, R. 1979), 2023 년 현재까지 총 4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4 개의 물결 가운데 첫 번째 물결은 핵 억지 개념의 필요에 따라 최초로 제시된 억지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론 내부의 체계화 과정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의 핵 억지로 인한 위기 고조(Escalation)를 경험한 뒤, 억지의 성공과 실패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게임이론과 합리적 행위자 가정이 이론에 도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래식 억지를 이론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학계에서 생겨나, 사례 연구를 통해 억지이론을 발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Jervis 의 구분에 더하여, 기존의 억지이론이 포섭하지 못했던 탈냉전기 안보환경에 적합한 억지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9.11 이후 대두된

테러리즘 네트워크 등의 예시는 합리적 행위자 가정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나온 설명이 억지이론의 네 번째 물결을 형성하였습니다(Lupovici, A. 2010). 4 번의 물결에 더하여 최근 발생한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억지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은 2021 년 제 40 차 풀러튼 포럼 기조연설(Austin, L. 2021)에서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를 발표하고, 향후 미국 국방부가 전개할 새로운 전략의 대략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2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하 NDS)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통합 억지의 정의와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통합억지를 도입하였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미국이 통합 억지를 도입하는 과정을 우선 살펴보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관한 미국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억지전략의 도입사

탈냉전 이후 미국의 역지는 앞서 네 번째 물결이 지적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변화 가운데 통합역지가 도입된 계기로 작용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크게 4 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활발하게 논의된 중국의 부상입니다. 두 번째는 다영역(Cross-Domain)의 문제로, 중국의 대인공위성 미사일 실험,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당시에 사용되었던 사이버 공격 등의 사건은 다영역 공격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시사하였습니다. 다영역 공격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이 시작된 플랫폼이 대상 플랫폼과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지상영역에서 발사된 대위성 미사일(Anti-SATellite missile, ASAT)이 우주영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타격을 줄 의도를 가지고 동 영역 내에서 공격이 수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상작전에 차질을 주기 위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Manzo, V. 2011, 2). 적이 이러한 다영역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었습니다.



다영역 공격의 대표적 사례인 ASAT 미사일 (Spencer, R. 2007).

세 번째는 새로운 영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미국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요. 해당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성을 활용하여 미국과 동맹국에게 위협 또는 침략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있었습니다. 2008 년 대침체가 발생한 이후 도전국들의 적대적 행위는 증가하였습니다. 러시아의 2008 년 남오세티야 전쟁과 2014 년 크림반도 합병 등의 사례는 미국의 억지 실패로 간주되며, 센카쿠 열도 문제와 같이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또한 이 시기 이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발생한 동맹국 간의 불신은 동맹이 도전행위에 일관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통합억지는 이러한 4 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새로운 억지이며, 이는 NDS 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NDS 는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주체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및 이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미국안보에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을 가하는 것이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시도”로 간주하고 있지요. 또한 NDS 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총체적(Holistic)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대응으로써 통합억지가 필요” 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수행하는 억지가 “통합전략억지(Integrated Strategic Deterrence)”의 개념 하에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는 것이 통합억지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다영역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NDS 에서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NDS 에서는 거부억지(Deterrence by Denial)와 직접적 집단적 비용 부과 억지(Deterrence by Direct & Collective Cost Imposition)와 같은 기존의 억지논의에서 다뤄지던 방식에 더하여 NDS 에서는 “회복 억지(Deterrence by resilience)”를 새로운 억지의 방식으로 제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색지대 작전 등의 다영역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과 동맹국군의 회복성(Resilience)을 높이겠다(Scouras, J., Smyth, E., & Mahnken, T. 2017, 7)(Chase, M & Chan, A. 2016, 1)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NDS에서는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하여, 중국이 미국의 우주와 사이버 영역 의존을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비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위협을 억지할 전략이 부족하다는 연구(Scouras, J., Smyth, E., & Mahnken, T. 2017, 7)를 반영하고 해당 영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DS에서는 경쟁이 의도되지 않은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이 미국의 의도와 능력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Schelling 이 주장하였듯이, 억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공통의 언어와 상황인식, 처벌의 조건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Schelling, T. 1966, 146-148). 억지 대상이 주체가 제시하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오인을 막고, 신호를 명료하게 인식하여 의도되지 않은 충돌을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통합억지의 명명은 취약성과 모호성 등을 이용하여 자국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행위를 파악하고 억지할 수 있다는 미국의 신호일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통합억지를 수행하기 위한 동맹국과 미국의 대응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기된 도입사를 종합하면, 미국의 통합억지는 탈냉전 이후 발생한 4 개의 안보환경 변화가 도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억지전략을 수립하였지요. 안보환경 변화가 초래한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통합억지의 주요한 사항은 쉽게 변경되기 어려울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미국 학계의 통합억지 인식**

통합억지전략이 2022 년 NDS 를 통해 구체화되자, 미국 학계에서는 해당 전략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인식은, 전략을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에 한하여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NDS 상에서 나타난 비군사적 수단의 통합이 억지의 수단으로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효율적인 억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군사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Spoehr, T. 2021). 이들은 경제 제재나 외교적 수사 등의 비군사적 수단이 억지에 제한적인 효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를 인용하면서, 비군사적 수단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는 것이 통합억지의 방향이라면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옹호적 입장에 선 학자들은, NDS의 입장은 국방부가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기관 간(Interagency)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국방부는 군사적 수단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NDS는 주로 군사적 수단의 활용과 발전에 관하여 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수단에 관하여는 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수준이라는 지적(Sisson, M. 2022).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관 간 협력에 주목하여 이러한 접근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억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제시한 개념을 타 기관에서 먼저 수용하고,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억지의 심리적(Psychological) 측면을 강조하면서, 억지의 대상에게 발신되는 신호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NDS에서 잘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McInnis, K. 2022). 억지는 단기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효과가 있으며, 이는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연구에 기초하여, NDS가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은 억지 실패의 상황에서 강압(Coerce)적 수단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Monaghan, S 2023).

첫 번째 쟁점은 본고의 논의를 벗어납니다. 미국 국내에서 기관이 담당하는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국내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억지의 성공을 담보하는 역량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있으나, 미 국방부는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Austin, L 2023)으로 보입니다. 본고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은 두 번째 쟁점으로, 신호의 일관성입니다. 역지의 공동 수행 주체이자 역지의 수혜자인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신호를 수신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며, 동맹국의 판단이 상세히 다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 통합역지 전략과 미일연대

미국이 통합역지 전략에서 설정한 동맹국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동맹국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우선 NDS와 미일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이하 2+2 회담)를 중심으로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후 살펴본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이 통합역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일본 국방백서(防衛白書)와 3대 문서 개정 과정과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통합역지전략이 제시하는 일본의 역할

오스틴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통합역지란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역량을 사용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며, 모든 역량을 동맹 및 협력국들과

함께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Department of Defense 2023, 8). 그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합억지의 방향을 3 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NDS에서는 일본을 주요한 협력 대상으로 언급하고 새 역량의 개발과 네트워크적 방식을 사용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맹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NDS 상에 나타난 일본과의 협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합억지전략의 인도태평양지역 적용 부분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언급하였습니다(Department of Defense 2023, 15-16). 일본과 현대화 및 통합된 방식으로 전략 계획과 능력을 조합하는 것이 명시된 주요 협력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통합확장억지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를 논의하는 절에서 핵 억지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국가로 한국, 호주와 함께 일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DR 의 인도태평양지역 적용 부분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발전과 협력 대상국으로 한국, 호주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언급은 통합억지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NDS 에서 타 국가들은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협력할 것을 예고하지요. 예를 들어, 문서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주로 북한 억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인도태평양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NDS에서는 통합억지전략을 위한 미일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데요, 이는 2+2 회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2023 년 2+2 회담 사진 (The Asahi Shimbun 2023).

2+2 회담의 결과문서를 통해 미일 간의 구체적 통합역지 논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문서 간의 일치로 인해 미일이 공유하는 입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두 장관은 개정된 3 대 문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의 출간이 “전례 없는 일관(Unprecedented alignment)”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미국의 NDS 가 22 년 10 월 27 일에, 문서개정이 동년 12 월 16 일에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두 미국 장관의 평가는 자신들의 통합역지 전략에 일본의 전략이 짧은 시간에도 조응(照應)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국가의 새로운 안보 전략과 방위 전략이 통합된 방식으로 수렴하는 점 또한 강조되어, 일본이 자국의 신호를 적절히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였다는 미국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치에 관한 보상처럼, 미국은 미일안보조약 제 5 조(개입조항)의 대상에 센카쿠 열도가 해당됨을 미국이 확인하면서 공약(Commitment)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서의 후반부는 동맹의 역할과 과제를 5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역은 각각 (1)동맹의 협력 (2) 평시의 연합된 노력 (3) 역지와 대응(Respond)을 위한 연합된 노력 (4) 우주, 사이버 그리고 정보 보안 (5) 기술적 우위의 유지가 제시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항은 앞서 언급된 통합역지의 방향성에 관련된 표현이므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영역별 항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영역별 세부항목
(1)동맹의 협력	자위대 상설통합사령부(Permanent Joint

	Head Quarters, PJHQ) 설치
(2)평시의연합된 노력	항공자위대 카데나 기지 탄약창 증설/ 미국과 일본 시설의 공동 사용 확대 /일본 남서 제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 증가
(3)억지와대응을 위한 연합된 노력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대함전, 대잠전, 소해전, 상륙 및 공수작전, ISRT, 물류, 기동 등의 임무 영역 강화/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및 기타 영역을 통합하는 다영역 능력 강화
(4)우주, 사이버 및 정보 보안	일본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 운영과 우주 영역 인식에서 (양자)협력/항공자위대 사이버 방어사령부 설립/(사이버)위협 관리 프레임워크 도입/방위 산업 대상 사이버 보안 표준 수립
(5)기술적우위의 유지	연구, 개발, 실험 및 평가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 정부 상호 품질 보증의 논의/고출력 마이크로파 및 자율 시스템 공동 연구 프로젝트 논의

위에 명시된 사례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합역지는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역량을 사용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며, 모든 역량을 동맹 및 협력국들과 함께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제시된 방향성에 맞추어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 정책을 실행 및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로, 일본은 상설통합사령부 (「常設統合司令部」)를 설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설통합사령부란 육해공 자위대 3 개를 통합 지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인 자위대의 부서입니다. 일본의 군사조직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설통합사령부를 신설하는 것은, 국내적 요청에 더해 미국과 통합역지를 수행할 담당 부서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설통합사령부 설치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진 대응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는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부재하여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에 대응하는 기관이 없어 통합 막료장이 미국의 합동참모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을 동시에 상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 국내외적 우려가 설치를 지연시켰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이미 통합막료감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지휘의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적으로 3 개 자위대를 통합하는 강력한 권위체가 등장하면 이는 일본제국시절과 같은 군사주의적 경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Isobe Koichi, 2023). 이러한 우려로 12 년간 이뤄지지 않던 기관의 설치는, 통합역지가 등장한 이후 비로소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본 NDS 에서 나타난 상설통합사령부의 설치 목적은 통합적 방식(Integrated manner) 으로 다영역작전(Cross-domain operations)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것입니다(Ministry of Defense 2023,15,249,281). 통합역지 전략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용어와 배경의 일관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의 예시에서 드러나듯 미국이 제시한 통합역지의 개념에 맞춰 급격하게 방위 역량을 강화 및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발송한 신호를 일본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 일까요? 다음 절에서는 일본의 인식을 살펴봄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통합역지전략 하에서의 일본의 방위역량재편

일본은 앞서 언급한대로 2022 년 미국의 NDS 가 발표된 뒤 약 2 달여 만에 3 대 문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2023 년 초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 의해서 자국의 방향성과 일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전례 없는”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돌이켜보면, 이전에 비해 보다 본격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본은 냉전기에 일본국 헌법 제 9 조(일명 평화헌법)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변경을 거듭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해석 상의 변화는 이번 3 대 문서 수정이 발생한 2022 년 전까지 법적인 차원에 한정하여 이뤄져 왔습니다. 먼저, 1999 년 비상사태시 평화헌법 하에서 미일 협력이 가능한 범위를 상정한 주변사태안전보장법(周辺事態安全確保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견해를 변경한 평화안전법제 관련 2 법(平和安全法制)이 2015 년 통과되었습니다. 두 문서로부터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문서는 평화헌법을 준수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시기는 각각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라는 주변국의 위협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Watanabe Tsuneo 2023). 세 번째로, 내각은 개정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 과정에서 발생한 요구를 개정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参議院. 1999). 이러한 법적 사항을 보면 변경된 해석은 일본이 안보위협과 미국의 요구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보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 년 방위백서는 회색지대 전술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륙기동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음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경향과 달리, 2022 년 3 대 문서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전략 단계에서 일본은 2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존하는 장비의 최적효율적 사용입니다. 작전율(Operational Rate)를 늘리고, 적절한 탄약과 연료를 구비하며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투자 시설을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작전을 위한 중심 역량의 개발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지상과 해상 및 공중과 우주, 사이버공간, 전자기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된(Integrated) 능력을 강화하여 다층적(Multi-layered) 방식으로 다영역 작전 상황에 대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협 영역 외부에서의 침략 공격에 대응할 스탠드 오프(Stand-off) 방어 능력의 필요성도 강조됩니다(Ministry of Defense 2022).

일본은 같은 해에 발표된 미국의 NDS 에 상응하는 전략(Align respective strategies)을 수립하는 것을 새로운 NDS 의 발간 목적으로 초반부에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개념의 유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이 제시하는 통합역지의 정의는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며, 모든 역량을 동맹 및 협력국들과 함께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에서 일본의 문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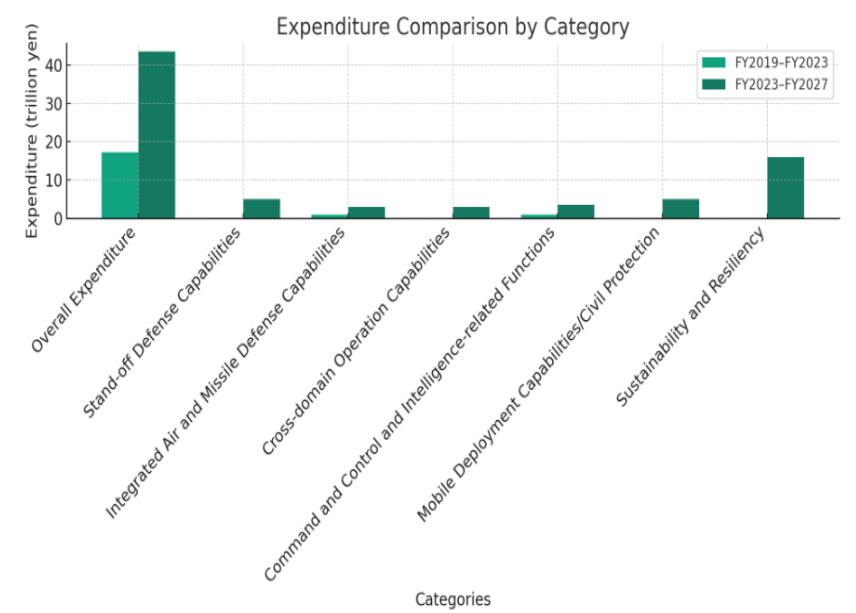
미국 NDS 상의 목표	일본 NDS 상의 목표	3 대 문서 상의 실행방안	2+2 회담에 명시된 실행방안
현존 역량의 효율적 사용	현존하는 장비의 최적효율적 사용	작전율의 향상/ 연료와 탄약의 구비 / 회복성 있는 방위시설 구축	남서 제도 군사훈련 확대/ 미일 공동 시설사용 / 카데나

			기지 탄약창 증설
새로운 역량의 개발	미래 작전을 위한 중심 역량의 강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및 전자기 영역에서 통합적 능력 강화 / 스탠드 오프(Stand- off)방위능력 강화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과 영역 인식협력/ 항공자위대 사이버 방어사령부 설립 /연구개발 양해각서/ 고출력 마이크로파 및 자율 시스템 공동 논의
동맹 간의 네트워크 강화	통합된 방식으로 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상응하는 전략을 제시	미일 간의 공동 역지와 대응 능력 강화 / 일미 간 동맹 조정 메커니즘(ACM) 갱신 / 취득 및 교차 서비스 협정(ACSA) 및 상호접근협정(RAA) 체결 촉진 / 주요	자위대 상설통합사령부 설치 / 대공 및 미사일 방어 / 대함전과 대잠전, 소해전, 상륙 및 공수작전, ISRT, 물류, 기동 임무

		국가(NATO, 한국, 호주, 인도 등) 와의 개별적 협력	영역 강화
--	--	----------------------------------	-------

제시된 사항 가운데 현재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역량은 스탠드 오프(Stand-Off) 방위능력인데, 이는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년 일본 국방백서(防衛白書)에서는 대강의 방위 예산을 명시(Ministry of Defense 2023, 263-275)하고 있는데, 43 조 5 천억 엔(미화 3 천 40 억 달러)의 총액을 가운데 7 대 방위력 정비 목표를 위해 대략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 것인가가 나타납니다. 가장 많은 지출인 9 조 엔을 지출하게 될 항목은 지속성 및 회복성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세부적으로 탄약 및 유도탄, 정비, 시설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출을 예고하는 항목은 바로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으로, 5 조 엔을 지출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이란, 적의 위협범위 외부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주로 미사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주로 미사일 요격(Missile Defense)에 주안점을 두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7 년 아베 신조 총리를 시작으로 자유민주당 일각에서는 방어 시스템에 더하여 신속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존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이 중국, 러시아 및 북한에서 개발됨으로 인해 이러한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지요.(自由民主党 政務調査会 2020).



### 7 대 항목별 예산

스텐드 오프 방위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일본은 지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를 도입하기로 한 기존의 방침을 수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수행하는 신형 이지스 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이지스 함은 유사 시 기존의

함정들이 오키나와 인근에서 작전하는 동안, 동해에서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Ministry of Defense 2023, 16). 다음으로,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을 위해서 일본은 기존에 도입하기로 계획된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 400 발 가운데 200 발을 1 년 앞당긴 2025 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Ken Moriyasu, Yusuke Takeuchi. 2023). 이는 자국의 신형 순항미사일이 도입되는 2026 년 전까지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불과 1 년의 도입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22 년 말의 도입결정을 번복한 것에서 일본 정부의 위협 인식이 얼마나 강한가에 관해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펠로시 방문에 따른 중국 군사 훈련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착탄 지점.

(Katsuji Nakazawa 2022).

일본의 고조되는 위협인식은 미국의 통합역지전략에 일본이 가장 동조적인 국가가 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위협인식은 미국에 비해서도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 년 일본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일본이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무력충돌에 연루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9.7%가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일본의 군사 능력에 만족한다는 답변 또한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53%로 나타났습니다(Takahashi Kosuke 2023). 2022 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방문 하루 뒤에 있었던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서, 9 발의 미사일 가운데 5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착탄한 사건 등으로 인해 일본은 보다 높아진 위협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INF 파기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핵전력 증강으로 인해, 역내를 범위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 또한 일본이 방위역량을 증강하는 주요한 배경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위협인식으로 인해 보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이

국방백서 등의 문서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일본의 자체적인 방위역량 강화는 현존하는 역량을 강화함을 통해 유사 시 타격을 견디고(Resilience), 지휘통제와 탄약공급 등이 미국과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Sustainable)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량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미사일 타격 능력인 스텐드 오프 타격능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기초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 2023 년 미일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상정하는 무력충돌은 남서태평양의 자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방어 및 대만 지역에서의 역지가 우선시되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부가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 통합억지전략 하의 미일연대와 중국

통합억지의 직접적인 대상국인 중국의 인식은 중국현대 국제관계연구원(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에서 발간한 현대국제 관계 2023 년 6 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합억제는 3 대 모순을 야기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陈庆鸿 2023).



그들이 주장하는 3 대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군사화와와 경제화 간의 모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는 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하므로, 통합역지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둘째로, 자주성의 모순입니다. 통합역지를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확보하고 동맹국의 군사적 수단의 통합이 필요한데, 이 경우 중립을 어기고 행동에 제약이 생겨 동맹국의 주권을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셋째로, 통합역지가 역지의 실패를 야기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위협의 유효성이 잠재적 적이 가질 수 있는 대안에 있다는 셸링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통합역지가 비무력적 대안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이러한 3 대 모순으로 인해 통합역지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종합하고 있습니다. 통합역지를 함께 수행하는 동맹국이 미국 국내정치 등의 문제로 동맹국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늘어난 긴장은 많은 반대를 야기하여 실패할 것이라는 추정이지요.

미일 간에 강화된 협력 또한 중국은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중국은 일본이 통합역지를 위해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군국주의화”로 지적하고 비판(Reuters 2023)하고 있습니다. 통합역지와 관련하여 2023 년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분야는 중거리 미사일 분야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보도(Patrick Tucker 2023)와 일본의 개량형 대함 미사일 조기배치 보도 등에 관해서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SM-6 와 토마호크 등의 순항미사일 배치는 위력 자체는 적으나, 사건의 성격이 쿠바 미사일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Zhang Han 2023). 이러한 주장은 일정 부분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일본으로 한정하여 보면, 일본이 통합억지 전략에 참여하면서 실제 전투 능력과 효율성이 필요해진 상황과 일본의 장기 불황 및 고령화는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적됩니다. (Takuya Matsuda 2023). 트럼프 행정부의 경험으로 인해 통합억지전략 자체의 지속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억지를 위해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일본의 정책은 당분간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경계하는 일본의 최근 행보는 일본의 위협인식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인식을 촉발한 사건은 중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기반하였지요. 중국은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2020 년 전략학에서 제한적 타격을 억지를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략학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립되고 타격하기 쉬운 군사 및 정치적 표적을 향한 경고-시위적 군사 타격이 억지를 위해 수행될 수 있다고 언급(中国军事科学院军事战略研究所 2020, 136)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사고에 입각하여 2022 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방문 하루 뒤에 대만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에서는 실사격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전구 합동작전사령부에 재래식 미사일 사용 권한을 일부 이관한 것과 관련(Roy D. Kamphausen 2023)이 있습니다. 즉, 전략적 차원과 작전 차원에서 발생한 중국군의 변화가 일본 해역에서의 미사일 착탄을 야기하였으며, 일본의 위협인식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 마치며

미국의 통합역지와 중국의 통합전략역지 모두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입니다. 영역, 다양한 형태의 분쟁, 군과 비군사 부문과 동맹의 역량을 통합하는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AI 기술의 필요성은 양국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개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속 정확한 결정을 의사결정자가 돕는(Department of Defense 2023, 3)것을 AI 의 핵심 역량으로 지적합니다. 중국 또한 시진핑이 제 20 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3 화 개념을 언급한 이래(新华网 2022)로,

지능화에 맞춘 AI 의 군사적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함이 여러 문서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지능화 시대에 접어들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핵심 알고리즘이 뒤처지면, 하드웨어의 높은 성능에도 작전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李志飞 2022)고 분석하여 AI 를 기존의 군사적 수단과 결합하는 방식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 우리는 미국이 수립한 통합역지전략에 일본이 주요한 행위자로 참여하는 양상과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통합역지는 중국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였고, 일본은 이에 보조를 맞춰 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핵심 역량인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이라는 물리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김양규 2024).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에서 일본은 약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재 생산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미일이 통합역지전략 하에서 중국의 AI 개발을 지체하는 상황은 중국에게 있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통합역지전략의 실행으로 인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경쟁, 반도체와 같은 기술개발 경쟁 등 기존의 군사전략차원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경쟁으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셈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통합전략억지”라는 새로운 군사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추어 작전 차원에 이르기까지 역량을 재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일본의 위협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미일연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중국의 전략이 스스로의 전략적 지평을 축소하게 되었고,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인식과 일 간에 존재하는 국내·국제적 문제로 인해 양국의 연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변수는 분명히 존재하나, 당분간은 미일 간의 연대가 지속되어 중국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문헌

- Austin, L. 2021. “Secretary of Defense Remarks at the 40th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Fullerton Lecture”, *Department of Defense*. Available at: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2708192/secretary-of-defense-remarks-at-the-40th-international-institute-for-strategic/> [Accessed December 2023].
- 2021. “Secretary of Defense Remarks for the U.S. INDOPACOM Change of Command”, *Department of Defense*. Available at: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2592>

093/secretary-of-defense-remarks-for-the-us-indopacom-change-of-command/ [Accessed December 2023].

Chase, M.S. and Chan, A. 2016. “China's Evolving Approach to “Integrated Strategic Deterrence”” *RAND Corporation*, RR-1366-TI, pp. 1.

Department of Defense. 2023. “Data, Analy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doption Strategy” pp. 3.

Isobe, K. 2023. “Japan’s Perspective on Command and Control Issues in the Japan-U.S. Allianc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vailable at: <https://www.csis.org/analysis/japans-perspective-command-and-control-issues-japan-us-alliance> [Accessed December 2023].

Jervis, R. 1979. “Deterrence Theory Revisited”, *World Politics*, 31(2), pp. 289–324.

Kamphausen, R.D. 2023. “Modernizing deterrence – How China coerces, compels and deters”,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 Knopf, J.W. 2010. “The Fourth Wave in Deterrence Research”,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31(1), pp. 1-33.
- Lupovici, A. 2010. “The Emerging Fourth Wave of Deterrence Theory—Toward a New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4(3), pp. 705–732.
- Manzo, V. 2011. “Deterrence and Escalation in Cross-Domain Operations: Where Do Space and Cyberspace Fit?”, *Strategic Forum*, National Defense University, December, pp. 2.
- McInnis, K. 2022. “‘Integrated Deterrence’ Is Not So Ba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vailable at: <https://www.csis.org/analysis/integrated-deterrence-not-so-bad> [Accessed October 2023].
- Ministry of Defense of Japan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Available at: [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strategy/pdf/strategy\\_en.pdf](https://www.mod.go.jp/j/policy/agenda/guideline/strategy/pdf/strategy_en.pdf) [Accessed October 2023].
- 2023. “Defense Programs and Budget of Japan”, pp. 16.
- 2023. “The 2023 Defense of Japan (Annual White Paper)”, pp. 15, 249, 28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Japan-U.S.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Japan-U.S. “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Japan-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ons*. Available at: [https://www.mofa.go.jp/na/st/page4e\\_001338.html](https://www.mofa.go.jp/na/st/page4e_001338.html) [Accessed November 2023].

Monaghan, S. 2023. “Bad Idea: Integrated Deterrence as strategy”, *Defense360*. Available at: <https://defense360.csis.org/bad-idea-integrated-deterrence-as-strategy/> [Accessed October 2023].

Moriyasu, K. & Takeuchi, Y. 2023. “Japan brings forward Tomahawk acquisition by a year”, *Nikkei Asia*. Available at: <https://asia.nikkei.com/Politics/Defense/Japan-brings-forward-Tomahawk-acquisition-by-a-year> [Accessed January 2024].

Nakazawa, K. 2022. “Analysis: Xi ditched milder options in sending missiles toward Japan”, *Nikkei Asia*. Available at: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China-up-close/Analysis-Xi-ditched-milder-options-in-sending-missiles-toward-Japan> [Accessed January 2024].



- Reuters. 2023. “Japan’s return to path of militarization ‘dangerous’ – China defence ministry”, *Reuters Asia Pacific*. Available at: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s-return-path-militarisation-dangerous-china-defence-ministry-2023-03-16/> [Accessed January 2024].
- Schelling, T.C. 1966.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46-148.
- Scouras, J., Smyth, E., & Mahnken, T. 2017. “Cross-Domain Deterrence in US–China Strategy”,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 pp. 7.
- Sisson, M.W. 2022, Nov. “There is a lot to like in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Brookings*.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there-is-a-lot-to-like-in-the-2022-national-defense-strategy/> [Accessed October 2023].
- Spencer, R. 2007. “Chinese missile destroys satellite in space”, *The Telegraph*. Available at: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1539948/Chinese-missile-destroys-satellite-in-space.html> [Accessed January 2024].

Spoehr, T. 2021. “Bad Idea: Relying on ‘Integrated Deterrence’ Instead of Building Sufficient U.S. Military Power”, *The Heritage Foundation*.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org/defense/commentary/bad-idea-relying-integrated-deterrence-instead-building-sufficient-us-military> [Accessed January 2024].

Takahashi, K. 2023. 'Poll: Japanese Support for Self-Defense Forces Rises to Record High', *The Diplomat*.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23/03/poll-japanese-support-for-self-defense-forces-rises-to-record-high/> [Accessed January 2024].

THE ASAHI SHIMBUN, 2023. 'Japan, U.S. go all in on Tokyo's counterstrike capability', *The Asahi Shimbun*. Available at: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812666> [Accessed January 2024].

Tucker, P. 2023. 'US to deploy new land-based missiles, Army's Pacific commander says', *Defense One*. Available at: <https://www.defenseone.com/technology/2023/11/us-deploy-new-land-based-missiles-armys-pacific-commander-says/392137/> [Accessed January 2024].

U.S. Mission Japan. 2023.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U.S. Embassy & Consulates in Japan, Speeches & Statements. Available at: <https://jp.usembassy.gov/joint-statement-security-consultative-committee-2plus2/> [Accessed October 2023].

Watanabe, T. 2023. 'What's New in Japan's Three Strategic Document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Experts. Available at: <https://www.csis.org/analysis/whats-new-japans-three-strategic-documents> [Accessed December 2023].

Zhang, H. .2023. 'US potential intermediate-range missiles deployment 'big provocation' to China', Global Times. Available at: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11/1302569.shtml> [Accessed January 2024].

김양규 2024.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2024 년 세계 군사질서와 한국: 정확성과 투명성 혁명에 따른 공격 우위 시대 한국의 안보정책”, 동아시아연구원. Available at: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294&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294&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

per%27,%27kor\_special%27,%27kor\_multimedia&keyword\_option=&keyword=&more= [Accessed January 2024].

대한민국 국방부 2023. 제 55 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대한민국 국방부. Available at: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3495&command=view&id=mnd\\_02050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page=1&newsId=I_669&newsSeq=I_13495&command=view&id=mnd_0205000000000&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OrganSeq=) [Accessed December 2023].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2020. 「国民を守るための抑止力向上に関する提言」,  
『自由民主党』.

参議院. 1999. '第 145 回国会（常会）質問主意書', トップ, 質問主意書. Available at: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45/touh/t145022.htm> (Accessed: November 2023).

新华网 2022. '（受权发布）习近平：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Available at: <http://www.news.cn/politics/cpc20/2022->

10/25/c\_1129079429.htm [Accessed January 2024].

袁 艺 李志飞 2022. “军事论坛 | 坚持机械化信息化智能化融合发展”, 中国军网-解放军报.中国军事科学院军事战略研究所 2020. '『戰略學』', pp. 136.

# Revisiting the Trilateral Tension in the Taiwan Strait : Investigating the U.S., Taiwan, and China's Views

JMSDF Sasebo Museum

**TaeWoo Kang**

Kyung Hee University

## Introduction

Debates over the term “New Cold War” have frequently arisen in the past few years when describ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midst of fear and instability, a competing Sino-US condominium centers on issues around the Taiwan Strait most fiercely. Due to the significance of the military and the prolonged conflictual context of the region, the focus has exclusively been on the military domai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be seen as a mere pessimistic fatalism of military conflict. The tr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 Taipei, and Beijing deal with more broad domains which are somewhat different from what the mainstream has focused on.

This paper argues the essence of the conflict in the region is not

merely about military tension and suggests a more complex perspective. An alternative view of the Taiwan Strait is with a lower possibility of an open, direct, and overt military conflict. In this paper, following the definition suggested by Correlates of War Typology, I specify the term “war” as an inter-state war in which a territorial state that qualifies as a member of interstate system is engaged in a war with another system member. Here, this war must be involved in combat between stakeholders’ regular armed forces with more than 1,000 battle-related fatalities. As the basis for this argument, I will investigate official documents and statements from each state. It is not, however, to deny either the possibility of war or the significance of the military domain. Plus, it is not to assume the status quo in the region is not conflictual. What the paper wants to conclude is that, despite the conflictual feature, war is not imminent as opposed to mainstream pessimism.

The remaining parts of this paper consist of five sections. Each section will cover Taiwan, the U.S., and China’s views on the security issues of the Taiwan Strait. The last section provides a summary with the comparison and contrast of the three states’ positions on the issue, thereby suggesting implications to describe the conflict of the region.

## Taipei's Focus on Gray and Hybrid Aspects in the Conflictual Region

### **1. Military Invasion Is of Secondary Importance**

The ROC National Defense Report 2023 systemically delineated Taipei's perspective on the Chinese threat imposed on the Strait. While it recognizes the possibilities of actual military invasion by Beijing, the report puts equal weight on deliberating security challenges other than direct military conflict. Also, this is noteworthy despite the fact that it had a much greater emphasis on military conditions as a driving force of the security landscape of the region. Taipei views the imminent threat in the region Beijing has been unfolding takes the form of hybrid warfare and actively exploits gray zone characteristics.

Consequently, it switched to using new means, inciting grey zone conflicts, to manipulate its ambiguous characteristic between war and peace to increase the risks of conflict and constrain the freedom of action of our forces in peacetime.

This recogni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one of the widely agreed-upon characteristics of gray zone coercion is ambiguity.



Ambiguity indicates a passive stance of adversaries over direct and open interstate military conflict. Thus, the report is not caught up in the widespread terror of overt military conflict in the region and sees different aspects of the conflict.

Furthermore, another distinct feature of gray zone coercion is a diversification of actors, beyond military agencies. Hoffman (2016) identified the involvement of both national and subnational instruments in gray zone coercion. In the report, there are several Chinese aggression that were categorized in this feature:

(4) dispatching civil aircraft UAVs, and weather balloons to fly close to our offshore islands and even the Taiwan proper, (5) using marine survey vessels and hydrographic survey ships as a “cover” for the military to improve its battle management around Taiwan, (6) initiating cyberattacks on our governmental agencies, critical infrastructures, important business enterprises, and (7) assigning maritime paramilitary force to join the PLAN and the Coast Guard to conduct joint training, so as to increase the workload on the part of our naval force.

The repor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non-military threat existence

and the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these aggressions. Although these series of aggressions are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direct military threat, this shows Taipei's complicated view on security issues in the Strait, which does not stay merely in a military domain.

The second feature of the threat in the region Taipei distinguishes is that it has much to do with hybrid warfare. Together with gray zone characteristics, it explains Beijing has been implementing diverse tactics other than military operations. Phrases on the mixture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and “conventional and non-conventional means” further broaden the spectrum of conflicts in the region. Moreover, it contains the gray zone feature in that diverse domains are linked to the diversification of actors involved, as delineated above, to a certain extent.

PRC's hybrid warfare against Taiwan has been a mix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and conventional and non-conventional means, and it may go with asymmetrical tactics in political, diplomatic, legal, psychological, propaganda, informational, and even criminal domains with multi-channel, highly informatized, flexible, and highly concealed features.

Lastly, the report organized threats in multiple domains into four categories; each refers to psychological, opinion, legal, and cognitive warfare. It directly interrelated with what the ROCMND has recognized as “political warfare,” which is the extension of hybrid warfare. The report points the severity of their negative impacts on society overall.

Politically, it has been using its propaganda organs from its party, political, and military circles to inflict cognitive warfare and “three warfares,” namely opinion, psychological, and legal warfare against Taiwan. Focused on using opinion manipulation, psychological threats, and legal actions as means, ... The political and psychological impact, caused by its MO, on our people, has vindicated that the PRC’s strategy against Taiwan has blended the tactics of cognitive warfare in its “three warfares,” united front, and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tasks, focusing on manipulating the will, value, belief, mindset, and logic of thinking in personal, organizational, military, and national domains. Such a strategy has become more diversified and complex and is trying to paralyze the opponent spiritually and defeat it psychologically.

This also cont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to be revisited. By imposing equal weight on so-called political warfare, this publicly shows not only does Taipei see the imminent threat as military but also as political. Aggressive means adopted are listed as follows:

(1) Hacking and infiltrating the internet, (2) disseminating controversial messages, (3) extravagant propaganda and infiltration by means of a united front, and (4) using the methods of “deliberately distortion, direct falsification, wedge-driving and provocation, and threat and intimidation to modify and distort the essence of issues with Taiwan, aiming at creating a division among our society and driving wedges among our people.

Integrating features of a gray zone with hybrid warfare and explicitly stating the existence of political warfare, the report provides a sophisticated view of Taipei on security undertakings of the region. While acknowledging the danger and significance of direct military conflict, it also considers multifaceted threats other than direct military conflict seriously.

The gray zone hybrid conflict recognition is also seen in various evidence. In the 2023 Taipei Security Dialogue, President Tsai explicitly

mentioned “escalating gray-zone activities” caused by Beijing. She also pointed economic and cyber attacks, elaborating on Chinese hybrid threats to deplete Taiwanese confidence and capacity. In regard to this, she announced the will to fight against non-conventional threats such as cognitive warfare and disinformation. Notably, Tsai’s public remark of gray zone threat was not the first time. Tsai has consistently used the phrase “gray zone” in her opening remarks for Ketagalan Forum from 2021 to 2023. In the latest opening remarks did she add “information and cognitive warfare.” In an administrative statement regarding Washington’s additional military equipment sales successive right after the support for Ukraine, presidential office spokesperson Chang reiterated Beijing’s linkage with confrontational gray zone tactics.

Jyun-yi Lee, who specializes in gray zone hybrid threats and non-traditional security at the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 (2023) contended that by exploiting the non-military characteristics of “quarantine,” Beijing has diversified the actors involved ranging to coast guards and maritime militias. He identified the current blockade by Beijing is close to gray zone activities, in that it keeps the use of force below the war threshold. In successive research (Shu, 2024), the broader concept of A2/AD including domains of a network, cyberspace, and outer space was explicated, with the mention of its diverse outlet of disrupting commercial, civilian, and even

defense-related network infrastructure. This also showed Beijing's active pursuit of hybrid warfare.

Reflected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aipei has established a Political Warfare Bureau in Defense Agencies and retains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Electronic Force Command(ICEFCOM). Additionally, Ya-Chi Huang, a major in the ROC army and the leader of the Psychological Warfare Group, (2023) expressed concerns about Chinese "content farms," which refer to websites and associated entities that churn out massive amounts of propaganda. The article reaffirmed the existence of cognitive warfare and other three warfares, categorizing Beijing's approaches toward Taiwan as internal conflict creation, social resentment build up, and social polarization deterioration. She concluded the article by calling for whole-of-government cooperation against Bewijing's political warfare.

What this eventually tells us is, thus, Taipei's focus on gray zone hybrid threats, which go parallel with other military threats such as incursion, annexation, or coercive unification. When observing as a whole, Beijing's current threat is not an invasion of Taiwan, but Taipei sees this as a process of forming favorable conditions for later strategic pursuit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After all, a direct military conflict and invasion is not an imminent threat, although it could be in the future.

## **2. Further Understanding of Gray Zone Coercion and Hybrid Warfare**

The term gray zone first appeared in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in 2010.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mainly described gray zone as a new security ground that could not be dealt with by the conventional U.S. security framework. Thus the concept of gray zone coercion started as a new challenge to conventional deterrence.

Despite a good deal of discourses, however, there has been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Due to the very variety of the definition and typologies, one needs to describe it with its characteristics. The most widely agreed characteristic of gray zone coercion is ambiguity, as explained above. The gray zone is that domain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war and peace becomes impossible to draw with certaint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tactics employed (Azad et al., 2023). It consists of activities below the threshold of conventional military conflict and open interstate war (Brands, 2016). Also, Amy Chang and colleagues (2015) contended that the definition should be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peace and war. Furthermore, Echevarria (2015) mentioned the tendency to refer to gray zone wars as the usage of military force that falls short of actual war but which definitely does not qualify as peace. All these definitions consider ambiguity to a certain degree.

Since ambiguity indicates a tendency for adversaries to avoid direct and open interstate military conflict, this implies the expectation of a lower possibility of war. Taipei sees that Beijing is reluctant to conduct a war in that the concept of ambiguity prohibits an active use of kinetic means against one's adversary. It is worth noting, however, that the adoption of gray zone tactics does not mean a total abortion of kinetic means. Therefore, Taipei's perception of gray zone coercion should be explicated in ways Beijing regards direct and open military conflict as a last resort, while trying to manage its strategy below the threshold of it.

In fact, the report sees most of Beijing's aggression are designed to facilitate and/or support its ultimate goal of annexation of Taiwan. To conclude, an eclectic evaluation is to be proposed; although the series of aggression Beijing has been implementing against Taipei can be appraised as preliminary steps for its ultimate goal of military invasion, the imminent threat Taipei is facing is rather complicated one beyond a mere military focus. That is the very reason this paper stipulates that Taipei is not caught up in the widespread terror of overt military conflict in the region and sees different aspects of the conflict.

Gray zone operations are connected with hybrid warfare to some extent, which was well depicted by the repor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terms gray zone coercion and hybrid warfare are not



synonymous. Taipei does not list gray zone tactics and hybrid warfare unintentionally.

Unable to use these terms interchangeably, this paves the way for us to regard Taipei’s understanding of the sophisticated strategy of Beijing targeting the region (Fitton, 2016). The report described Beijing’s grand strategic structure as one that goes beyond gray zone operations; it tried to capture the mixture of gray zone tactics combined under a hybrid strategy.

Characteristic	Gray Zone Conflict	Hybrid Warfare
Level	Tactical, operational, strategic	Tactical and operational
Use of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s	Used alongside non-conventional operations	Used alongside non-conventional operations. Usually the dominant element.
Use of non-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s	Used standalone or alongside conventional operations	Used alongside conventional operations as auxiliary tactics
Protracted engagement	One of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May be protracted or short

Global and/or regional revisionist ambitions	One of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Out of scope as the concept pertains to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s
Symmetry between opponents	Used under both symmetric and asymmetric conditions	Largely used under asymmetric conditions

Table 1. Comparison between gray zone and hybrid warfare characteristics

Carment, D. and Belo, D., 2018. *War's Future: The Risks and Rewards of Grey-Zone Conflict and Hybrid Warfare*. Excerp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y zone and hybrid warfare is identified in ways hybrid warfare is a more broad and all-encompassing term, whereas the gray zone concept does not cover such a wide range (Arquilla, 2018). Plus, hybrid warfare adopts various military tools, making it more violent compared to gray zone conflicts (Mazarr, 2015). Drawing from there, the difference between gray zone and hybrid warfare in terms of kinetic centrality makes gray zone tactics subordinated to hybrid warfare.

As hybrid warfare is centered on kinetic means, gray zone

operations are to be included in the greater concept of hybrid warfare (Azad et al., 2023). Since the series of aggression can be appraised as preliminary steps for its ultimate goal of military annexation, the central focus of Beijing's aggression is relevant to kinetic means. Therefore, it has to be described gray zone tactics are adopted in a broader strategic hybrid warfare. Taipei identified that the difference and drew a picture of a strategic hybrid-gray zone structure. Political warfare is also interrelated both with hybrid strategy and gray zone tactics. And as seen, psychological operations, legal intimidation, manipulative espionage, and cyber warfare do not have many things to do with direct and open military conflict.

This implies that Taipei views that Beijing's primary goal is not military invasion, though its ultimate goal might be the one. It sees Beijing's primary objective as countering Taipei politically. One observation supporting this argument (Lee, 2023) pointed Beijing's maritime harassment conveys political messages to influence the perceptions of Taiwanese society. In other words, Taipei regards Beijing's military invasion not as an imminent threat but as an ultimate outcome of continuous preliminary aggression, combined greatly with political aspects. A well-organized report (2022) from the Hagu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stipulates:

Instead of saying that the Taiwanese people are nonchalant about China's military threat,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y in fact have been engaged in a form of political warfare against China for decades. Political warfare in the Chinese context generally means "the continuation of armed conflict by other means." It seeks to induce the adversaries to think and act in a manner that favors China's objective through such means as persuasion, subversion, intimidation, and coercion,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winning without fighting." Deterring China in this sense inherently requires a multi- or even cross-domain approach.

### **3.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Makes No Great Difference**

There had been a number of debates in Taiwan regarding the status quo and Taipei's China policies. In particular, as tensions between the Strait have been escalating, this inclination had been pacing. Furthermore, in the face of the 2024 January presidential election, partisan polarization came at its peak. And policy toward China is always a significant issue in Taiwan's presidential campaigns. Considering the current instability between Taipei and Beijing, investigating the presidential run is important in that it has a direct influence on security issues in the region.

The 2024 Taipei's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led by the two main parties;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DPP) and Kuomintang(KMT) party. They stand against each other on their China policy. DPP perceives Beijing as an adversary seeking to annex Taiwan, and if necessary, by force, whereas KMT believes that Beijing is willing to resume political negotiations and reinvigorate economic cooperation, reaffirming the 1992 Consensus (Grossman, 2023). Thus, the two parties diverge between “engagement” and “confront” with China. In fact, after President Tsai met with McCarthy and Pelosi's visit to Taiwan, Beijing increased the level of aggressive actions against Taiwan. Therefore, there exists a fear of a linkage between the DPP's win and a cross-strait war.

However, Bush (2023) denies a widespread fear that the winning of DPP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will trigger a cross-strait war. He argued that Lai, a presidential candidate of DPP, has claimed to protect the status quo. Moreover, Bush pointed a lack of PLA's war-fighting capability and contended that Beijing will resort to a low-risk approach of displaying military force but with non-military pressure and intimidation. It seems clear Beijing will ease coercive measures when KMT wins, but it is unclear if Beijing goes to a war when DPP wins.

Moreover, there was no concrete evidence that the DPP will even make it to the presidential office. Although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on February 2023 revealed that over two-thirds of respondents regarded Beijing as a serious threat, Hille (2023) confirmed that young generations, the most important voters, do not seem to lean toward one side due to the disillusionment and sense of disappointment with the DPP. Batto (2023) suggested that the most likely outcomes are either where DPP holds the balance or KMT possesses the outright majority. This implies that even when considering the DPP's win actually results in a war, in an extreme case, it is not likely to happen if the DPP cannot hold the outright majority.

Neither the DPP nor the KMT is regarded as one considering an actual war with Beijing in mind. Even though the DPP has repeated alarming phrases against Beijing and called for an active stance on security, the optimal policy coordination of the DPP is and will be the status quo protection. Similarly, the KMT has claimed a Taiwan-China engagement in order to avoid cross-strait tension and kept framing China question as a choice between war and peace. In addition, the widespread fear of DPP leading to a devastating war is overestimated for several reasons. In sum, despite the controversy between them, both parties are taking the form of avoiding war with Beijing.

As of January 13, 2024, Lai Ching-te, a candidate from the DPP, became president-elected. Lai led the election with over 40% of the votes. As delineated above, Lai has consistently argued for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quo for months. He repeated this stance in his statement right after the election and mentioned that he prefers more exchange and dialogue than conflicts, calling for peace and stability with China. After Lai's win, a released statement reaffirmed the CCP wanted peaceful reunification, even though it di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using force. Thus, this shows as well that Taiwan's presidential election would not br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ross-strait situation, despite the DPP's win.

## Beijing's Vigilance toward Domestic Sovereignty Intervention

### **1. Regional Focal Point the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 and "the Chinese Dream" Has Suggested**

Investigating Beijing's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tension and the Taiwan Strait issues has to be dated back to February 2012 on which Xi addressed a famous remark of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with then-president Hu Jintao. Few months later, visiting the exhibition "The Road to Rejuvenation," Xi addressed that the Chinese Dream is realizing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In the speech, Xi announced a roadmap for the

Chinese Dream. Xi promised to construct a prosperous society comprehensively by the tim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CP, and to achieve the status of a modern Socialist country that is rich, strong, democratic, civilized and harmonious by the time of the centenary of the foundation of the PRC.

This Major-Country Relations serves as a bedrock for Chinese diplomatic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Chinese Dream. Within its frame of the Sino-US condominium as a vital and foremost component in the region, it implies that the two states have an obligation of compliance with mutual cooperation in dealing with regional issues. What should be taken carefully is that Beijing demands Washington to respect China's region-related interests (Cha, 2014). In this regard, Beijing has tried to deliver the message that issues regarding Taiwan are domestic affairs. Thus, it is to not be interfered by external forces in the Chinese view.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ang Yi's speech on U.S.-China relations provides a more specified version of the major-country relations. He divided the major-country relations into two components; one is diplomacy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nd the other is diplomacy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unlike the two power relations, Wang Yi's remarks about diplomacy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show a firm stance. In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eijing seems not to concede its core interests. Combining these two types of diplomacy, it can be said that Beijing avoids direct military conflicts with Washington while taking an assertive stance against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Ha, 2019).

Together with this, he explicitly set out in another remarks that the Taiwan question is about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requested Washington not to stand against its efforts for peaceful reunification. Hence, by emphasizing the two power relations, Beijing has averted international attention to Taiwan away. The very framework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ggested eagerly by Beijing, centered Taiwan issues on domestic sovereignty ma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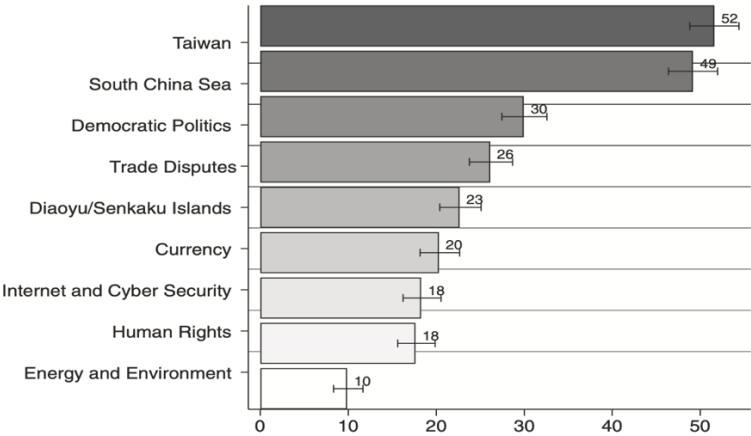
This concept has been maintained for over a decade, along with the contention of non-intervention in domestic sovereignty. In a symposium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hina's foreign relations in 2022, there were several references to the major-country relations, addressing Beijing has ac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Wang Yi's mention of "major-country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shows Beijing's constant view on Taiwan as domestic affairs. In the same year, the 20<sup>th</sup>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defined the current Taiwanese government as separatists and reiterated its willingness to resolve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issues. Maintained and repeated, views on Taiwan as domestic affairs have also

been widely shared among a number of scholars of Chinese School (Feng et al., 2019). Figure 1 visualizes survey results on expected challenges in the bilateral relations, postulating Taiwan issues are sovereignty matters.

Figure 1. Percentages of respondents, Which is a major challenge in US-China relations?

Feng, H., He, K., and Li, X. 2019. *How China Sees the World*. Excerpted.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 of the current Taiwanese



government led by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as separatists can also be seen in other documents. Words such as reunification, separatists, or “One China Two System,” again, show Beijing’s view on Taiwan as domestic affairs. In 2019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for

instance, it says:

The fight against separatists is becoming more acute. The Taiwan authorities ... refuse to recognize the 1992 *Consensus*, which embodies the one-China principle. They have gone further down the path of separatism ... and borrowing the strength of foreign influence. The “Taiwan independence” separatist forces and their actions remain the gravest immediate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biggest barrier hindering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Therefore, it can be said Beijing’s security and defense posture in response to the trilateral tension in the Taiwan Strait lies in the domestic sovereignty protection that should not be interrupted at all costs. Under the New-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 Beijing doesn’t consider Taipei’s interests while trying to avoid direct military confrontation against Washington.

## **2. Beijing’s Avoidance of an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lict**

Beijing also acknowledges the possibility of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lict. The degree to which Beijing describes its willingness and

openness of war is somewhat greater than that of Taipei.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published in 2019 says:

Meanwhile, China resolutely opposes any attempts or actions to split the country and any foreign interference to this end. ... We make no promise to renounce the use of force, and reserve the option of taking all necessary measures. This is by no means targeted at our compatriots in Taiwan, but at the interference of external forces and the very small number of "Taiwan independence" separatists and their activities. The PLA will resolutely defeat anyone attempting to separate Taiwan from China and safeguard national unity at all costs.

This hard-line stance has numerous invaluable implications. As well as an emphasis on sovereignty integrity, uses decisive expressions the document about the possibility of engagement with open military conflicts and wars. It is notable that the document not only assumes Taiwan but also brings in any external force as its adversary. Beijing's centrality on the military domain can be substantially seen in other parts. Several paragraphs show that Beijing takes the conventional military domain as the foremost means for resolving Taiwan issues:

Aiming at safeguarding national unity, China's armed forces strengthen military preparedness with emphasis on the sea. By sailing ships and flying aircraft around Taiwan, the armed forces send a stern warning to the "Taiwan independence" separatist forces.

...

Maintaining combat readiness is an important assurance of effective response to security threats and fulfillment of tasks.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CMC) and the TCs' joint operations commands perform combat readiness duties strictly, and conduct regular inspections and drills to ensure combat readiness at all times.

However, despite the acknowledgment of the possibility of war, 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that Beijing will go to war. Beijing's stance over Taiwan issues has not been changed dramatically, whereas Beijing's threat perception of the issues is deteriorated. The annual State Council Government Work Report (GWP) states in 2023:

We should implement our Party's overall policy for the new era on resolving the Taiwan question, adhere to the

one-China principle and the 1992 Consensus, and take resolute steps to oppose “Taiwan independence” and promote reunification. We should promote the peaceful development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advance the process of China’s peaceful reunification.

As we Chinese o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 are one family bound by blood, we should advance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improve the systems and policies that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our Taiwan compatriots. We should encourage people on both sides of the Strait to jointly promote Chinese culture and advance China’s rejuvenation.

Phrases indicating the preference of peaceful development and the avoidance of direct military conflict are frequently used in other official documents. The above-cited Beijing’s defense white paper also postulates that “China adheres to the principles of “peaceful reunification”, and “one-country, two systems”, promotes peaceful development of cross-Strait relations, and advances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Also, several statements of Xi are consistent with the basic stance. In 2021 speech at the General Assembly Commemorating the 100<sup>th</sup> Anniversary of the Revolution of 1911, he announced “we will adhere to the basic

policies of peaceful reunification and One Country, Two Systems, uphold the one-China principle and the 1992 Consensus, and work for the peaceful development of cross-Straits relations.” Recently 2023 speech at the first session of the 14<sup>th</sup> National People’s Congress, he repeated the stance.

Also, one report (2021) from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CICIR) stipulated that Beijing denies competition either as the conceptive core or as inevitable describing bilateral relations. Putting forward “complexity” in the bilateral relations, the report suggested a new framework, which presents rhetoric such as “constructive,” “cooperative,” “mutual respect,” “win-win,” or “non-conflict.” Furthermore, the report demanded that China-U.S. relations comply with Three Basic Lines, which inhibit hot war, cold war, and decoupling. Due to the nature of Chinese think tanks, this report fully reflects the views of the CCP. Thus, the arguments the report suggested can be seen as the same as those of Beijing for avoiding open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In the same context, during the 2021 virtual meeting between Xi and Biden, both sides reaffirmed the ne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on Taiwan (Ha and Moon, 2021). Conversations had no significant implications, repeating rhetoric such as a statement that Washington would respect the One China principle or a promise of Beijing to do its

65

best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2023 APEC summit, both sides agreed to maintain high-level military talks to prevent crises. During the meeting, Xi stuck to Beijing's position that bilateral relations should be based on "mutual respect," "peaceful," and "cooperative" coexistence" coexistence. There was no development of Taiwan issues, as it was back in 2021. In this regard, the 2023 summit is also a tentative compromise based on the common interests of preventing bilateral relations (Sohn et al., 2023) and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aiwan.

Furthermore, there is no evidence showing Beijing pursues reunification with Taiwan as an imminent objective in the near future. There is no clear marks whether the Chinese leadership considers reunification as a task that must be completed by 2049, in that under Xi, no authoritative Chinese source has explicitly linked the 2049 "national rejuvenation" with reunification to form a clear deadline (Swaine, 2021). If showing active pursuit, conflict with Washington will be inevitable. For these reasons, despite the centrality of a military domain, it cannot be said that Beijing will wage a war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2023 DoD report also reaffirmed that Beijing aims to diminish international support for Taiwan and counter Washington's activities in the Indo-Pacific, which is rather seen as part of political warfare as insisted by Taipei, not as directly related to military annexation.

Char (2022) estimated that Beijing tends to avert waging a war



against its neighbors with immediate risks, which would be the U.S. military intervention, and favors maintaining the status quo over the Strait. Another evidence of Beijing's reluctance to stand explicitly against the U.S. is in it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2019:

China resolutely opposes the wrong practices and provocative activities of the US side regarding arms sales to Taiwan, sanctions on the CMC Equipment Development Department and its leadership, illegal entry into China's territorial waters and maritime and air spaces near relevant islands and reefs, and wide-range and frequent close-in reconnaissance. However, in China-US relations, the military-to-military relationship remains the generally stable one.

Lastly, there are observations in Taiwan as well implying Beijing's avoidance of direct cross-strait armed conflict. Liang (2023) contended that Xi's political logic of Taiwan-related policies follows the principle of peaceful reunification with persuasion and engagement, and even that the reunification is of secondary importance compared to its own development. Kuan-chen Lee (2023) suggested similar implications of the CPC's Taiwan policy, alleging Beijing is expected to pursue

67

deepening and expanding cross-strait exchanges and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reunification.

### **3. Primordial Steps for Building Favorable Prelude: Why Beijing Exploits Gray Zone With Hybrid Approaches**

Paragraphs in the previous section suggest an argument that there is a low possibility Beijing is pursuing waging a war against Taiwan, using several official statements. Beijing routinely repeats the basic stance in order to show its avoidance of an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lict at least explicitly. Although not seeking an immediate war, however, a series of actions Beijing has been unfolding regarding Taiwan is enough to pose a massive threat to Taipei. Particularly these provocative measures are intense in the cross-strait maritime region.

Beijing has imposed a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security threat beyond military domains. These threats are in line with what Taipei recognizes as a gray zone hybrid threat where an adversary pursues security objectives below the threshold of war. As shown in the earlier paragraphs in the previous section, the delineation of Beijing's firm stance against and a willingness to counter Taipei and external forces is allocated an equal amount of weight, despite its avoidance of direct military conflict:

People's Armed Police Force (PAP) give greater priority to combat readiness. Efforts are made to strictly act on relevant regulations and procedures, fulfill readiness duties, conduct targeted exercises and training, and maintain standardized order, with a view to staying ready to act when required and effectively carrying out readiness (combat) duties.

People's Armed Police Force is a paramilitary organization under the Chinese Military Commission. Despite the actual top-down chain of command directly from President Xi, it takes the form of the dual command of both civil and military in accordance with its pursuit of Military-Civil Fusion(MCF) policy. The very feature of paramilitary organizations aims at deterring effective responses of the adversarial armed forces. Moreover, the dual command form prohibits one's adversary from engaging with it militarily.

The PAP serves under the shared distinct characteristic of ambiguity that a lot of definitions of gray zone coercion possess. Staying under the radar, it fervently tries to avoid the threshold of open military conflicts. Another distinct feature of gray zone coercion is a diversification of actors, beyond military stakeholders. In cases of PAP are usage of non-military agencies dampens the opponent's military response.

PRC coast guard ships and fishing vessel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 fit this description as well (Chang et al., 2015). The China Coast Guard, which was previously reported as civilian agencies, has been placed within the PAP and is thus now part of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Wuthnow, 2017: 1). Plus, Chinese infiltration of Taiwan's ADIZ, crossing the median line of the Strait, demarcating no-sail and no-fly zones, and deploying civil aircraft and balloons for intelligence gathering are categorized as gray zone coercion. These again prove that Beijing currently holds onto gray zone tactics in order to postpone open military conflicts with its expected adversaries such as the U.S.

A recent provisional guidelines announced by PLA, the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MOOTW), as well explicitly serve as additional evidence for Beijing's tendency to resort to gray zone tactics, paving the way for a legal framework for conducting non-war military operations (Siebens and Lucas, 2022). Enabling both combat and non-combat activities, the guidelines leave rooms for campaigns Chinese military implements to be classified as MOOTW, thereby externally disguising any hostile intention. Many of the current military maritime engagements are classified as below-threshold operations for national security and interests (Gaoyue and Char, 2019).

Together with considerable weight on gray zone tactics, Beijing has also emphasized elaborating hybrid characteristics in its unfolding campaigns. Beijing expands the existing fields of national interests

beyond the economy and the military, securing baselines for comprehensive involvement in multiple domains. For instance, the following paragraphs in 2019 defense report are postulating outer space and cyberspace as two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interest areas:

Outer space is a critical domain in international strategic competition. Outer space security provides strategic assurance for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interest of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China actively participates in international space cooperation, develops relevant technologies and capabilities, advances holistic management of space-based information resources, strengthens space situation awareness, safeguards space assets, and enhances the capacity to safely enter, exit and openly use outer space.

...

Cyberspace is a key area for national security,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Cyber security remains a global challenge and poses a severe threat to China. China's armed forces accelerate the building of their cyberspace capabilities, develop cyber security and defense means, and build cyber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China's international standing and its status as a major cyber country.

As shown above, diverse security areas stipulated such as outer space, cyberspace, and economic prosperity show Beijing's multifaceted purview in dealing with Taiwan issues, encompassing the mere military domain gray zone tactics are centered on. The expansion of interest areas has turned into aggressive engagements with those interest areas, resulting in the same consequence in the context of the Taiwan Strait.

In addition, the aforementioned Three Warfares (opinion, psychological, legal, and cognitive) fit this case of hybrid tactics. Since the Three Warfares can be combined with other methods of unrestricted warfare,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negotiation, diplomatic, cultural, and military efforts (Lee, 2014: 205), they have to be considered beyond the geographical landscape of maritime disputes. In this context, Beijing has implemented a wide range of hybrid tactics ranging from foreign propaganda and public opinion creation in favor of China, through legal legitimization of maritime claims, to public diplomacy focusing on foreign citizens (Tunstall, 2019).

In this chapter, I have covered three aspects Beijing has possessed so far; the perception of Taiwan issues as domestic affairs, its hard-line stance in military terms, and its conduct of gray zone tactics

with a multifaceted hybrid approach. In this regard, the evaluation must be similar to that of Taiwan to some extent. Beijing's hostility against its opponents is aligned with its position of domestic integrity. Since Taiwan is to be within its national boundaries, Beijing has to take a hard-line stance against any external force trying to dampen its territorial integrity.

Recognizing that it is domestic affairs, considering the lack(or a total absence) of binding forces that can control the affairs and a geographical limitation divided by the Strait, it is plausible to anticipate Beijing has come up with the idea of military incursion for means of coercive control. Beijing's remarks for active defense and maintenance of an Anti-Access/Area Denial(A2/AD) strategy can be explained in this terms.

With this, several activities conducted by Beijing can be explained. For instance, consistent remarks for military preparedness and incremental military buildups are the case. Provocative amphibious exercises as well as developing various ranges of missiles that cover the whole area are for preparing military annexation. The series of actions are not to be shown as just for arms race aimed at the U.S., in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se activities have been focused on the South China Sea and near shorelines rather than another rivalry theater of the East China Sea.

However, its pursuit of gray zone hybrid warfare adds complication. The mixture of gray zone and hybrid warfare has to be seen gray zone tactics adopted in a broader strategic hybrid warfare. Furthermo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should be regarded Beijing's intention reluctant to engage in an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rontation. Hence, Beijing's current strategic direction is not for an immediate war. Then, this is a prep phase for a later potential war.

Active pursuit of unrestricted warfare, so-called the Three Warfares, aforementioned such as propaganda work, intelligence espionage, and aggressive public diplomacy are appraised in this case. Plus, operations unfolded in cyberspace(in the case of content farm)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favorable conditions for Beijing to later exploit the situation. PLA's discussion of Multi-Domain Precision Warfare and the following network-information-system of systems which incorporate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other examples of Beijing's active cyberspace operations. The recent development of kinetic-kill missiles, ground-based lasers, and orbiting space robots, as well as expanding space surveillance capabilities, which can monitor objects in space within their field of view and enable counter-space actions (Department of Defense, 2022) directly shows Beijing's outer space preparation for a later potential war against Taiwan and probably the U.S. Recent mobilization of



commercial satellites for military use in the Ukraine War has inflicted Beijing to fiercely take advantage of it, whereas condemn the versatility of cyber and space corporates in the U.S. such as Starlink and Microsoft.

In sum, under its pursuit of domestic territorial integrity, Beijing wants to achieve ultimate reunification with Taiwan. However, it cannot reasonably be estimated that Beijing will wage a war considering repetitive official statements that indicate the avoidance of an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lict. Yet,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series of Beijing's movements are primordial steps for a potential war(or a favorable prelude for later annexation) in that it takes the form of a gray zone hybrid threat which exploits the opponent's weak point so as to achieve security objectives while operating below the red line. The next section will discuss why Beijing has fundamentally relied on gray zone hybrid warfare that avoids an open direct war.

#### **4. Risks of Strategic Ambiguity and Incomplete Military Modernization**

The Hague Center's report, which was quoted in a chapter covering further understanding of both gray zone and hybrid threats, provides a highly reasonable account of why Beijing resorts to gray zone tactics; Beijing's lack of capabilities to annex Taiwan and military dominance of the U.S. The account in this section and the previous section develop

similar logic to that of Hague's report.

Among other things that are related to Beijing's inclination to rely on gray zone hybrid warfare, two factors are worth investigated in this trilateral dimension; the risks of strategic ambiguity and unfinished business of military modernization. Both in terms of the macro-scope of hegemonic rivalry in the theater of Sino-US condominium and micro-scope of security competition in the trilateral relations, the presence of the U.S. poses serious setbacks to Beijing's security policies in the region. Washington has a number of leverage means to use against Beijing, which are mainly derives from its relative superiority. Even worse, incomplete modernization contributes to Beijing's relative inferiority.

Considering expected military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S. are to be developed in maritime theater, carrier strike groups will be the main battle-carrying sizable forces. Although the U.S. primacy has come to an end, its military might is still formidable that China cannot defeat. US LA-class SSN and Chinese Shang-class have no significant performance difference in numbers. However, the quality gap between their SONAR system creates is considerable. Whereas US LA-class SSNs are considered to have the world's finest SONAR tech, Chinese Shang-class SSNs have a dismal record; detected by Japan Self-Defense Force and the British Queen Elizabeth fleet. In destroyers and

cruisers, Beijing cannot be confident for assured triumph. The U.S. operates a variety of ships compared to China, and the radar and missiles mounted on each ship are also superior to China.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precision electronics, the gap in this fleet-to-air capability will be even wider.

Aircrafts show no difference. While the U.S. operates F/A-18E/Fs and F-35Cs equipped with AESA radar and LRASM AI-based hypersonic missiles, China only operates J-15 series for its carrier. Even worse, because Chinese aircraft carrier takes the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STOBAR) system, Chinese aircraft is bound to suffer from fuel loss and a decrease in the weight of their armed payloads when launched. Moreover, the U.S. Nimitz-class carrier uses the Catapult Assisted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CATOBAR) system, which enables four aircraft to take off simultaneously. This means a one-fourth ratio of aircraft take-offs, in favor of the U.S. in dog fights. In addition to this, the fact that the U.S. operates E-2C Hawkeyes whereas China uses J-18 helicopters for their AWACS system widens the gap in Max Combat Radius.

Identifying the very inferiority, Beijing has fiercely devoured progress along with its military modernization by 2050. The 2023 China military power report covers these in detail. According to the report, China has increased the number of its navy vessels by thirty ships and

manufactured several fourth- or fifth-generation fighter jets. Also, the report captured recent trials for a CATOBAR-operated Fujian aircraft carrier. Pointing the increased number of nuke arsenals, the report changed the estimated stocks of current nuclear warheads and those in 2030. Together with arms acquisition, Beijing has been pursuing improvements in logistics, defense science, weapon system research, and strategic capacities; particularly, hypersonic missiles, AI-utilization. However, Beijing's military modernization process is way far from completion. In other words, the lack of overwhelming firepower served as an inhibitor for Beijing to engage in overt military conflicts.

Beijing also shows weaknesses in war-fighting and organization-managing capabilities. The PLA highlights self-assessed shortcomings publicly. In particular, under Xi slogans such as "Two Inabilities," "Two Big Gaps," "Three Whethers," and "Five Incapables" were made and frequently used, which take issue with a quality lack of leadership and command, lack of combat experience and quality exercises, and a lack of other war-fighting or organization-managing capabilities. These slogans have been repetitive via various outlets from authoritative to non-authoritative, which demonstrates the intensity of awareness of PLA's shortcomings.

Also, China, sharing most of its borders with several countries, has been struggling from chronical conflicts with its neighboring states.

Conflicts with India has been eventually deteriorated into firing-engagement, causing multiple casualties. Around dam constructions, friction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downstream also poses a significant level of risk. The water scarcity is indeed a serious problem for China, leaving no room for plausible ease with other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Last, the instability of the Xinjiang-Uygur Autonomous Region(XUAR) counts. As seen in CPC's condemnation against U.S.' retreat from Afghanistan,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XUAR and other islamic states and prolonged grievance accumulated in XUAR can turn into the existential threat to Beijing at the time of war. In other words,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an immediate threatening impact an onshore land power can pose will force itself to struggle from its neighboring states (Mearsheimer, 2014). Moreover, the U.S. forward bases that can deploy sizable armed forces in the regional contingencies outnumber in various strong points, whereas Beijing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bases along the shoreline. Lastly, without the capacity to take full control within the First-Island Chain, Beijing has found difficult to manage its relative inferiority in maritime military preeminence.

Without accountable leverage against Washington, Beijing found it hard to pursue its national strategy regarding maritime security in the region. What makes things more complicated is Washington's

strategic ambiguity stance in the region. Since Washington's "one China policy" was enshrined in the three US-China communiques and the 1979 Taiwan Relations Act was in effect, Washington has maintained strategic ambiguity over the tension between Taipei and Beijing (Chang-Liao and Fang, 2021). Strategic ambiguity refers to the condition where the United States does not state explicitly whether it will come to Taiwan's defense in the event of an attack by the PRC (Bush, 2005).

Complying with this strategic ambiguity, Washington has provided autonomy to Taipei, while avoiding the charges of promoting Taiwan's independence. At the same time, Washington retained the poss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region, while cooperating with Beijing in other sectors. Therefore dual deterrence was possible; Washington has been able to provide security to Taipei without the risk of being entrapped in an undesirable war against Beijing. Strategic ambiguity and the following uncertainty of Washington's engagement are posing a serious restriction to Beijing.

It would not be a problem if the U.S. did not have considerable power. Yet, as mentioned above, Beijing does not possess any accountable leverage in economic, military, or alliance terms. Hence, uncertainty about whether Washington will intervene in the situation when an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lict occurs is fatal to Beijing. However, for the same reason, Beijing cannot completely abandon its

goal toward Taiwan because it is unsure of Washington's intervention. As a result, a strategy must be pursued to prevent the U.S. intervention, and the gray zone tactics fit in.

## Washington's Circumspect on Defining Security Challenges

### **1. A Key Troika in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Competition over Cooperation, but without Confrontation**

Ahead of investigating Washington's position, it is important to revisit the key troika in Washington's Asia policy establishment. Kurt Campbell,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Coordinator for the Indo-Pacific, Jake Sullivan,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Antony Blinken, the Secretary of State are this troika. Altogether, the three are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among others, so it is crucial to identify their thoughts of China in that their understandings directly influence strategies. Some sources provide insight into their thought.

It is widely held that the China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s described with the so-called "3C," referring respectively to competition, cooperation, and confrontation. An article contributed to Foreign Affairs in 2019, Campbell and Sullivan prepared shows how they think of and how they will treat China, which is

reflected in the current U.S. strategy toward China. Calling for a brand new approach to Beijing, which should definitely be estranged from that during the Cold War, Campbell and Sullivan alleged Washington has to deal with Beijing between the two pillar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Campbell and Sullivan focused on the possible coexistenc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with vigilance toward mutual exclusivity:

Going forward, China policy must be about more than the kind of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wants to have; it must also be about the kinds of interests the United States wants to secure. The steady state Washington should pursue is rightly about both: a set of conditions necessary for preventing a dangerous escalatory spiral, even as competition continues.

...

The best approach, then, will be to lead with competition, follow with offers of cooperation, and refuse to negotiate any linkages between Chinese assistance on global challenges and concessions on U.S. interests.

In the background of this premise, there was a thorough investigation of



China in its relations within and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pared with the Soviet Union. They assume a lower security instability following through a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delineate potential impacts Beijing ha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SSR. For these reasons, they concluded Washington has to pursue simultaneous function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nd to avoid the Cold War logic of existential struggle. Foremost, however, they insisted on the priority of competition over cooperation:

The best approach, then, will be to lead with competition, follow with offers of cooperation, and refuse to negotiate any linkages between Chinese assistance on global challenges and concessions on U.S. interests.

In particular, the article contended the Taiwan Strait would be one of the most conflictual areas in bilateral relations. Important to note, however, that the article maintains refusing the inevitability of conflict and explains the pathway to competition in a manageable level of instability. In their core concept, Taiwan affairs should be confined within the status quo and the imminent procedures Washington should take is to contain Beijing's autonomy in the region to a certain degree and to search for possible cooperative grounds with Beijing. The very section on

sustainable deterrence directly shows Campbell's and Sullivan's perspectives on the Taiwan issues and the maritime security affairs involving Beijing. Their approach to the military domain in the region is also well delineated in the section, which fundamentally influenced later US' integrated deterrence. Some contents worth revisited are as follow:

Effective U.S. strategy in this domain requires not just reducing the risk of unintentional conflict but also deterring intentional conflict. Beijing cannot be allowed to use the threat of force to pursue a fait accompli in territorial disputes. Yet managing this risk does not require U.S. military primacy within the region.

...

To ensure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Washington should reorient its investments away from expensive and vulnerable platforms, such as aircraft carriers, and toward cheaper asymmetric capabilities designed to discourage Chinese adventurism without spending vast sums. ... the United States should embrace long-range unmanned carrier-based strike aircraft,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guided missile submarines, and high-speed strike weapons. ...

Blinken's view of Beijing is generally in line with that of the former two. In his 2022 addres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ny of the lines indicate the same perception of Beijing and argue Washington's policy direction which shares several common grounds with Campbell and Sullivan. In addition, Blinken's recent visit to China in June 2023 focused on "competition (Sohn et al., 2023)." His remark of "compete vigorously" also showed the priority of competition over cooperation. Campbell's remark, during the teleconference, specifically represented the Troika's thoughts. Mentioning an impossibility of full cooperation, he said that Washington would not concede any of its interests in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he also emphasized the need to manage competition in order to avoid confrontation.

Based on this troika, Washington's China policy has basically pertained to "competition over cooperation, without confrontation." They share the concept of vigilance toward conflict against Beijing, while retaining the urgency for omnidirectional competition in advance of cooperation and the focus on the Taiwan Strait. Thus, Washington's avoidance of an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lict against Beijing can be

inferred. Washington's priority is not to confront Beijing militarily, but to secure its eminence in the region as much as possible and restrict Beijing multi-dimensionally. Although there have been continuous doubts about the three figures (Overholt, 2021; Kurtner, 2023), it is clear that their view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urrent Washington position.

## **2. Washington's Reserved Stance: Complex Beijing and Complicated Security Challenges**

Washington has pertained to a reserved stance on confrontation in the region. Here in this section, I suggest two reasons; Washington's perception of Beijing as complex and of changed security challenges as complicated. The first reason is in line with the account of the previous section to a certain extent. It is because Washington's China policy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troika, mainly due to a shift in its threat perception of Beijing. Washington intentionally maintains the distance from rhetoric indicating direct confrontation with Beijing.

Approximately a year later since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s remark at the ceremony for a change of INDOPACOM command, the White House announced integrated deterrence as its bedrock strategic keynote in the region. With integrated deterrence, the 2022 Indo-Pacific Strategy report is generally in line with the framework of the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verting a

direct confrontation against Beijing:

Our objective is not to change the PRC but to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which it operates, building a balance of influence in the world that is maximally favorable to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 interests and values we share. We will also seek to manage competition with the PRC responsibly. We will cooperat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seeking to work with the PRC in areas like climate change and nonproliferation. We believe it is in the interests of the region and the wider world that no country withhold progress on existential transnational issues because of bilateral differences.

In the sense of Beijing as complex counterpart, the report explains the main stance of Washington over Beij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to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favor of itself, not to engage in confrontation directly with Beijing, while it leaves room for possible cooperation.

Together with the reserved stance on a direct confrontation, the report allocated a few paragraphs to directly cover Taiwan issues. The

paragraphs as well show its reserved stance in that it stipulates that Washington will stick to coordinated trilateral resolutions, maintaining dual deterrence:

We will also work with partners inside and outside of the region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 As we do so, our approach remains consistent with our One China policy and our longstanding commitments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Three Joint Communiqués, and the Six Assurances.

Afore-delineated, Washington's resort to the One China Policy and Taiwan Relations Act shows that Washington sticks to its basic stance of strategic ambiguity, which also contributes to the explanation of Washington's circumspect over military confrontation with its counterpart. Thus, the report repeats the possible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hile at the same time it describes the Taiwan situation as complicated, thereby shows a complex approach toward the issue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released in October of the same year also gives a similar account of the comprehensive situation. The report stipulates Beijing as the only competitor, calling for

acknowledging that competitors' strategies operate across non-military domains as well as unconventional deterrence domain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repeats the intention of cooperation.

The reason Washington repeats the existing strategies on Taiwan issues and holds a reserved stance against confrontation with Beijing shares commonalities in perspectives with what Campbell and Sullivan's article showed. Since it is based on a complicated calculation, it implies Washington perceives Beijing not merely as the belligerent needed to be destroyed but as a complex counterpart. On Taiwan, the troika has shown similar moves. Blinke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reiterated there has been no change to the U.S. one China policy (Department of State, 2023)." Sullivan also emphasized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Strait, point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U.S.-China "strategic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pursuing "high-level engagement and consultations (White House, 2023)."

Secondly, together with its perception of Beijing as a complex counterpart, Washington avoids an open and direct military conflict against Beijing because it calculates the security challenges in the Strait as complicated beyond mere military ones. A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ashington's national security functions under the framework of integrated deterrence, which refers to a response to an

integrated threat. Here the term “integrated” implies the diversity of different threats and does not exclusively stand for conventional military or nuclear deterrence domains.

Lloyd Austin mentioned, during his remark in 2022, integrated deterrence and called for “a new vision of what it means to defend our nation.” He pointed dangers of advanced technologies in potential conflictual domains, including outer space and cyberspace as newly developed conflictual areas. With this speech, a new deterrence field was set; an unconventional threat. The rising recognition of unconventional threats calls for an integrated deterring posture beyond a mere military domain.

Therefore, Washington has faced an entirely new situation in which it cannot simply resort to its military might when countering various security threats, requiring a circumspect against military confrontation. Washington's current position in the region is attributed to this recognition, in that expanded threat domains each distributed along with significant weights serve as a demanding condition against unconditional military defense centrality. This keynote contribution continued to the remarks at the Shangri-La Dialogue two months later.

The Indo-Pacific Strategy diversifies threats posed by its counterpart beyond conventional deterrence domains, which also explains Washington's circumspect due to the need for intricately



integrated deterrence posture. By diversifying security threats from Beijing into several domains, it shows that Washington does not focus solely on military calculations and views the security challenges between the Strait as more complicated:

The PRC is combining its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might as it pursues a sphere of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and seeks to become the world's most influential power. ... on Taiwan and bullying of neighbor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bear much of the cost of the PRC's harmful behavior. In the process, the PRC is also undermining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s well as other principles that have brought stability and prosperity to the Indo-Pacific.

The U.S. Defense White Paper published in 2022 stipulates that Beijing's coercive and malign activities currently unfolded as gray zone tactics and that it is aggressively pursuing hybrid powers. In addition, it clarifies in countering those kinds of threats resorting to military solution has to be estranged:

Competitors now commonly seek adverse changes in the status quo using gray zone methods – coercive approaches that may fall below perceived thresholds for U.S. military action and across areas of responsibility of different parts of the U.S. Government. The PRC employs state-controlled forces, cyber and space operations, and economic coerc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

The Department will be judicious in its use of defense resources and efforts to counter competitors' coercive behaviors in gray zone operations, as traditional military tools may not always b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Lastly, the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Beijing pointed Beijing suggested the Multi-Domain Precision Warfare(MDPW) and a C4ISR network that incorporates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as a new core operational concept, which were designed to exploit U.S. military weaknesses. With this, the report said the series of Beijing's activities are carried in gray zone:

The PRC employs the CMM in gray zone operations, or

“low- intensity maritime rights protection struggles,” at a level designed to frustrate effective response by the other parties involved. The PRC employs CMM vessels to advance its disputed sovereignty claims, often amassing them in disputed areas throughout the SCS and ECS. In this manner, the CMM plays a major role in coercive activities to achieve the PRC’s political goals without fighting and these operations are part of broader Chinese military theory that sees confrontational operations short of war as an effective means of accomplishing strategic objectives.

As in line with the complicated security challenge evaluation of Taiwan issues, the recognition of Beijing’s activities as gray zone hybrid warfare serves as evidence showing Washington views Beijing is pursuing rather political goals and it is not its objective to initiate military confrontation and to annex Taiwan.

### **3. Prospects Inside the Beltway on A Low Chance of Armed Conflict**

There have been multifaceted and numerous arguments and debates over the estimation of the Strait contingency and foreign policy recommendations for Washington as the tension of Sino-US

condominium has escalated. They range from pessimistic and hawkish grounds to positive and engagement-favored grounds. Among other things, this section deals with cases that argue a low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In one report from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Gordon et al., 2023), it says the positive prospect of resolving cross-strait issues is unforeseen and the possibility of dismal power gam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ill be increasing as time goes. Pointing Taiwan's strategic importance and Washington's expected loss after the annexation, the report fervently insists that Washington needs to actively pursue effective deterrence measures in all rounds, while sustaining the current position in the Strait.

In response to this report, several experts refuted foreign policy establishment's unilateral but not contemplated approach to the issue. Werner and his colleagues (2023) argued that the aforementioned view ignored Beijing and Taipei's view not sincerely, overestimating Taiwan's strategic importance, thereby opposing any potential peaceful attempt from Beijing in accordance with the One China Policy. In addition, they warned of a serious misguided context that translates the status quo as Beijing's unilateral aggression and criticized that the recommendations suggested by the view would rather incite conflict. The debate (2023)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and aligned policy

recommendations continued to the next month.

Despite numerous disagreements, they show some commonalities with the former view in crucial terms. They do not view Beijing's military engagement as imminent threat. Although Gordon et al. allege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 with Chinese beligerence and the need of immediate deterrence of Washington, they perceives the current stage as Beijing's primordial for favorable conditions. The report as well identifies Beijing's course of action as under gray zone tactics, thereby insisting Taiwan prioritize countering the gray zone aggression. Werner as well do not expect Chinese military incurs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in that they take the possibility of a peaceful unification into account. He and his colleagues argued Washington should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peaceful unification, criticizing distorted speculation of Xi's mindset and selection bias against credible reassurance, and that current Beijing's activities cannot be seen solely as for war preparation.

Heath (2023) suggested that the ongoing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is for numerous political and military purposes. Those purposes include enhancing national prestige, solidifying basic security, securing Xi's political power, and avoiding military corruption and lethargy, none of which imply any intent to actually wage a war. Similarly, one report (Cozad et al., 2023) suggested a potential situation

where Washington and Beijing avoid war in that they have concluded Taiwan contingency will likely be highly costly in various perspectives.

Stokes (2023) suggested various purposes for Beijing's gray zone intimidation that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far from expecting immediate military conflict between Taipei, Washington, and Beijing. Stokes sees Beijing's gray zone aggression as preliminary steps for triumph in a later potential war. Particularly worth pointing, one of the main purposes, he argued, is to pressure Taiwan and increase the sense of vulnerability in the minds of Taiwanese people, while signaling its decisive position to external forces such as Washington.

Another group of experts (Lin et al., 2023) captured Beijing's various diplomatic and military measures based on complicated approaches. According to them, Beijing's diplomatic measures have shown a two-way approach, holding overall pressures on Taipei while easing some agenda. In military measures, the report says provocative activities from the 2022 exercise such as launching missiles over Taiwan and establishing exclusion zones around the island were not carried out in 2023. And several signals for Beijing's assertion of sovereignty integrity seem to be implied in many of military measures.

O'Hanlon (2022) concluded that, through a simple military modeling and path-dependent scenario analysis, the inconsistency of results in predicting the winning side inflicts serious uncertainty. This

uncertainty, he argued, will act in ways that neither Beijing nor Washington and Taipei expect a triumph, thereby implying neither side prefers an actual war in the region. Hass (2023) expected, despite the absence of any convergence around key issues and the continuity of communication without concessions, possible stability in the U.S.-China relationship in the foreseeable future. Based on alignment in expectations and the benefit of capping tensions at current levels, they set up diplomatic channels regarding strategic concerns. This shows there can be a mutual consensus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 the face of the upcoming Taiwan election.

As this section delineates, a considerable portion of experts and scholars do not fear an imminent war and expect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lower possibility of an open, direct, and overt military conflict. And also they suggest a rather complex approach in interpreting the status quo. Considering the impact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n the Beltway can wield on Washington, these views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their own path-dependent results on tensions in the Strait.

#### **4. A Change in The Office May Bring a Remarkable Difference in Trilateral Relations**

2024 is a year marked by elections worldwide. Just like Taiwan, the United States is also going to face it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However, the United States election may bring a difference in the trilateral tension, thereby causing a change in the status quo. The Democratic Party announced Biden as its candidate for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Since it is a re-election race for a sitting president, it is hard for any other significant candidate to emerge from the Democratic Party. Therefore, it would be the repeti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keynote, only with minor adjustments.

Yet, unlike the Democratic Party, the Republican Party has several candidates for the presidential race. Among others, Donald Trump and Nikki Haley are close to the Party's candidate. Definitely Trump has been leading in the Republican presidential race. An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nticipates that Trump will actually win his second term. Thus, reviewing Trump's China and Taiwan policy is important.

In one interview, Trump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Taiwanese semiconductor industry, calling for the tariff retaliation (MSNBC, 2023). Also in the same interview, he took a reservation about protecting Taiwan in case of contingency. On the other hand, in his support camp, he praised Xi that he controls 1.4 billion people with an iron hand (CNN, 2023). If Trump wins the election the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ill be deteriorated as well as there is a high chance to trade off Taiwan (Han, 2023).



Haley left a good impression on voters, particularly among moderate conservatives by resolving the Charleston Church shooting incident in 2015 at the time of a governor of South Carolina. Also, she was supported by the Americans For Prosperity, a conservative political advocacy group affiliated with the Kochs. Even, according to a recent poll, Haley has slashed Trump's lead in New Hampshire with nearly two weeks to go until the national primary (The Hill, 2024). Amid her ris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Haley is hawkish in foreign policy as shown in the case where she took the lead in terminating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with Ira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Moreover, she has declared that she would implement a hard-line policy against China when becoming president, criticizing China "as an enemy." The only difference with Trump's foreign policy stance is with Russia, suggesting that whoever the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is, in turn, could adversely affect tensions in the Strait.

In sum, if Biden wins the election, there would be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ross-strait situation. On the other hand, if any of the promising Republican candidates wins the election, there would be a high likelihood of a negative effect on the trilateral tens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generally unpredictable, and even if Biden fails

to win re-election, the possibility that the aforementioned Republican candidates will have a different policy stance toward China than what they are currently seen cannot be ignored.

## Conclusion

Throughout the paper, I have covered each perspective of Taipei, Beijing, and Washington, thereby suggesting implications on how to view the current Strait issue. In so doing, a dynamic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ose three perspectives had created was captured.

Taipei perceives a series of Chinese aggression as gray zone hybrid threats. Particularly, from politicians to the ruling party, the opposition party, and even military officials, Taipei has stipulated Chinese threat and gray zone and hybrid warfare in public several times. Attributed mainly to the characteristics of both gray zone and hybrid warfare concepts, many sources from Taiwan indicate that Chinese aggression is designed to support and facilitate its ultimate goal of annexation. In addition, Taipei's account of Beijing's political warfare is also in line with its anticipation. Altogether, Taipei does not see Beijing's military invasion as an imminent threat. Rather, it sees a military invasion as an ultimate outcome of continuous preliminary

aggression, combined greatly with political purposes. Furthermore, the upcoming 2024 presidential election would make no great difference on the status quo, in that both parties tries to avoid direct military conflicts.

Xi Jinping's The Chinese Dream and the Following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 has insisted that the Taiwan issue is about domestic affairs, thereby demanding Washington not interfere in its internal affairs. With this claim, several documents show Beijing's hard stance against the issue and also leave room for overt military conflicts. However, no concrete evidence has appeared to suggest an imminent war. A number of authoritative and semi-authoritative sources have expressed Beijing's resort to peaceful measures and that the basic stance has not changed. Yet,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activities Beijing has been unfolding pose a massive threat to Taipei, which can be seen as what Taipei perceives as gray zone hybrid threats.

This Beijing's contradictory moves are due to the strategic ambiguity Washington has maintained and an incomplete business of military modernization. Without any reliable leverage against Washington in every term, Beijing does not possess significant relative superiority when waging a war.

Moreover, since Beijing cannot be certain of Washington's intervention in the case of a war, it works in a way that Beijing pursues its strategic objectives while preventing the U.S. intervention; gray zone hybrid

tactics fit in. Altogether, based on vigilance toward domestic sovereignty intervention, Beijing is building favorable conditions for later strategic objectives in a longer-term perspective.

Washington believes that Beijing is a complex counterpart, rather than a belligerent adversary to be defeated. Strongly denying conflicts, Washington's China Policy is within the framework of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While retaining an omnidirectional competition in advance of cooperation in the Strait, Washington avoids rhetoric indicating direct confrontation with Beijing. Several official sources show a reserved stance against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In addition, as Washington perceives security challenges to become diverse and multifaceted, threats Beijing has been posing are seen as multi-dimensional and complicated. Therefore, Washington cannot simply resort to military solutions. Moreover, as in line with the complicated security challenge evaluation of Taiwan issues, the recognition of Beijing's activities as gray zone hybrid warfare serves as evidence showing Washington views Beijing is pursuing rather political goals and it is not its objective to initiate military confrontation and to annex Taiwan.

Lastly, considerable amounts of voices inside the Beltway do not fear an imminent war and expect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lower possibility of an open, direct, and overt military conflict. And also

they suggest a rather complex approach in interpreting the status quo. Considering the impact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n the Beltway can wield on Washington, these views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their own path-dependent results on tensions in the Strait.

Taipei, Beijing, and Washington all have inclinations to avoid a direct and overt armed conflict with each other. Also, although the reasons and intentions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all three parties do not consider a cross-strait war as imminent. In deciding whether open armed conflicts as not imminent, perceptions of and backgrounds of gray zone hybrid threat served a crucial role. Most importantly, several sources show that all of the three favor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quo. However, as shown throughout the whole paper, neither party denies the possibility of war nor the significance of the military domain. And it is worth noting that the status quo is essentially conflictual. The paper captured that, despite the conflictual feature, there have been several sources showing the three parties's avoidance of open and direct armed conflict and the perceptions of a war as not imminent.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Taiwan Strait situation should be perceived with a lower possibility of an open, direct, and overt military conflict than with a mere pessimistic fatalism of military conflict.

## References

- Altman, D., 2015. *Red Lines and Faits Accomplis in Interstate Coercion and Crisis*. Ph. 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 2018. Advancing without Attacking: The Strategic Game around the Use of Force. *Security Studies*, [e-journal] 27 (1), Available through: Taylor & Francis database [Accessed November 2023].
- Arquilla, J., 2018. Perils of the Gray Zone: Paradigms Lost, Paradoxes Regained. *PRISM*, [e-journal] 7 (3), Available through: JSTOR database [Accessed November 2023].
- Azad, T. M., Haider, M. W. and Sadiq, M., 2023. Understanding Gray Zone Warfare from Multiple Perspectives. *World Affairs*, [e-journal] 186 (1), Available through: Sage Journals [Accessed November 2023].
- Brands, H., 2016. *Paradoxes of the Gray Zone*. [online] Philadelphia, P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vailable at: <  
<https://www.fpri.org/article/2016/02/paradoxes-gray-zone/>> [Accessed November 2023].
- Bush, R. C., 2006. *Untying the Knot: Making Peace in the Taiwan Strait*.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 2023. Explaining Taiwan's 2024 presidential election. *Brookings Blog*, December 18. Available at:

< <https://www.brookings.edu/articles/explaining-taiwans-2024-presidential-election/>> [Accessed December 2023].

Campbell, K. M. and Sullivan, J., 2019.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 *Foreign Affairs*, [e-journal] 98 (5),

Available through: JSTOR database [Accessed December 2023].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22. *Analyzing th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Press release, 27 October 2022.

Cha, C. H., 2014. An Interpretation on China's Proposal of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ontents, Contexts, and Assessment. *Korea Political Science Review*, [e-journal] 48 (4), Available through: KCI database [Accessed November 2023].

Chang, A., FitzGerald, B., and Jackson, V., 2015. Shades of Gray: Technology, Strategic Competition, and Stability in Maritime Asia. [pdf] Washington D. 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Available at: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shades-of-gray-technology-strategic-competition-and-stability-in-maritime-asia>> [Accessed November 2023].

Char, J., 2022. Understanding China's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online]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22/06/understanding-chinas-military-operations-other-than-war/>>[Accessed November 2023].

CICIR, 2021. *Mutual Respect, Equality, Mutual Benefit and Peaceful Coexistence – Exploring a new framework amid complexity for China-US relations*.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CSIS, 2023. Analyzing China's Escalation after Taiwan President Tsai's Transit through the United States. [pdf]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vailable at: < <https://www.csis.org/analysis/analyzing-chinas-escalation-after-taiwan-president-tsais-transit-through-united-states> > [Accessed December 2023].

CSIS, 2023. *Previewing Taiwan's 2024 Presidential Election*. [video] December 5. Available at: <<https://www.csis.org/events/previewing-taiwans-2024-presidential-election>> [Accessed December 2023].

Davis, E., 2023. Nikki Haley says she views China 'as an enemy' in pointed rebuke. *The CNN* [online] Available at: <<https://edition.cnn.com/2023/09/10/politics/nikki-haley-china-cnntv/index.html>> [Accessed January 2024].

Department of Defense, 2021. *Secretary of Defense Remarks for the U.S. INDOPACOM Change of Command*. Press release, 30 April 2021.

-----, 2021. *Remarks at the Shangri-La Dialogue by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Press release, 11 June



2021.

-----, 2022.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Defense.

-----,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Defense

-----, 2023.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National Ethnic Affairs Commission, 2012. *Achieving Rejuvenation Is the Dream of the Chinese People*. Press release, 29 November 2012.

Department of State, 2022.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ss release, 26 May 2022.

-----, 2023. *Deputy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Coordinator for Indo-Pacific Affairs Kurt Campbell and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aniel J. Kritenbrink On the Secretary's Upcoming Travel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Press release, June 14 2023.

-----, 2023. *Secretary Blinken's Visit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Press release, 19 June 2023.

Echevarria, A. J., 2015. How Should We Think about “Gray-Zone” Wars?, *Military Strategy Magazine*, [online] Available at: <https://www.militarystrategymagazine.com/article/should-we-think-about-gray-zone-wars/> [Accessed August 2023].

Embassy of PRC in Malaysia, 2021. *President Xi Had a Virtual Meeting with US President Joe Biden*. Press release, November 16.

Feng, H., He, K., and Li, X. 2019. *How China Sees the World*. Singapore: Palgrave McMillan.

Fitton, O., 2016. Cyber Operations and Gray zones: Challenges for NATO. *Connections*, [e-journal] 15 (2), Available through: JSTOR database [Accessed November 2023].

Fuxian, Y. et al, 2023. How Bad Is China’s Economy? [online] Project Syndicate. Available at: <https://www.project-syndicate.org/onpoint/how-bad-is-china-s-economy> [Accessed December 2023].

Gaoyue, F. and Char, J., 2019. *Introduction to China’s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pdf] Singapor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vailable at: [https://www.rsis.edu.sg/wpcontent/uploads/2019/02/PR190225\\_Introduction-to-Chinas-Military-Operations-Other-than-War.pdf](https://www.rsis.edu.sg/wpcontent/uploads/2019/02/PR190225_Introduction-to-Chinas-Military-Operations-Other-than-War.pdf) > [Accessed November 2023].

- Gordon, S. M., Mullen, M. G., Sacks, D. et al., 2023. *U.S.-Taiwan Relations in a New Era – Responding to a More Assertive China*. [onlin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vailable at:  
<[https://www.cfr.org/task-force-report/us-taiwan-relations-in-a-new-era?gclid=Cj0KCQjw8NilBhDOARIsAHzpbLDiW9MoudR13Zx1Gpn\\_PMP1c2sRChpqenPYicdg96aCdasuC8ivxWgaAiUQEALw\\_wcB](https://www.cfr.org/task-force-report/us-taiwan-relations-in-a-new-era?gclid=Cj0KCQjw8NilBhDOARIsAHzpbLDiW9MoudR13Zx1Gpn_PMP1c2sRChpqenPYicdg96aCdasuC8ivxWgaAiUQEALw_wcB)> [Accessed December 2023].
- Green, M., et al., 2017. *Countering Coercion in Maritime Asia*. [pdf]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Available at: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170505\\_GreenM\\_CounteringCoercionAsia\\_Web.pdf](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170505_GreenM_CounteringCoercionAsia_Web.pdf)> [Accessed August 2023].
- Ha, Y. S., 2019. *World Politics of Love: War and Peace*. Paju-si: Hanul Academy.
- Ha, Y. S., and Moon, Y. I., 2021. *How to Read U.S.-China Summit: U.S.’ “Competition” Vs. China’s “Complexity.”* EAI Issue Briefing. Seoul: East Asia Institute.
- Han, Y. H., 2023. Trump will be more dangerous than the Taiwan Strait in 2024? *ThinkChina*, [online] December 8. Available at:  
<<https://www.thinkchina.sg/trump-will-be-more-dangerous-taiwan-strait-2024>> [Accessed January 2024].

*Has China Peaked? A Debate*, 2023. [online broadcasting] Foreign Policy, FP Live, 14 July 2023.

Hass, R., 2023. Is progress possible when Biden and Xi meet? *Brookings Blog*, October 23.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edu/articles/is-progress-possible-when-biden-and-xi-meet/>> [Accessed December 2023].

Heath, T. R., 2023. Why Is China Strengthening Its Military? It's Not All About War. *The RAND Blog*, March 24. Available at: <<https://www.rand.org/pubs/commentary/2023/03/why-is-china-strengthening-its-military-its-not-all.html>> [Accessed December 2023].

Hoffman, F. G., 2016. *The Contemporary Spectrum of Conflict: Protracted, Gray Zone, Ambiguous, and Hybrid Modes of War*. [online] The Heritage Foundation.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org/sites/default/files/2019-10/2016\\_IndexOfUSMilitaryStrength\\_The%20Contemporary%20Spectrum%20of%20Conflict\\_Protracted%20Gray%20Zone%20Ambiguous%20and%20Hybrid%20Modes%20of%20War.pdf](https://www.heritage.org/sites/default/files/2019-10/2016_IndexOfUSMilitaryStrength_The%20Contemporary%20Spectrum%20of%20Conflict_Protracted%20Gray%20Zone%20Ambiguous%20and%20Hybrid%20Modes%20of%20War.pdf)> [Accessed August 2023].

Huang, Y. C., 2023. The Officer Review, Military Order of the World Wars, [pdf] Available at: <<https://moww.org/wp-content/uploads/2023/06/Officer->

- [Review July-August-2023-New-web-edition2.pdf](#)> [Accessed November 2023].
- Huaxia, 2021. Xi, Biden pledge to steer China-U.S. relations back on right track. *Xinhua News Network*, [online] November 16. Available at:<[http://www.news.cn/english/2021-11/16/c\\_1310315008.htm](http://www.news.cn/english/2021-11/16/c_1310315008.htm)> [Accessed January 2024].
- , 2022. Eight major achievements of China's major-country diplomacy in 2022: FM. *Xinhua News Network*, [online] 25 December 2023. Available at: <<https://english.news.cn/20221225/369d9b2a7e244ac7bffc7dd651db3402/c.html>> [Accessed November 2023].
- Hwang, W. J., 2021. The Strategy of Revising Status Quo in the Gray Zone: Salami Tactics and Fait Accompli.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e-journal]. 77 (2), Available through: Dbpia database [Accessed August 2023].
- Lee, S., 2014. China's 'Three Warfares': Origins, Applications, and Organiza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e-journal] 37 (2), Available through: Taylor & Francis database [Accessed November 2023].
- , 2022. *Strengthening Taiwan's integrated deterrence posture: Challenges and Solutions*. [online] The Hagu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 Lee, J., 2023. The Legal (Warfare) Implications of China's Naval Blockade of Taiwan,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 [online] Available at: <<https://indsr.org.tw/en/respublicationcon?uid=18&resid=1960&pid=3988>> [Accessed January 2024].
- Lee, K., 2023.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the CCP's Discourse on Taiwan from the Press Releases of the Taiwan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line]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 Available at: <<https://indsr.org.tw/en/respublicationcon?uid=16&resid=1939&pid=3735&typeid=3>> [Accessed January 2024].
- Liang, S., 2023. *What direction for resolving Taiwan question in Xi era?* [online]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 Available at: <<https://indsr.org.tw/en/respublicationcon?uid=16&resid=1939&pid=3734&typeid=3>> [Accessed January 2024].
- Mazarr, M. J., 2015. *Mastering the Gray Zone: Understanding a Changing Era of Conflict* [pdf] Available at: <<https://press.armywarcollege.edu/cgi/viewcontent.cgi?article=1427&context=monographs>> [Accessed August 2023].
- Mearsheimer, J. J., 2014.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sup>nd</sup>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Exploring the Path of Major-Country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Press release, 27 June 201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R.O.C., 2023. *ROC National Defense Report 2023*. Taipei: MNDROC Office of the President ROC, 2022. Presidential Office Thanks US for announcing 5<sup>th</sup> military sale to Taiwan this year. Press release, 3 September 2023.

MSNBC, 2023. *Trump says Taiwan 'took our business away,'* Morning Joe. [video] July 2023. Available at:

<<https://www.msnbc.com/morning-joe/watch/trump-says-taiwan-took-our-business-away-188614213513>> [Accessed January 2024].

Nazzaro, M., 2024. Haley cuts Trump lead to 7 points in New Hampshire: Survey. *The Hill* [online] Available at:

<<https://thehill.com/homenews/campaign/4397082-haley-cuts-trump-lead-in-new-hampshire-survey/>> [Accessed January 2024].

Office of the President, ROC, 2023. *President Tsai Attends Opening of 2023 Taipei Security Dialogue*. Press release, 8 November 2023.

O'Hanlon, M., 2022. *Can China Take Taiwan? Why no one really knows*. [pdf] Brookings Institute. Available at: <<https://www.brookings>

edu/articles/can-china-take-taiwan-why-no-one-really-knows/>  
[Accessed December 2023].

-----, 2022. Integrated Deterrence: An excuse to spend less on defense? *The Hill*, [online] 15 November. Available at: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3732302-integrated-deterrence-an-excuse-to-spend-less-on-defense/>>  
[Accessed November 2023].

RAND Corporation, 2023. *Gaining Victory in Systems Warfare – China’s Perspective on the U.S.-China Military Balance*. [online] RAND Corporation. Available at: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535-1.html](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535-1.html)>  
> [December 2023].

-----, 2023.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Will Clarify Taiwan’s China Policy. The RAND Blog, May 19. Available at:  
<<https://www.rand.org/pubs/commentary/2023/05/upcoming-presidential-election-will-clarify-taiwans.html>>  
[Accessed January 2024].

Shepard, W., 2020. How China’s Belt And Road Became A ‘Global Trail of Trouble.’ *Forbes*, [online] 29 January 2020. Available at:  
<<https://www.forbes.com/sites/wadeshepard/2020/01/29/how-chinas-belt-and-road-became-a-global-trail-of-trouble/?sh=6f7cc5a8443d>> [Accessed December 2023].



- Shu, H., 2024. *反制中共 A2/AD : 美國在印太區域的 戰略部署*. [online] Institute 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 Available at: <<https://indsr.org.tw/respublicationcon?uid=16&resid=2989&pid=5287&typeid=3>> [Accessed January 2024].
- Siebens, J. and Lucas, R., 2022.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in China's Foreign Policy*. [pdf] Washington D. C.:The Henry L. Stimson Center. Available at: <<https://www.stimson.org/2022/military-operations-other-than-war-and-chinas-foreign-policy/>> [Accessed November 2023].
- Sohn, Y., et al. 2023. *Between 'Managed Competition' and 'Securing Development Rights': 2023 APEC U.S.-China Summit Seeking Cooperation*. Special report on APEC U.S.-China Summit. Seoul: East Asia Institute.
- Stokes, J., 2023. *Resisting China's Gray Zone Military Pressure on Taiwan*. [onlin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Center, 2023. *SIPRI*. [online] Available at: <<https://www.sipri.org/>> [Accessed December 2023].
- Swaine, M. D., 2021. Recent Chinese Views on the Taiwan Issue, *Chinese Leadership Monitor*, [online] Available at: <<https://www.prcleader.org/post/recent-chinese-views-on-the-taiwan-issuedownload>> [Accessed December 2023].

The Brookings Institute, 2013. Wang Yi: Toward a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line] The Brookings. Speech translated. Available at:<<https://www.brookings.edu/articles/wang-yi-toward-a-new-model-of-major-country-relations-between-china-and-the-united-states/>> [Accessed November 2023].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3. *The Debate on US Strategy in Taiwan-China Relations*, Deep Dish on Global Affairs Podcast. [podcast] July 2023. Available at: <<https://globalaffairs.org/commentary-and-analysis/podcasts/debate-us-strategy-taiwan-china-relations>> [Accessed December 2023].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2021. *Full text of President Xi's speech at meeting marking 1911 Revolution*. Press release, 9 October 2021.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2019.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Beijing: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2023. Speech at the first session of the 14<sup>th</sup> NPC. *Xinhua News Network*, [online] 13 March. Available at: <[http://english.scio.gov.cn/m/topnews/2023-03/15/content\\_85168965.htm](http://english.scio.gov.cn/m/topnews/2023-03/15/content_85168965.htm)> [Accessed December 2023].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Report on*

*the Work of the Government*. Beijing: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White House, 2022.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The White House.

-----,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 C.: The White House.

-----, 2023 *Readout of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Meeting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buro Member, Director of the Office of the Foreign Affairs Commission,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Press release, September 17.

Tunstall, A., 2019. China's Use of Hybrid Tactics in the Maritime Domain. [online] scholastic document submitted to the Canadian Forces College. Available at:  
<<https://www.cfc.forces.gc.ca/259/290/22/305/Tunstall.pdf>>  
[Accessed December 2023].

United States Navy, 2023. *America's Nav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navy.mil/>> [Accessed December 2023].

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s Command, 2015. *U.S. Special Operations Command White Paper: The Gray Zone*. Florida: MacDill Air Force Base, Headquarters of U.S. SOCOM

Werner, J., Swaine, M. D., and Park, J., 2023. *How a reckless report*

*could increase the chance of a crisis with China.* [online] (29 June 2023) Available at: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3/06/29/how-a-reckless-report-could-increase-the-chance-of-a-crisis-with-china/>> [Accessed December 2023].

Wingfield-Hayes, R., 2024. William Lai: Taiwan just chose a president China loathes. What now? *BBC News*, [online] January 14. Available at: <<https://www.bbc.com/news/world-asia-67920530>> [Accessed January 2024].

Wolf, Z. B., 2023. Biden on China vs. Trump on China. *The CNN*, [online] Available at: <<https://edition.cnn.com/2023/11/14/politics/biden-trump-china-what-matters/index.html>> [Accessed January 2024].

Wuthnow, J., 2020. *China's Other Army: The People's Armed Police in an Era of Reform*. Independently published.

Yu shenfang, 2012. 楊潔篪就習近平訪美向中方媒体作總結吹風. *Xinhua News Network*, [online] 19 February. Available at: <[http://www.xinhuanet.com/world/2012-02/19/c\\_111542269.htm](http://www.xinhuanet.com/world/2012-02/19/c_111542269.htm)> [Accessed November 2023]

.

# 임진왜란 시기 조선 도자기 기술의 일본전파: 한국과 일본의 두 시각

규슈 도자기 문화관

조현희  
서울대학교

## 서론: 임진시기 이전의 도자 기술 전파

산업혁명 이전 시기 도자기는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핵심적인 교류물품이자 나아가 동서문화교류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이다. 과거 도자기는 현재 수공업에 불과한 상품적 가치와는 달리 동아시아 예술사나 문화사, 정치경제사의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는 문명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국의 왕조 교체나 임진왜란과 같은 국가 간 전쟁 등 정치적 사건의 변화는 동아시아 도자산업의 발전사와 이후 도자 무역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16세기 도자 무역에서 대부분 수출되는 도자는 청화백자와 같이 고급의 기술과 원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생산체계를 갖추야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자기 기술이란 그 이전 단계의 도자와 다르게 연료와 소성 기술 그리고 이를 위한 가

마 구조에 대한 기술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첨단기술이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 획득은 한 세기 내에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16세기까지는 중국과 조선만이 가지고 있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유럽 국가들이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근대 시기의 최첨단 기술집약재였다(김유정, 2017, 3).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에 동아시아 도자산업 구조는 변화한다. 후발국이었던 일본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등장하여 유럽까지 무역도자를 수출하게 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자기 기술을 단시간에 습득한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당시 도자기의 도제식으로 전수되는 기술 이전의 특성을 고려하자면 기술자 이동을 통한 직접적 기술 이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도자기 전쟁’으로 불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출전한 일본 다이묘들이 조선 도공들을 강제로 잡아간 사건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피랍된 조선 도공들이 일본에 자기 기술을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임란시기 조선의 자기 기술 도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양국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도자기의 과학기술성

도자기(陶瓷器)라는 말은 도기와 자기를 함께 묶어 부르는 말이다. 엄밀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보통 토기, 도기, 석기, 자기의 네 단계에서 토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물들을 도자라고 하고, 마지막 단계를 자기라고 한다. 네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은 흙과 굽는 온도라고 할 수 있는데, 1,000℃ 이상에서 구워지는 것은 도기(pottery), 1,200℃ 이상에서 구워지는 것을 석기(stone ware), 1,300℃ 이상에서 구워지는 것을 자기(porcelain)라고 한다. 또한 도기나 석기는 주로 점토인 반면, 자기는 고령토라는 태토로 이루어져 있다. 도기가 자기보다 덜 단단하다. 만약 도기를 자기 굽는 가마 속 온도에 넣으면 까맣게 타고 깨져버린다. 따라서, 높은 열을 견디면서 투명한 색의 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질백자보다 더 질 좋은 백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먼저 새로운 첨단 원료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원료인 백토에 혼합될 점토와의 배합이 가마 안에서 어떠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산된 실험을 거쳐야 높은 온도에서 백자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그 지역 토양에서 발견된 원료를 가지고 화학적 계산과 반복된 연구실험을 통해 과학지식의 발견과 과학 기술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특히 도자기의 과학기술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소성 기술에 있다. 자기 단계에서는 1,300℃ 이상의 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연소기술과 가마기술, 냉각방법 등의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마의 구조와 소성 시 가마 안의 화학적 실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기 단계까지는 자국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수공업 기술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자기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과학, 즉 첨단기술의 보유와 기술집약재의 생산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영역의 차원인 것이

다.

## 임란시기 이전 중국 도자의 모방 기술과 직접적 기술 전수

임진왜란 이전까지 한자문화권에서 일본 도자 산업은 후발주자에 불과했다. 17세기 이전까지 일본은 일생생활에 필요한 도기를 만드는 전통가마는 존재했지만, 중국과 조선이 가진 높은 소성온도로 굽는 기술과 고령토는 없었다. 일본 도기에서 드러난 중국도자 모방의 한계는 외형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정도였다. 중국으로부터 직접적 기술 유입 없이 중국 도자기 수입으로 청자와 백자를 재현, 모방이 장식이나 형태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기, 도기 석기까지 단계는 17세기 이전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자기의 경우에는 중국만이 그 재료와 소성법을 알고 있었다(미스기 다카토시, 2011, 11). 세계 최초로 유약을 바른 도기는 중국에서 실행되었고, 높은 온도에 굽는 도자기에 사용되는 유약인 회유도 중국에서 시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가마의 구조에서 중국의 원류로 보이는 요소의 발견을 통해 초기 중국의 연유도기와 같은 유약 기술들이 조선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당시 고려는 태토의 강도나 유색과 같은 부분에서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했다. 원나라와 명나라로부터 조선에 중국 도자가 유입된 이후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조선 도자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원료와 기술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백자와 청자와 같은 자기는 경덕진 인근 고령산에서 발견된 고령토 즉, 내화도가 높은 백토라는 원료에 점력인 높은 백점토를 혼합함으로써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좋은 원료와 혼합기술을 먼저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918-1392) 시기 제작된 고려청자는 중국의 모방 기술 수준을 넘어 고려화가 되는 발전 과정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나타난 조선백자를 보면 한층 더 기술 진보가 일어난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청자와 백자의 소성온도에 있다. 고려시대 청자가 1200 전후인 것과 달리 백자는 1250℃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더 높은 내화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시기 고려와 달리 일본도자는 고려 도자와 발전 격차를 보이게 되는 데, 그 차이는 모방 기술 수준에 그쳐 있었다는 데서 드러난다. 일본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85-1333)의 도기를 보면 중국도자의 모방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모방 기술적 한계가 섬세한 제작기술 측면에서 현저히 나타난다. 그 중 출토된 일본도자 세토요를 보면, 남송(南宋, 1127-1279)과 원대(元代, 1271-1368) 경덕진 청백자 매병과 흡사한 모습이지만 고급자기의 형태가 아니라 중국 기형만 유사할 뿐 유약이나 소성온도, 태도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방병선, 2018, 230). 일본의 경우 고급 자기는 중국제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것이기도 했다고 보기도 한다(방병선, 2018, 230). <표1>을 보면 중국 송대 도자와 이를 모방한 일본 세토요이다. 그 옆에는 일본이 중국 도자의 대체로 수입했던 고려도자의 모습이다.

〈표1〉

		
<p>청자환이 첩화모란문병, 용천요, 원 14세기 높이 26cm, 국립중앙박물관</p>	<p>흑유인화문환이화병, 세토요, 14세기, 높이 22.5cm, 아이치현도자미술관</p>	<p>청자양이병, 고려 시대, 높이 24.5cm, 입지름 9.4츠, 국립중앙박물관</p>

## 17세기 이후 일본의 도자 수출의 성공

임진왜란 이전까지도 한자문화권에서 일본 도자 산업은 후발주자에 불과했다. 17세기 이전까지 일본은 일생생활에 필요한 도기를 만드는 전통가마는 존재했지만, 중국과 조선이 가진 높은 소성온도로 굽는 기술과 고령토는 없었다. 일본 도기에서 드러난 중국도자 모방의 한계는 외형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정도였다. 중국으로부터 직접적 기술 유입 없이 중국 도자기 수입으로 청자와 백자를 재현, 모방이

장식이나 형태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16세기에 가장 먼저 도자기 산업의 세계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만 명-청교체 시기 쇠국정책으로 인해 수출용 도자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동인도 회사의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때 동인도 회사는 일본의 백자 생산 사실을 알고 중국산 자기의 대용품으로 일본 백자를 선택하게 된다(전충진, 2001, 84-84). 이 계기로 일본에서는 백자 생산에 탄력을 얻게 되고 유럽의 기항지를 나가사키 앞의 ‘데지마’라는 인공 섬을 만든다. 이때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공식 수출이 이마리항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일본산 도자기를 ‘이마리 자기’라고 부른다(와타나베 요시로, 2013, 243-246).

17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자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국 도자의 모방 수준도 떨어졌던 일본이 중국의 차선책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백자의 독창성 때문이 아니었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에게 중국의 ‘Kraak war’이라는 청화 백자의 샘플과 똑같은 것을 주문했다는 것을 미루어봤을 때 일본의 백자 기술의 보유 자체가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 중국 도자의 모방 수준에 그쳐 있던 일본은 임란시기 데려온 조선 도공들을 통해 자기 기술을 체득하고 대량생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

### 한국의 시각: 임란시기 조선의 도자 기술이전의 모습

한국의 경우, 동시대 한일 간의 도자기라는 유물을 비교하는 형태로 기술이전을 보기 위해 한일공동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지만 조선 도공의 인물 자체나 이들이 일본 도자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애국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들이 다수를 차지했었다. 도예

사적으로 유물을 통한 조선 도공들의 기술 전파를 분석하고 있는 방병선의 연구들을 제외하면, 일본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임란시기 끌려간 조선도공들의 납치 경위와 계보를 정리하는 고고학적, 역사적 바탕에서 분석하고 있다. 조선 도공들에 초점을 두고, 임진왜란 시기를 기점으로 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규모, 구성, 일본에서의 정착지, 회귀 여부, 적응 과정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반면, 김유정(2017) 연구는 첨단 기술이 이동하는 정치경제학적 동기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소비 욕구를 넘어 그 행위 자체가 가지는 정치, 사회,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도자산업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제도문화적 기반과 물질적 기반까지의 다층적인 면을 포착해야 한다고 한다. 대개, 한정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자기’라는 당시 최첨단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조선 도공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들에 맞추어 우회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 도공들이 이주 전 우월한 자기 기술이 있었다는 여부와 일본 정착 과정, 정착 후 생업용 도자 활동을 넘어 자기 기술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제도적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경향을 가진다.

## 조선 도공의 기술 전파와 그 조건

임진왜란 시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피로인들은 자기 원료인 고령토(高靈土)’라 하는 백토(白土)와 함께 주로 규슈(九州) 사가현 가라츠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이후 조선 도공들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나뉘어 정착한다. 야마구치현의 하기(萩)를 제외하면 다이묘들의 출신지가 많은 규슈 지역이 조선 도공의 정착지가 되는 경우다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방병선, 2003, 32). 그 중 조선 도공들에 의해 지어진 가마를 기준으로 일본 전통 도자가 발전되었다고 보는 지역은 규슈(九州), 사쓰마(薩摩), 하기(萩), 아가노(上野), 아리타(有田), 히라도, 미카와치, 하사미, 이마리, 가라쓰(唐津), 다카도리(高取) 등으로 대부분 규슈 일대의 정착지와 일치한다.

조선 도공들이 가마를 개요했던 시기까지만해도 일본의 도자기 제작기술은 1000도 정도에서 소성되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조선은 이미 1200도 이상에서 소성되는 도자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들도 이러한 자기 기술과 같은 우월한 도자 기술을 보유했는가? 방병선 연구에서는 동시대 양국의 유물비교를 통한 근거를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 도공들이 당시 일본 도공보다 훨씬 우월한 도자 기술을 소지했다는 근거로 자기 기술에 핵심인 고온소성기술에 필요한 도공 도구들이나 구조, 형식 등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방병선, 2017). 구체적으로 16세기 초반 조선계 가마에서 도자기의 기형, 수직굽과 오목굽의 형식, 번조시 굽받침은 자기 수준의 기술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제 방식으로 전수되는 도자기 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 도공들에 대한 사회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아리타 지역에서는 1637년 일본 도공들을 배제하고 조선 도공들을 중심으로 한 13개 가마

체제로 재편된다(방병선 2003, 268). 피납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에도 조선 도공의 도자기 기술의 우월성과 자기 생산의 내재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배경이 크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대개 국내 연구에서는 조선 도공과 일본 전통 가마들의 원류를 연결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간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서 5, 6만명에 이르는 조선 도공들이 정착한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요업지를 대략 7개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팔산의 다까도리 가마, 존해의 고다가마, 가라쓰에 있는 도칠의 나카사토 가마, 고려 할머니와 거관의 미카와치 가마, 이라타와 이마리의 이삼평, 이작광과 이경 형제의 후카가와 가마, 심수관, 박평의의 나에시로카와 가마이다(조용준, 2006, 41-50). 박평의와 조선도공들은 가고시마의 ‘사쓰마 도기’에서 각 가마를 의미하는 나에시로가와계, 다테노계, 류몬지계, 니시모치다계, 히라사계, 다네가시마계 6가지 분류 중 ‘나에시로가와계’에 속한다. ‘다테노계’는 도공 김해와 ‘류몬지계’는 도공 변방중의 류몬지가마로 연결짓고 있다. 방병선 연구에서도 지적하듯이 초기 도공들이 사용한 가마는 발굴이 미진해서 유사한 시기 규슈 지역의 가마들이 조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거나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방병선, 2011). 다만, 그 중 가고시마 사쓰마 지역들은 박평의나 심당길 등은 비교적 고문서 기록들이 남아 있는 편이다. 나에시로가와 정착 도공들과 도자 제작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조선 도공들이 기술 전술을 위해 이주한 기록들을 통해 도공으로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착 초기 단계로 고려해볼 수 있다(방병선, 2003, 119). 반면, 류몬지의

경우에는 조선 도공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도자 유물이 많이 보이는데, 주로 이들 가마들에서 청화백자와 백자를 생산했다고 보는 흔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핵심 기술은 외형이나 형태로 드러지 않기 때문에 상감기법의 도입을 통한 장식기법 수준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주 이전 조선 도공들이 이미 우월한 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기술이전의 전제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 간의 청화기법에 대한 이은미의 연구를 보면, 일본청화 제작 이전 과도기에 1620년대 조선풍 청화백자의 형태로 보아 조선 사기장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이은미, 2011). 나아가 방병선 연구에서는 조선계 장인들이 가마로 여겨지는 곳들에서는 주로 청화백자와 백자를 주로 생산했지만 조선만의 독자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백태청자 제작의 예나 분청을 제작한 것도 상당히 많다고 밝히고 있다(방병선, 2003). 실제로 16세기 중반 조선에서 상감기법이 많이 출토되었고 17세기 초반 궁중 기록에서도 청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피납장인들 역시 상감기법과 청자 제작의 경험을 갖고 있을 확률이 적지 않다(방병선, 2003, 267). 여기서 출토되는 청자의 유약과 고려청자 유약의 성분특성이 유사하다는 보고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방병선, 2018, 267).

이미숙의 연구에서는 도자기 제작의 도구와 원료와 더불어 제작 환경이 기술전파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고 상세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미숙, 2011). 조선에서 익힌 기술로 자기 제작 기술 까지 일본 내에서 구현할 수 있었던 기술 이전의 환경적 조건은 중요한 단서이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도공들의 강제 이주 배경은 기술 전

쟁이었으며, 일본의 기술 수요에 대한 열망은 일본 내 상류층과 도요 토미 히데요시의 차완이라는 정치문화이었기 때문에 비대칭적 사회 지위적 요건에서 기술 이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자기 기술의 이전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 대상국의 정치제도적 환경과 경제적 수요 등의 사회적 여건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국가 간의 기술 이동 형태에서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 뿐만이 아니라 자기 기술을 일본 내에서 실험 연구할 수 있는 정치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기의 기술과 문화를 수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 일본이 조선 도공의 일본 내 비대칭적 신분을 어떻게 다뤄왔는 지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김유정, 2017, 20). 이들이 어떻게 정착하여 가마를 짓고 도공 활동에 착수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일본 내 도자 기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우월한 조선 도공들의 도자 기술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녹봉을 도자로 대신해 납품하는 등의 생계를 위해 도공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조선 도공들 중에서도 실력이 뛰어나 토지를 받아 가마를 짓도록 하거나 일본 도공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는 기록을 보았을 때 도자생산에 대한 지방 차원의 지원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조선 도공들에 의한 자기 원료의 발견과 소성 기술의 발전



납치된 조선 도공들은 처음부터 일본에서 청화백자를 제작하지는 못했다. 초창기에는 생계나 사정에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주로 분청사기나 조질백자에 가까운 것들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방병선, 2017, 114). 주로 조선식의 완, 사발, 접시, 병 등이 주를 이루었고 일본에서 유행한 다완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릇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방병선, 2017, 115). 청자나 백자의 생산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이삼평의 백자광 발견이었다. 백자광에서의 백토 발견으로 자기 원료가 처음으로 일본 내에서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백토에 혼합원료를 더하게 되면 높은 소성온도에서 형태와 색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원료가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삼평은 이라타의 이즈미야마에서 자기원료에 적합한 백토를 발견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삼평이 多久家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인 『가쿠(覺)』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리타 영주에게 보낸 문서, 그리고 후손들이 기록한 문서들을 통해 이삼평이 아리타에서 이룬 백자광 발견의 업적을 검토하고 있다. 이삼평은 아리타 영주에 의해 가마 제작과 더불어 백자 제작에 몰두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하에서 도자 실험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일본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주에서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졌으며, 자신의 영지에 가마를 만들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자 기술에 대한 일본 내의 수요가 상류층들의 기호를 넘어 조선 도공들은 규슈와 각 영주들의 특별한 보호와 통제 하에서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구울 수 있었다(우동규, 1987, 198-199).

일본의 규슈 3대 도자기 마을인 아리타(有田)와 이마리(伊万里), 가라쓰(唐津)로, 일본에서 1610년대부터 자기(磁器) 생산이 시작된 시점은 이삼평의 아리타 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삼평이 아리타의 이즈미야마에서 백자광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가쿠』의 기록에 의하면 히젠 지역의 소영주였던 다쿠나가토 노카미가 이삼평을 데려오고 그 밑에서 도자기를 만들었고, 아리타 지역의 이즈미야마(泉山)에서 자기의 원료인 도석(陶石) 일명 백자석(白瓷石)을 발견하고, 이후 18명의 도자기 도공들과 아리타로 옮겨와 1616년 최초로 백자를 제작했다고 한다. 구태훈의 연구에서는 이삼평이 당시 자기 생산을 위해 고령토를 발견하게 되는 경위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구태훈, 2008). 정유재란 때 이삼평도 조선인 도공을 납치를 많이 하는 다이묘들 중 히젠 번의 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인물에 의해서 150여 명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하였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나오시게는 조선 도공뿐만 아니라 자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흙인 고령토를 배에 싣고 왔으며, 그 양은 조선인 도공들이 수년간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한다(성시흥, 2018, 9). 그러나 7~8년이 지나자 조선에서 싣고 온 고령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나오시게는 이삼평에게 자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흙을 찾도록 명령한다. 이삼평은 20여 년을 백토를 찾아 헤매지만 조선에서 쓰던 것과 같은 양질의 점토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다니게 된다. 그러다가 아리타의 이즈미야마에서 자기의 원료인 백자석을 발견하고 이 지역으로

이주한 다음, 가마를 새로 짓고 백토를 이용해 일본에서 조선백자를 재현할 수 있게 된다(구태훈, 2008, 191). 이삼평의 백토발견과 더불어 이루어진 기초작업들이 자기 제작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삼평이 일본에서 추앙받는 도공의 명성은 백자 기술이 이삼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리타 지역을 넘어 전수되었다는 데 있기도 하다. 아리타 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자기 생산에 종사했다고 했으며, 이삼평에게 백자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공들이 이주해왔다고 한다. 이후 1631년 히젠 번은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삼평의 백자 기술 전수와 연관성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영준과 이미숙 연구에서는 이삼평을 비롯한 조선 도공들의 백토 발견을 넘어서 자기 생산 기술로 인해 아리타에서 생산 체제를 갖추 수 있었던 간접적인 자료로 이 당시 나베시마 영주의 도자 산업에 대한 보호 장려 정책을 언급한다(조영준, 2016; 이미숙, 2013). 당시 나베시마 영주는 자기 생산장려정책을 위하여 1624년 이삼평을 도석채굴장의 관리, 지배 자리를 맡게 하였으며, 채석장의 관리강화와 조선에서 온 사기장을 특별 우대하였다(이미숙, 2018, 2-5-206). 또한 히젠 번 자체에서 자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아리타에서 생산된 상품을 이마리까지 한정하거나 외부 구입을 금지하는 계획관리가 이루어졌다. 이삼평의 백토 발견이 도자 제작을 넘어서 아리타에서 만든 자기가 12km 떨어진 이마리시에 있는 항구를 통해 수출할 수 있기까지 히젠 번의 제도적 노력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3. 임진왜란 시기 조선 도자기 기술의 일본 전파: 한국과 일본의 두 시각\_규슈 도자기 문화관



[그림 1] 일본 나고야 성 박물관의 한일 교류 전시 일부로 이삼평의 자기 기술이 이마리아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이삼평에 의한 일본 자기 생성과 오른쪽에는 이삼평 비석 사진과 함께 그의 업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림 2] 일본 나고야 성 박물관의 한일 교류 전시 일부로 조선 시대(15~16세기)를 대표하는 분청사기가 임진왜란 이후 규슈의 도자기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임진왜란 시기 조선 도자기 기술의 일본 전파: 한국과 일본의 두 시각\_규슈 도자기 문화관



[그림 3] 아리타 도자의 자기 기술 생성 이전(왼쪽 도자기)와 자기 생산 이후 히젠 도자의 발전을 시기별로 나열하고 있다.

이은미의 연구에 따르면, 아리타의 조선 도공들에 의해 소성 기술 전파와 더불어 조선식 가마구조의 변경을 통해 가마의 기술이전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대량 생산 체제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은미, 2011). 이미숙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조선 도공들이 직접 가마운영에 참여하여 일본 도자기 가마를 조선과 같이 유단식 연실등요로 구조를 변경하여 고화도 자기를 구워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이미숙, 2018, 236). 1637년에는 일본인 도공들을 추방하고 조선 도공으로 대체하면서 이삼평의 이마리 가마를 중심으로 하는 도자기 생산 체제로 개편될

수 있는 일본 요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마리 가마 네 군데 전부와 아리타 가마중 일곱 군데를 없애고 아리타의 13곳 가마에 통합하여 이후 아리타 도자기 생산 중심으로 변경되는데, 여기서 소멸한 7곳의 가마는 가라츠 도기를 합쳐 구웠던 가마로 자기 개발 초창기의 가마이다. 아리타 지역에서 이 가라츠 도기는 사라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체제가 확립되는 것이다(이미숙, 2008, 91). 더불어 가마 구조의 경우에 17세기 이후의 가마들은 조선식 구조로 바뀌어 소성실이 여러 개 이어진 계단식 가마가 축조되었다. 계단식 연실 등요 구조는 미노 가마의 반지상식 구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열효율이 우수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그 근거로 아리타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된 받침이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흔히 사용하는 내화 빚음 받침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다량으로 생산되는 도자기들을 여러 개 겹쳐 구워 한 번의 소성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 낼 수 있어 원가를 낮춘 도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던 방법이기도 하다(이미숙, 2010, 242). 또한 갑발과 도지미 등 가마도구 역시 조선의 양식과 비슷하며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성형도구들에도 조선의 영향을 받아 1610년경 부터 조선식 연질백자, 상감청자, 인화분청계통의 도기가 제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최초의 자기 기술 발생이 조선 도공 이삼평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삼평 인물에 관련한 설들과 일본 내 문헌들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처음 일본이 유럽으로

자기를 수출하기 시작한 이마리 지역의 ‘아리타 자기’는 조선도공 이삼평에 의해 자기 원료가 발견되었고, 최초의 백자 생산으로 대량 생산체제로 도자 수출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앞선 연구와 달리 방병선 연구에서는 이삼평이란 인물의 성과가 도자 유물의 양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방병선, 2010). 이삼평이란 인물에 대한 출신지 검토와 더불어 한국에서 가마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이삼평과 공주 지역의 도자 기법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한다(방병선, 2010, 270). 기술이전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얻기는 어렵지만 조선의 기술 영향과 상관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 가마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조선계 영향 보는 도자들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향 관계는 미약하다고 판단하지만, 외형적으로 문양이나 기형에서는 조선계보다 명대의 형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본 내 수요 변화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방병선, 2010, 267). 18세기 이후부터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인화 분청이나 상감 분청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고급품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취향은 조선에서 이미 생산이 중단된 이들 그릇이 복고적인 취향을 타고 일본에서 꾸준히 제작되었기 때문에 조선 도공들도 조선과는 백 여년 이상 시차가 있는 도자를 일본 수요와 요구에 맞춰 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화백자에서도 조선식 문양이나 기형보다 명대 자기의 모방이 주였으며 중국이나 일본풍의 양식을 따르고, 가마구조에서도 조선 도공들이 제작에 참여하였어도 중국식이였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연구에서는 양국의 도자 교류사의 관점에서 양국 자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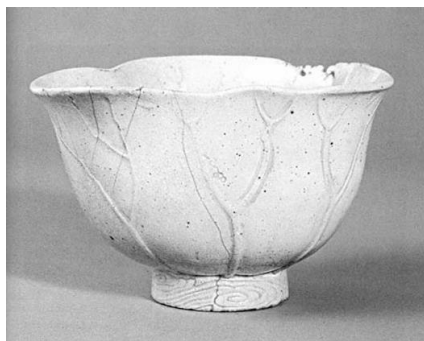


동 시대 생산 양식을 비교로도 피랍된 조선 도공들이 일본 조선 양식이 아닌 일본 양식 생산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유물 비교도 단면적인 판단보다 일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조선 도공과 사쓰마 지역의 도자기

사쓰마(薩摩) 지역은 조선에서 끌려온 조공들이 가장 많이 집결한 곳이다. 그 만큼 사쓰마 지역 계통의 도자기의 시초가 조선 도공에 있는 경우가 많다. 시마즈 요시히로에 의해 끌려간 70여명의 조선 도공들은 사쓰마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개요를 했다(신혜원, 2007, 88).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사쓰마 도자기의 양식에서도 조선식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들을 잡아온 장수와 조선 도공들의 출신지, 그리고 사쓰마 지역에 개요한 가마와 연결하여 보고 있다. 특히 사쓰마 지역의 도자기 계통 중 일본 문헌이나 기록이 박평의, 심당길에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김해와 타테노나 팔산의 다카토리, 존해의 아가노, 변방중의 류몽지는 구체적인 조선 도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당시 사쓰마 지역에서는 조선 도공 활동들이 사쓰마 번주에 의해 계획적으로 관리와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각종 문서들을 통해 잘 알려진 박평의, 심당길, 김해와 같은 인물들이 기술 이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임란시기 피랍된 조선도공인 심당길과 박평의 또한 이삼평과 마찬가지로 자기 원료인 백색 도토의 발견으로 자기의 기술 발전을 이어나간다. 대표적으로 신혜원과 방병선은 일본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가고시마현 ‘사쓰마’에 피랍된 조선 도공들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자기 기술의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방병선, 2010; 방병선 2007). 그 중 박평의라는 인물은 그의 다이묘에 붙잡혀 쿠시키노시마비라 (串木野島平)에 상륙하고 다음 해 사쓰마 최초의 가마 쿠시키노요를 개요한다. 처음에는 42명의 도공과 함께 일상 생활용 도자기를 주로 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도자 제작에 전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603년 나에시로가와로 이전 후라고 할 수 있다. 사쓰마에 도착한 조선 도공들은 쿠시키노, 시미피라의 땅에서 도공들이 조선에서 끌려올 때 고향에서 가지고 온 백토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도자기를 제작하였는데, 그것이 히바카리데(火計り手)이다. 히바카리데란 조선의 흙과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불만 일본의 것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도공들이 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자기의 원료를 구하기 전까지 조선에서 가져온 백토를 표본으로 삼아 찾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까지는 번주의 비호를 받으며 생계를 위해 일상생활용 도자기를 만들었으며 경영이나 후원의 기회가 적어 타지에 가서 도예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었다(신혜원, 2007, 199). 일본에서 고급 자기 기술을 바로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림 4] 白釉蓮葉茶碗, 시로몽(白薩摩), 히바카리테(火計り手),  
17세기, 지름 14.4cm, 높이 8.9cm, 동경국립박물관.

사쓰마에서 백토를 발견하고 백사쓰마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사쓰마 번주에 의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사쓰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의 특징은 번주의 관리하에 도자가가 제작된 쿠로몽(黒薩摩)과 주로 일반인들에게 공급되어진 생활용 도자기 시로몽(白薩摩)으로 나뉜다. 또한 18세기 이후가 되면 검은 사쓰마 도자기와 백사쓰마 도자기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중 백사쓰마는 번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작가능한 도자기였다(신혜원, 2007, 201). 백토 발견과 더불어 백사쓰마를 제작한 박평의도 마찬가지로 게이초 3년(1598) 기록을 통해 사쓰마 번주의 보호를 받아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쓰마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는 귀화 조선인 박평의 등에게 명하여 히오키군(日置郡) 나에시로가와에 가마를 축조하게 하고, 계속 해서 도자기 제작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일본 이름과 직위를 하사했다고 한다(방병선, 2017, 125-126). 번주의 비호 하에 박평의는 나리가와무라

(成川村)에서, 백사(白砂)는 가세다(加世田)의 봉우리에서 발견하고, 쿠리노(栗野)에서 유약용 참나무를 찾아내어 결국 백도기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방병선, 2017, 126).

또한 사쓰마 도자기 계통 중 초대 심당길도 마찬가지로 변주에게 녹봉을 받는 대신 도자기를 제작, 헌납하면서 도공 활동을 이어갔다. 사쓰마 도자기 중 주류로 알려진 나에시로 가와야키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시마즈군에 의해 붙잡혀 납치된 조선 도공인 초대 심당길으로 이곳에 끌려온 43명의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심당길 또한 화산재 속에서 백색 도토를 발견하고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으며, 여기서 탄생한 사쓰마 지역의 백도자기가 백사쓰마 도자기의 시초가 된다(이상균, 1999, 161).

또한 사쓰마의 영주 요시히로는 조선 도공들을 사쓰마에 데려와 도자기를 생산하게 하고 일본의 다른 지역의 도자기기술을 배워 조선의 도자기 기술과 접목시키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이미숙, 2011, 193). 1886년(明治 19) 일본정부가 전국의 府縣에 명하여 작성한 『府縣陶磁器沿革陶工傳統誌』에 의하면

“사쓰마 도자기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선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를 으뜸으로 하여 조선도공 (김해, 朴平意 (박평의))를 그 다음으로 한다(沈壽官, 1975, 50).”

이미숙 연구에서는 사쓰마 지역의 조선 도공들 활동에 대한 기록을 일본 사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사쓰마 지역으로 끌려온 조선 도공 중 가장 잘 알려진 김해, 박평의 등의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다(이미숙, 2011). 도자 기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김해는 조선 도공들의 활동과 도자 기법 등과 같은 것들은 번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번주의 이동에 따라 새로운 가마를 이전지에 개설하고 도자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1600년경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키가하라 전투로 인해 김해가 우토요((宇都窯) 가마를 개요한 것은 1601년~1602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영주의 명령에 의해서 1602년 오와리(尾張)의 세토(瀬戸)에 도예기법을 배우기 위하여 갔다 5년 후 다시 돌아와 세토에서 습득한 도법을 더한 도자기를 소성한다(이미숙, 2011, 195). 이런 배경에는 영주의 취향을 반영했다고 알려지는데, 조선의 도자기 제작법 외에도 히젠(肥前), 세토(瀬戸), 교토(京都) 등의 도자기 제작기법이 접목되어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이미숙, 2011, 196).

이 이때 만든 것으로 히바카리데(火計り手), 시로사쓰마데(白薩摩手), 니시키데(錦手)킨란데(金欄手)·청화백자(染付白磁)·靑磁·유리데(瑠璃手)·소고로쿠데(宋胡錄手)·미쯔시마데(三島手)로 조선 백자 기술에 일본의 기법 등이 더해진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7년간 일본열도 내의 정권 교체 과도기 시기로 인해 조선 도공들은 약 7년여 동안 조선의 도공들을 보호받지 못했다가 이후 생업을 위해 영주의 예우로 녹봉 대신 도자기를 납품하며 일반용 자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자기 기술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후 작품성이 뛰어난 지배층용의 도자기를 만들도록 하는 정책과 취향이 요구되자 그제서야 조선의 백토와 비슷한 흙을 찾고 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미숙, 2011, 160). 일본

내에서 보호와 더불어 조선 도공들은 조선에서 가져온 백토를 토대로 비슷한 자기 원료를 일본 각 지역 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다음 조선의 흙이 아닌 일본의 흙과 불을 가지고 원료 배합과 가마 내에서 소성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실험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1603년에는 점토나 유약의 원료, 연료의 확보가 이루어졌으며 1605년 가마가 개업하고 1623년이 되어서야 박평의는 백도자기의 제작에 성공한다. 1626년에는 도공들을 파견해 기술 습득을 하게 하는 기술 파견과 같은 행위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 백도자기 생산의 기초를 확립한다(이미숙, 2011, 163). 이삼평의 기록에서 보인 것처럼, 이마리 지역으로 일본 도공들이 도공 기술을 배우러 온 것도 있지만 사쓰마 지역에서는 조선 도공들이 일본의 도자 기법들을 습득하러 파견되는 동화 과정도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균의 연구에서는 사쓰마 지역 조선 도공들의 기술이 일본 살마 도자기나 교토 지역의 도자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등장하기도 한다(이상균, 1999). 조선 도공들이 제작한 도자 유물에서도 초창기 출토된 유물과 달리 이후 일본 도법 혼용된 형태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조선에서 가져온 흙과 자기들은 그 제작기술과 소성방법도 순수한 조선의 도법이었다(이미숙, 2011, 164). 그러나 이후의 유물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도자 기법을 혼용하여 제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술 파견 이후 돌아와 김해가 1608년에 축조한 차완 등의 도자기 유물들을 보면 조선 본래의 도법에 일본의 도자 수법을 가미한 형태였다고 보고 있다(이미숙, 2011, 164).

## 일본의 시각: 임진왜란 이전 시기 조선 도자기 기술 도입

일본 연구는 임진왜란 이전 시기부터 양국 간 도자 교류가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조선 도자과의 영향 관계를 추정하고 있다. 일본 도자사에서 ‘도자기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이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있기보다 임진왜란 전후로 보았을 때 조선 도공들의 영향 관계가 유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도예사적 측면에서 일본 유물 검토가 자세히 이루어짐에 따라 임진왜란 기점으로 하여 조선 영향으로 보이는 도자 기법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1850년대부터는 조선계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규슈 사가현의 북서부에 분포한 히젠 도자를 중심으로 조선도자와의 비교연구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타난다. 도예사나 한일관계사적 접근을 통해 한일 공동연구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조선과 일본 도자 간의 외형적 판단과 더불어 기술 이전의 여부도 소상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 중 片山まび와 本田まび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일본 학계에서 조선계 기술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물비교를 통해 재확인하고 조선 도공들의 직접적 기술 이전의 흔적을 분별하여 검토하고 있다(片山まび, 2005; 本田まび, 2003). 따라서 유물을 통해 조선 도공의 직접적인 기술 이전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이삼평의 백자 기술이 일본 내에서 재현되는 과정을 이마리 일대 지역문헌과 고문헌, 역사자료들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 도자기 유물비교를 통한 조선 기술의 영향

아직 자기가 생산되지 않았던 임진왜란 이전 히젠 지역과 조선도자와의 영향 관계를 보면, 대체로 1580년대 나타나기 시작하여 1650년대 이후에는 사라지는 흐름으로 읽힌다. 히젠 지역의 도자는 임진왜란 시기 건너온 조선 도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히젠 지역의 가마가 발굴된 이후 히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규슈 지역의 도기 가마에도 현저하게 그 영향 관계가 나타난다고 본다(本田まび, 2003, 1). 히젠 도자가 조선의 소성기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데는 가마의 구조와 가마 도구로 보는데, 1650년대 이후에는 중국 복건성 차주 가마의 기술 및 양식이 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가마 구조가 대량생산체제에 맞는 형태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1610년대의 가마에서는 거의 조선 도자의 영향을 볼 수 없으며, 1615년부터의 가마에서 조선도자의 영향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616년의 자기 발생 시점으로 하여, 조선 도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선도공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기술이전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가마 구조, 성형방법, 그리고 가마 도구와 같은 것들이다. 이 부분은 기술자가 아니면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을 통한 기술전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片山まび연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히젠 지역에서 자기가 출토된 것은 조선침략 이후 1610년을 보고 있으며 조선백자와 아주 닮은 유형이나 가마가 나타난다고 본다(本田まび, 2003, 161). 요업 기술



중 어려운 기술이다 가마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시 16세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일본의 전통 가마 구조를 히젠 도자의 가마와 비교했을 때 조선 도공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本田まび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전통 가마는 칸을 만들지 않는 구조임에도 이 시기 처음 일본에서 칸으로 구분된 가마가 등장한다고 한다(本田まび, 2003, 160). 이 자체만으로 일본 도자사 자체에 큰 기술 변혁인 것이다. 당시 일본 상황에서는 내재적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술 변혁이 외부 기술 유입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고려 도기 가마의 유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가마요의 구조가 순지리 유적과 같은 조선 왕조의 도기 가마와 같은 기술이 전해진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도기 가마의 부속물을 보아 지리적으로 경상도 지방의 도기가마가 히젠도자 가마에 영향을 주었다고 연결하고 있다. 더불어 本田まび연구에서 가마구조에서 불창시설의 경우에도 17세기 조선자기요에 보다 가까운 요소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本田まび, 2003, 70). 이후 이 구조는 개량을 거쳐 후대 히젠 도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마구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마 도구의 경우에도 가마를 축조하는 기술자가 아니면 모방하여 제작하기 어렵다. 本田まび의 연구에서는 도자기를 구울 때 구운 그릇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기 위해 사용되었던 각종 받침에서 조개받침이나 태토빚음받침이 조선계라고 본다(本田まび, 2003, 72). 특유의 웅을 유지해 굽기 위한 삼각형 형태 받침이나 패목가 같은 경우에는 일

본 중세 도기에서 볼 수 없는 형태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조개받침의 경우에는 일본 중세는 물론 중국 도자에서도 알려진 바가 없으며 16세기 순지리요에서 조개받침의 예를 찾아볼 수 있어서 직접 기술도입이 이루어진 가마로 추정한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1580~1598년에 순지리요적 타입의 도기가 출토되고 16세기 말까지 만들어지고 있었다고도 추정한다. 즉, 이 시기에 기술자가 건너와 순지리요적 타입의 가마를 축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태토빛음받침의 경우, 일본 중세 도기에 전혀 보이지 않는 유형이지만 조선전기의 분청사기나 백자에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직접적 영향 관계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태토를 빚어 받침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착상은 조선 자기 기술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형방법의 경우에는 일본의 물레 성형을 할 때나 굽을 깎을 때 모두 시계방향으로 했으나 조선에서는 다리로 물레는 돌리는 방법과 같은 회전방향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선계 기술로 추정하고 있다(本田まび, 2003, 95). 양식만이 아니라 片山まび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손 작업으로 구연을 성형하는 기법과 같은 조선 요업 기술이 일본에서 그대로 구현된 것 같은 흔적이 나타나며, 도공들이 이주해 제작한 가능성이 클 것이라 보고 있다(本田まび, 2003, 150-151).

즉, 자기를 굽기 위해 필요한 고온의 소성 기술은 가마 구조와 가마 도구와 같은 물리적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기존의 일본 가마의 구조와 다른 형태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조선 도공의 직접적 기술 이전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조선의 자기 기술과 명대 도자기법의 성행

조선도공의 기술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1610년 인 것은 조선 도공이 이주 후 적응 과정을 거쳐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던 기간이 10여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추정한다. 유물과 당시 일본의 도자 시장 수요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1610년대가 백자발생의 시점과도 일치한다. 또한 本田まび는 1593~1597년 명의 해금정책으로 인해 수출된 청화백자가 줄어들면서 당시 일본에서 청화백자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本田まび, 2003, 161). 명 멸망과 청 성립의 시기 전까지는 청화백자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도기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로카미 슈텐도의 글에서도 이삼평이 비릇이 일본에서 처음 백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 내의 백자에 대한 기대가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도공의 직접적 기술 이전의 단절보다도 조선 도공들이 일본 수요에 맞는 형태로 변모하였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 국내시장에서 중국자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대량생산체제로 변화하면서 조선계 가마의 경우에는 일본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本田まび는 보고 있다(本田まび, 2003, 5). 片山まび 역시 대량 생산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1650년대 이후 히젠도자에는 조선 백자풍은 완전히 사라져 중국 남방계의 기술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片山まび, 2005, 162). 즉, 1650년 이후 히젠도자에서 조선 자기의 기술은 토축요로 그 모습만 남을 뿐 제품에 있어서 완전히 영향이 사라진 것이다.

도자의 경우, 유물을 통해서 보았을 때 청화백자로 이행되는 시기에 조선도자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영향 관계는 미약하다고 판단한다. 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1610년대에, 일본에서 전하는 기록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이주되었던 조선도공들은 정착하여 크게 가마, 청화백자, 백자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생산에 임했다고 보고 있다. 片山まび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610~1650년대 백자계 유물의 일부에서 표면적으로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 지점은 연질 백자라고 유추한다(片山まび, 2005, 163). 한국 남부에서 생산되고 있던 연질 백자의 미약한 영향 관계에 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6세기 말 무렵 일본에서 출토되는 연질 백자가 조선 전기의 연질 백자에 가깝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양식의 모방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토의 정제나 소성의 면에서 당시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것을 보아 도자에서 드러나는 자기 기술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片山まび의 글에서 백자계의 유물 일부는 청화백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양식의 도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片山まび, 2005, 166). 따라서 가마 전체의 형태뿐만 아니라 가마의 굽바닥에 내화토빛을받침을 사용한 점 등에서는 조선도자의 영향을 가늠하고 있다(本田まび, 2003, 54).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청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면서 1630

년대 이후부터 출토된 유물에서는 표면적으로도 조선계 영향을 찾기 어렵게 된다. 이 때 제작된 청화백자는 양식적인 면에서 조선보다 중국 명대 청화백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갑발의 경우 조선계 기술이 아니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1650년 무렵부터는 내화토빛음받침이 완전히 사라지고 명대 청화백자 양식에 어울리는 ‘하리’라고 하는 핀으로 받쳐 굽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한다. 구로카미 슈텐도의 글에도 명의 도자 기술을 도입해 백자를 변형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명나라에서 도자 기술을 배워온 일본 도공에 의해 굽은 고리 모양 받침 기술이 소개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구로카미 슈텐도, 2015).

그 근거로 本田まび는 태토와 성형기법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태토에 함유된 칼슘의 경우 명대 백자는 10퍼 이하인데, 히젠 자기는 7~8%이며 조선백자는 10~13% 정도였다고 한다(本田まび, 2003, 187). 즉, 히젠 자기의 성분은 명대 자기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삼평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자토를 찾아다녔을 때 명의 기술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또한 성형기법에서는 물레의 경우, 청화백자가 기술적으로 조선계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형틀에서는 명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부 내화토빛음받침 사용과 같은 조선계 기술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백자 기술은 약 20년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쇠퇴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 이후 조선계 기술로 보이는 받침까지 사라지게 되는데 명대의 청화백자의 양식과 받침이 전혀 맞지 않아 더 이상 이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히젠의 청화백자는 명대기

술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더라도, 기술자는 조선도공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1637년 조선장인들의 요청으로 자기를 모방해서 구운 일본인들이 추방시켜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일본인들이 영업하였던 가마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결국 청화백자 이후 유물에서는 조선도공들에 의한 직접적 기술이전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일본 내의 도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조선 도공들의 기술은 조선계의 방식이 아닌 형태로 이어져갔을 것이라 추정한다.

### 조선 도공의 도자 활동을 통해 본 기술 전파 양상

일본 학계에서 조선 도공에 대한 출신지, 연행 과정, 도공 활동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일본 내에서도 관련 문헌자료가 거의 없기도 하지만 고문서를 통해 조선 도공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로카미 슈텐도의 연구에서는 연구기관, 역사사적을 바탕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무대로 한 이삼평과 조선 도공들의 도공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구로카미 슈텐도, 2015). 특기할 점은 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 현의 자료관과 향토사자료관을 바탕으로 당시 일본 내 정치 상황과 번주들의 도자 정책들이 어떻게 자기 기술 발전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연결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사 과정에서 허구적 내용들이 존재하지만 도자 기법이나 기술 측면에서 이삼평과 조선 도공들이 조선에서 익힌 자기 기술을

일본에서 구현하기 위해 실험하는 과정이나, 도공들 간에 기술 전수 등은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있다.

구로카미 슈텐도의 글에 나온 조선 도공들의 도공 활동과 자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규슈 지역 사가현 이마리시에 위치한 오카와노라는 마을에 처음 정착한 조선 도공들은 1593년 도자기 만들기가 성행하여 번주에 의해 몇 개의 가마소를 형성하고 나름대로 생활 잡기들을 구울 수 있게 된다. 이후, 영지 몰수된 사건으로 조선 도공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다. 이 시기 일본 상류층들의 문화의 상징이 된 다도회와 도쿠가와에게 헌상하는 전국 모든 다이묘들 간의 경쟁으로 번지는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도공들은 각 지역에서 도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조선 도공이 나베시마 다이묘에게 지역 고유의 차 도구 개발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가마소를 만들 수 있는 토지를 받게 되고, 더 나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도자기 흙이 풍부한 후지노카와치 지역에 조선 도공들은 가마소를 만들게 되고, 이후 상감과 철화 장식 기법과 두 종류의 유약을 나눠 칠하는 기법 등 생산 기술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삼평이 오코노시 가마에서 초기에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기존에 해오던 일본 도자 방식과는 다른 조선식 도자 기술을 재현하고자 한다. 가마 근처에서 도자기 흙을 발견하고, 유약을 조합하는데 기존에 짚과 나무껍질 재만을 사용하는 유약과 달리 흙의 재를 가지고 섞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삼평은 ‘환원염 불 때기’ 방식으로 가마 속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다. 이 때 필요한 장작의 양을

자세하게 지시하고 가마 내 번조실이 식지 않도록 개폐와 장작을 추가로 넣는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다. 이삼평의 고령토 발견은 이러한 실험 과정을 반복하면서 찾아낸 문제의식 하에서 흙과 유약을 다시 찾아내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삼평은 연질의 가마소 남쪽 산림을 답사하는 도중 연질의 도자기 흙과 유약으로 깨트리기 쉬운 바위광맥을 찾아낸다. 앞선 연구에서 1610년부터 조선 연질백자가 등장했던 것이 규슈 도자의 특징이라는 지점과 비슷하게 이 연질의 흙과 유약이 이삼평이 직접 찾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초기 흙과 유약이 기존의 일본 도자와는 달랐다는 것을 반영한 듯하다.

이미 임진왜란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량의 다완이 일본으로 유출되고 그 후에도 일본으로부터의 다완 주문이 계속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피랍된 조선 도공들이 고려다완을 모방 제작하면서 더욱 퍼지게 되었다. 1602년경부터는 조선 도공들의 ‘조선 가라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정치세력들의 경쟁이 ‘고려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도요토미를 대신해 도쿠가와 이에야스, 히데타다로 이어지는 무가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다도회가 중요했으며, 도요토미파의 무장들은 도쿠가와에 바쳐서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고려자기’의 다기를 경쟁하듯이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삼평이 구운 조선에서 구웠던 ‘분청자기’가 일본에서 ‘조선 가라쓰’로 소개되고, 조선 도자 기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삼평은 성으로부터 ‘조선 가라쓰’와 더불어 ‘백자’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다. 함안 사기장들이 만든 ‘철화자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백자를 원했던 것이다. 이삼평은 백자와 청자를 납원



만복사에서 구워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석을 찾아다녔다. 이삼평은 백토를 찾기 위해 쌀과 도자기를 조공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주 허가를 얻고 양산과 구포 출신의 조선 도공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서 이들은 이삼평에게 굽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번조실을 계단 모양의 가마 구조를 알려준다.

이삼평만은 백자를 구운 경험으로 백자도석을 발견한 후 암석을 잘게 부술 방법을 고안한다. 조선에 남원 만복사 도자기 가마소에서 구웠던 백자도석은 깨지기 쉬운 흙덩어리였던 것과 달리 단단한 바위였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사용해 분쇄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처음 이삼평이 구운 백자는 눈같이 하얗게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종류의 유약을 더 실험해보고자 쥔 재와 나무껍질 재, 진흙 재나 잿물 등의 조합을 몇 번 시도한다. 이삼평은 시험 삼아 구운 백자 도석을 본격적으로 굽기로 결정하고, 아리타 마을로 이주한다.

아리타에 도착한 이삼평은 장작, 유약용 흙을 구하기 위해 조선 도공들과 함께 답사를 나가며, 고온에서 도자가 견딜 수 있는 실험을 계속한다. 마침내 1616년 6월 1일 백자도석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자기생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자기생산에 장벽인 도석을 분쇄하는 일들이 한쪽에서는 진행되었다. 이제는 철과 동 성분이 있는 진한 빛깔의 유약을 줄이고 쥔과 나무를 태운 재와 백자도석을 분쇄하여 녹인 거의 투명한 유약을 바른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삼평은 유약의 원료를 더 하얀 돌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더욱 하얗게 나오는 백자를 연구한다. 이에 따라 백자 소식을 듣고 이삼평이 있는 덴구다니 가마소를 찾아오는 이주자들이 증가했는데,

이삼평은 사기장들에게 자기를 굽기 위한 가마의 구조와 도석으로 흙을 만드는 방법, 유약의 조합까지 모두 가르쳐 주었다. 이 시기 번주는 야나카 마을을 중심으로 ‘자기 산지 만들기’를 단행하기 위해 도자기산지 정리가 이루어졌는데, 조선에서 건너온 사기장과 가족에 한하여 도자기를 계속 굽는 것을 허가하고 그 이외의 자는 추방한다는 명령을 내린다. 이 추방명령은 일본인 사기장을 아리타 전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것이었다. 즉, 가마소로 할 구역을 정하고 아리타 지역에서는 7개소 가마고를 언급하며 가마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대부분 조선인만 남은 아리타 지역에서 명청 교체가 이마리 지역은 명 대신 수출하는 계획 하에 아리타 내산의 각 가마에서 무역품을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를 정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삼평의 백자 생산에 대한 공이 아리타야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수출을 염두에 둔 채 대량생산체제를 지방 자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4] 왼쪽은 초기 이마리, 나라 大和文華館 소장, 1630~40년대. 오른쪽은 이마리, 1650~70년대 제작, 사가현립규슈도자문화관 소장. 기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청화 자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일본 규슈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코발트 안료가 사용되어 색이 다채롭게 들어간 이마리 도자기. 본격적으로 자기가 유럽으로 수출한 이후의 아리타 양식을 더한 이마리 도자기라고 볼 수 있다.

구로카미 슈텐도의 글에서 보이는 조선 기술 전파 양상의 특징은 이삼평을 비롯한 조선 도공들의 출신지로 추정하는 남원이나 함안의 기술이 규슈 사가현에 각기 영향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구로카미 슈텐도, 2015). 실제로 스에야마 신사 위에 ‘사기장

이삼평의 비’에 쓰여진 ‘충청도 금강 사람이다’라는 비문과 달리 1990년 한국도자문화진흥협회 보고서를 통해 충청남도 공주시 학봉리를 도자 기술의 근원으로 설정한다. 또한 남원, 함안, 조선 도공 김해 사기장이 익혀온 도자 기술 등이 서로 기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김해 사기장이 옮긴 구마야마 산에서 조선 사기장들 간에 도자기 흙을 찾는 과정에서 유약을 조합하는 나무재 그리고 흙의 분량과 같은 조합 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지점을 들고 있다. 남원에서 온 이삼평과 함안에서 온 조선 도공들도 유약 방식이나 유약을 입히는 방법, 가마재임 작업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서로 발견한다. 함안의 가마재임 방식은 아래 여섯 칸의 번조실에 왕겨를 깔고 그릇과 그릇 사이에 경단처럼 만든 태토를 놓는 방식인 반면, 남원 출신인 이삼평은 위 두 칸의 번조실에 모래를 깔고 그릇과 그릇 사이에 경단 모양의 태토를 사용하지 않고 거친 모래를 조금 사용한다고 언급한다. 가타야마 마비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가현의 우치노야마나 가고시마현 사쓰마가 김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설들을 그 지역에 출토된 가마터 유물로 확인하고 있다(가타야마 마비, 2018, 6). 즉, 임진왜란과 정유왜란을 통해 온 조선 도공들 중 김해와 발음이 비슷한 ‘신카이’라는 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을 들어 김해에서 출토된 유물비교를 통해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기술 관련성은 없지만 백자 유물의 가능성이나 산청 지역과의 연관성들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 결론: 양국 연구의 차이

임란시기 피랍된 조선 도공들의 기술 이전에 연구는 각 국가의 연구목적에 따라 접근법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 연구는 일본 규슈 지역의 도자 발전에 조선 도공들의 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조선 도공들의 조선의 정체성에 의거해 출신지, 연행 과정, 정착 이후의 삶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동기를 가진다. 반면, 일본 ‘규슈 도자의 원류가 조선이다’라는 정설에 근거해 한국의 어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이주해 온 조선 도공들의 자기 기술이 일본에 도입되는 과정보다 동시대 출토된 유물비교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연구는 일본 도자 발전에 기록되고 있는 조선계 도공들의 후손들을 역추적하거나 전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기술 이전을 추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인류학적, 고고학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16세기 조선이 보유했던 자기 기술들을 조선 도공들도 가지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는 것과 일본 내에서도 일본 도공들보다 우월적인 도자 기술을 가졌다는 기록과 정황들을 먼저 파악한다. 조선 도공들이 처음 축조한 가마소에서 이들이 어떻게 도공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 지, 나아가 생업용 도자 활동을 넘어 자기 기술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일본 연구에서는 동시대 양국에서 출토된 도자 유물을 바탕으로 조선 도공들의 직접적인 기술 이전이라 볼 수 있는 가마

도구나 가마 구조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다만, 확실히 한국 특정 지역과의 연관성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계 영향 관계 정도로 보고 있다. 대부분 조선계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히젠도자를 중점으로 보고 있으며, 유물을 통해서 기술적 영향력은 1610년부터 대략 20년 동안 아주 짧게 드러나고 이후 표면적인 흔적들도 165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으로 대체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공백에 대한 설명은 유물을 통해 드러나는 기술 변화들을 일본 도자사나 당시 국내 수요에 참고하여 외부적 원인들을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들이 조선 도공들에 의한 유약 조합이나 소성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의 도입 여부를 말해주지고 있지는 않다. 결국, 도자 교류의 큰 틀에서 조선 도자의 영향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이전에 대한 파악은 조선이 아닌 중국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둔 것이다.

한국 연구가 훨씬 조선 도공들의 기술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일본 도자사나 한일 교류의 관점에서도 자기 기술의 도입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규슈 도자기 문화관이나 한일 교류 박물관(나고야 성 박물관)에서는 이삼평에 의한 자기의 기술이 아리타 도자의 원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일본 도자학계의 관점에서 유물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는 조선 도공의 도자 기술 전파를 충분히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과의 영향 관계 속 조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기 기술의 유입 경로가 조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물이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과 한국

연구 각각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물음을 던지고 되었다. 유물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진실과 조선 도공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물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선 도공들에 의해 자기 기술이 이전되어진 공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이마리 일대 지역문헌, 고문헌, 그리고 역사자료와 같은 향토사적 시각에서 당시 도자 기술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사건들이 일어난 공간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마리 지역 일대에서 벌어진 ‘다완 정치’라는 핵심 사건과 그 무대 위의 자기 기술을 가진 이삼평 인물은 단순한 도자공의 역할만을 수행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백자 기술적 완성에 대한 도공의 집착이 녹봉 대신의 가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자기에 대한 집착과 이를 두고 다이묘들 간의 정치 경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다도회’에서 조선 도공들은 알력 다툼에서의 생존을 모색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차 도구 개발이라는 제안을 통해 자신의 도자 기술력 가치를 입증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가마소를 만들 수 있는 토지 공간을 받음으로써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본도자사 발전에 있어서 조선 도자 기술 전파의 영향력과 같이 조선도 조선백자의 기술 도약의 배경에 중국으로부터 기술 적 영향이 뿌리 깊이 존재한다. 조선백자는 세종시기 중국 황제로부터 환관 윤봉이 8년간 중국으로부터 고급도자를 가져오게 되면서 기술 도약의 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백자는 세종의 원료와 기술의 자체적 생산을 명하면서 명 황제나 사신이 탐하고 조공품으로 요구받을 만큼 고려백자와는 전혀 다른 백자로 진일보한 것이었다고

한다. 아마 기술 이전을 체득해 내재화하기 전까지는 도자 기술자의 유입과 이들의 대우가 상당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처럼 일본에 피랍된 조선 도공들의 기술적 대우는 당시 상류층의 문화 소비뿐 아니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조선에 도자 수입을 의존하는 비대칭적 무역 구조를 감수해야 했던 것, 나아가 이것이 일본 내 도자 생산을 두고 정치 권력 경쟁으로 비화된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당시 조선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북학파의 선민 문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더불어 중국과의 대외 관계나 중국 내란으로 인해 도자 교역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점차 왕실에서 새로운 사회계층까지 커지는 수요층에 따른 선택이었던 것이다. 국가 성장 단계에서 부가 커지는 상류층들만의 문화 수요가 기폭제가 되었던 것도 있지만, 도자 기술사 측면에서는 명 황제와 조선 왕조 간의 답례품으로 왕실 고급 도자들이 오고 갔던 동아시아 전통의 조공 관계 속에서 기술 발전의 촉발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기술 전파는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전쟁이라는 기회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던 형태라는 점에서 조선과는 양상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특수한 사건 하에서 이루어진 조선 도공들의 기술 전파가 일본 내에서 가능했던 것을 고려하면, 조선 도공들에 대한 비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녹봉대신의 가치 이상이었을 것이다. 후쿠오카, 구마모토 나가사키 현의 향토자료와 같은 일본 연구 자료 바탕으로 조선 도공을 둘러싼 도자 정책을 보면, 도자 기술 경쟁은 정치권력 경쟁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이주 후 조선



도공의 기술적 예우는 정치적 예우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결국, 이러한 삼국의 정치경제 흐름에서 보았을 때, 중국 경덕진을 일대로 벌여졌던 도자 기술의 전파가 중국을 넘어 조선,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도자 기술 자체로 볼 때는 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더욱이 일본의 시각에서는 자기 기술 이전의 목적이 일본 내 자체 생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도공들의 기술이 온전히 보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백자 생산 직후 바로 등장하는 ‘이마리야끼’와 같이 일본화하는 과정까지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연구를 통해서 자기 기술 도입의 형태가 유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한자문화권 세계의 정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가타야마 마비. 2018. “조선 시대 김해 도자기로 본 한일 관계.”  
『한국예다학』. 제6호. 1-13.
- 김기윤. 2021. “일본 아리타(有田) 자기(磁器)의 특징과 현주소.”  
『기초조형학연구』. 22권 4호. 29-42.
- 김유정. 2017. “17세기 일본 도자의 등장과 무역시장 변동의 동학.”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구태훈. 2008.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문화』. 서울:  
역사비평사.
- 구로카미 슈텐도. 김창복 외 번역. 나인숙 엮음. 2015.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 서울: 지식과감성.
- \_\_\_\_\_. 2012. 『일본사 Keyword 30』. 서울: 재팬리서치21.
- 방병선. 2003. “심포지움 2: 계룡산의 도자문화; 조선 도자의 일본  
전파와 이삼평.” 『백제문화』. 0(32). 261-271.
- \_\_\_\_\_. 2003. “조선 도자의 일본 전파와 이삼평.” 『백제문화』.  
32(32). 261-271
- \_\_\_\_\_. 2017. “임진왜란 피랍도공 沈壽官家와 도자 연구.”  
『한국학연구』. 63. 129-157.
- \_\_\_\_\_. 2018. “임란 전후 피랍 도공 연구.” 『한국학 연구』. 67.  
109-138.
- \_\_\_\_\_. 2018. “일본 중세 세토요의 중국도자 모방과  
제작기술.” 『한국미술사연구소』. 215-237.
- 신혜원. 2007. “도장(陶匠) 사카이다카키에몬(酒井田柿右衛)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85-97.

- 성시흥. 2018. “17세기 일본 도자기의 성공 요인 : ‘도자기 전쟁’에 대한 재인식과 수업 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우동규. 1987. 「피로도공들의 도자기 발달과 후예들」 『일본학술조사보고서』. 제1회 九州一圓,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5-220.
- 이미숙. 2008. “일본 구주지역의 조선 피로사기장 연구.” 『강원대 박사논문』.
- \_\_\_\_\_. 2010. “조선사기장 李參平의 피납과정과 활동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0(26). 227-248.
- \_\_\_\_\_. 2011. “조선사기장과 사쓰마(薩摩) 도자기.” 『강원사학』. 25(24). 187-205.
- 이상균. 1999. “조선 도공들의 일본 이주 - 일본 살마도자기와 관련하여.” 『한국선사고고학보』. Vol. 6. 157-175.
- 이은미. 2011. “17·18세기 한·중·일 청화발색과 청화기법에 관한 연구 -일본 아리타의 청화기법을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8(1). 133-145.
- 미스기 다카토시. 2001. 『동서 도자 교류사-마이센으로 가는길』. 서울: 놀와.
- 조용준. 2016. 『일본 도자기 여행: 규슈의 7대 조선가마』. (주)퍼시픽도도.
- 전충진. 2001. 『도자기와의 만남: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과 역사를 찾아서』. 리수.
- 혼다 마비. 2003. “壬辰倭亂 前後의 朝日 도자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沈壽官. 1975. 『日本のやきもの薩摩』. 淡交社.

片山まび. 2005. 「豊臣秀吉의 조선침략과 肥前도자-陶器를 중심으로」  
『한·일 도자문화의 교류양상』 경인문화사.

## 일본외교의 ‘도덕적 현실주의’: 피폭체험의 외교담론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송승윤

성균관대학교

### 들어가며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1967 년 천명한 ‘비핵 3 원칙’ 이래 일본은 ‘세계 유일 피폭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평화 애호국가(peace-loving state)’라는 외교브랜드를 만들고 발전시켜왔다(Oros, 2018, 232). 일본의 그러한 노력은 다자 간 비핵화 레짐에 참여하거나 유엔총회와 같은 무대에서 핵군축 및 비확산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국제사회의 공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박영준, 2009, 36). 일본은 1994 년부터 1999 년까지 유엔총회에 “핵무기의 궁극적 폐절을 향한 핵군축 관련 결의”를 제출해왔고, 2000 년과 2004 년 유엔총회에서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절에의 도정”을 제출하여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켰다. 특히 2009 년에는 이전까지 핵군축

결의안에 반대해오던 미국이 공동제안국으로서 일본과 함께 결의안을 가결시키기도 했다.

일본의 핵무기 관련 결의안 제출은 2010 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2017 년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기권한 것에 대해 당시 보수야당이 문제제기한 바 있다. 북핵 규탄이 포함된 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한 것을 두고 안보적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결의안에 일본의 원폭 피해사실만 강조되어 있어서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2015 년부터 발의해온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 결의안에는 원폭 피해자라는 뜻의 일본어 ‘히바쿠샤(被爆者)’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엔 이 용어를 국제공용어화, 일본의 피해자성을 국제무대에서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한겨레, 2017). 이 해프닝은 일본의 피폭체험과 피해자 정체성 호소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문제시된 의미심장한 사례이자, 아래로부터의 민간 기억(피폭자의 증언)에 호응하여 각 국민국가가 승인하고자 한 공식기억이 탈식민 동북아 공간에서 충돌한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010 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화된 일본외교의 공세적 전환은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품게 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외교가 전후 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현대’로 이행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sup>1</sup>, 총리 개인의 신념이나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주목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전전(戰前)으로의 퇴행인 것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모두 일본외교가 전후 시대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데에 주목하여 일본외교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치인이 사용하는 공식 외교언어에서 일본 자신의 도덕적 확신과 피해 의식만큼은 일관되게 두드러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이와 같은 자기규정은 피폭체험의 내면화라는 전후의 정신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기존 논의들이 전후와 현대의 단절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고, 전전 - 전후 - 현대를 아우르는 일본외교 정체성의 연속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늘날 일본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사상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국제정치학이 전통적으로 정의 내려온 일본의 안보정체성(security identity)을 비판적 일본학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일본정신사의 연속과 단절’에 주목하여 일본외교 정체성을 평가해온 기존의 논의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일본의 외교적 정체성을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에 기반한 ‘도덕적

---

<sup>1</sup> 일본사회에서 ‘전후’와 ‘현대’의 구별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일본 지식사회에서는 종전 50주년이었던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른바 ‘탈전후’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라 ‘전후’는 종전부터 1995년까지를, ‘현대’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현실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2010년대 일본외교의 전환이 전후 평화주의로 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이 예비하고 있었던 독특한 내셔널리즘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전후 내셔널리즘과 평화담론은 모두 피폭이라는 일방적인<sup>2</sup> 파괴의 경험을 제외하고 논해질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관점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평화기념식과 전국전몰자추도식의 총리 연설문(2005~2023)을 통해 일본외교의 정체성이 어떻게 언어화 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전후와 현대의 단절

---

<sup>2</sup> 전후 일본에서 '전사자'라는 호칭은 '전쟁에서 전사한 전투원'에 한정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종교학자 니시무라 아키라는 공습이나 원폭 등에 의해 죽은 비전투원인 '전재사자(戰災死者)'까지 포함한 표현으로서 '전쟁사자'를 제안하였다(이영진, 2018, p.4에서 재인용). 본문의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구별을 염두에 두면서, '전사자'들이 전투행위와 직접 연루되어 있어 전쟁-가해자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반해 원폭 등에 의한 민간인 '전재사자'들은 보다 '순수한(일방적인)'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용한 것이다.



일본의 외교 행태는 대단히 특이한 현상으로서 국제정치학의 오랜 탐구 대상이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일본의 국력 신장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위협)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했다(Waltz, 1993). 그러나 일본이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의 예상과 달리 군사대국의 길을 걷지 않자, 국제정치학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본’이라는 특이사례는 90 년대에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이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Hagström, L., & Gustafsson, K., 2015, 4-5). 일본 케이스를 두고 카첸슈타인이나 토마스 버거 같은 초기의 ‘규범적 구성주의자 (norm constructivists)’들은 일본의 국내규범과 문화에 주목했다. 규범과 문화는 매우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일본의 비핵 정책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은 일본의 ‘평화 애호 문화’를 통해 잘 설명되는 듯 보였다.

아베 2 기 내각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집단적 자위권 용인, ‘미일 안보가이드라인 2015’ 공표, 11 개 안보법제 재편 등을 통해 대외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자(박영준, 2015) 구성주의의 설명이 도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미국의 아시아정책 변화가 일본 보통국가화의 원인인 것으로 보였고,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의 설명이 다시 힘을 얻는 듯했다.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규범과 문화가 ‘잘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는 초기 구성주의의 전제를 수정하여 일본외교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관계론적(relational)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의 정체성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문화나 정체성을 탄력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Hagström, L., & Gustafsson, K., 2015). 이들은 일본이 주변국들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주목하여 2010 년 일본외교가 일시적 조정국면을 겪는 것으로 보았다. 일본의 평화주의 내러티브가 갖는 ‘서사적 힘’(narrative power)에 신뢰를 보내며 평화주의의 지속을 예상하기도 했다(Hagström, L., & Gustafsson, K., 2019). 그러나 그들조차 최근 ‘학문적 논쟁은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를 온전히 설명하는데 실패’했다며 ‘일본 평화주의의 사망(Japan’s Pacifism is Dead)’을 선언했다(Gustafsson, K., Hagström, L., & Hanssen, U., 2023, 151).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대외행동을 제약하던 모든 요소가 제거되었으며, 일본이 할 수 없는 안보적 행동은 거의 없어졌다’는 이들의 진단은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의 최종 실패를 선언하는 듯하다.

이처럼 주류 국제정치학은 어느 경우이든 일본외교가 전후 평화주의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구성주의자들은 일본의 정체성이 왜 갑자기 변화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현실주의자들은 이전의 전후 평화주의가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일본의 국내정치 동학이나 지도자 개인의 역사수정 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지만 이는 단지 현상기술적인 설명일 뿐이다. 현실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은 모두 전후 일본과 현대 일본의 단절을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안보정체성의 본질을 내셔널리즘으로 보면, 2010년대 일본 외교의 전환은 전후 평화주의로부터의 일탈이나 단절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총리가 주도하는 ‘관저(정치)외교’가 본격화되었다는 진단과 달리(서승원, 2009; 이주경, 2021), 일본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을 호명하는 구조(내셔널리즘) 자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것이 일본 대외정체성의 지속적인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입론을 위해서는 먼저 현실주의 대 구성주의의 틀로만 이해되어온 기존의 ‘일본 외교정체성 논쟁’을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일본적인 담론 구도를 통해 재정리해야 한다.

## 일본외교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상인과 수도승

### 무사상(無思想)의 외교

일본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19세기 이래로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대동아공영권 사상과 문명개화론, 발전과 협조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고민해왔다(이오베 마코토, 2003, 11-22). 이리에 아키라(入江昭)가 일본외교를 ‘무사상(無思想)의 외교’라고 지칭했을 때, 그것은 일본 외교가 고유한 정체성 없이, 대외여건에 따라 부화뇌동해 왔다는 진단이다. 이리에는 일본의 ‘무사상의

외교’를 ‘민간의 이상주의’와 대비되는 ‘정부의 현실주의’라고 보아 일본의 외교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지도자가 철학 없이 ‘무사상의 입장에서’ 상황관리와 현안처리에 급급하여 외교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일본 외교의 원류가 안고 있는 특징’이다(이리에 아키라, 1993, 42). 민간은 정부의 ‘외교관념의 무사상성에 대한 반동’으로서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어 서양에 대치해야 한다’는 형태의 이상주의적인 ‘아시아주의 사상’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의 현실주의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일본외교를 지배했던 것은 1930년대뿐이고, 그것이 외교의 지도원리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41년 전후의 몇 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리에의 설명이다(이리에 아키라, 1993, 142). 이리에는 90년대에 출간한 저서에서 앞으로의 일본외교가 ‘전략 수준을 넘어선 사상, 문화상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독선적인 아시아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문명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고, 자유와 인권의 확장을 목표로 아시아의 사람들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협력하는’, ‘신지구주의’ 사상을 일본외교에 주문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이리에 아키라, 1993, 304). 이리에는 일본 외교가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현실주의에 기울어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칼더(Kent Calder)는 80년대 일본의 통상정책에 주목, 일본을 ‘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로 규정하여 일본 외교가 대외여건에

반응하는 소극적 행태를 띤다고 보았다. ‘반응형 국가’란 국내적 동기나 국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펼치지 않으며 외부의 압력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일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칼더는 일본의 철저한 수동성의 원인으로 미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의존과 함께 의사결정 구조의 분절화와 이익집단의 압력을 들고 있다(Kent Calder, 1988). 사무엘스와 하긴보탐(Samuels & Heginbotham)은 일본이 군사안보 보다 기술경제적 관심에 치중하는 것을 상업적 현실주의(mercantile realism)로 정의하여 일본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를 구조적 현실주의의 틀 속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저자들은 일본의 통상국가적 정체성이 에도 시대 상인들의 아첨가적인 기질과 습속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으로 보았는데(Samuels & Heginbotham, 1998, 201) 이는 ‘무사상성이 근대일본 외교의 원류’라는 이리에의 평가와 공명하는 것이다.

이리에가 포착한 일본외교의 ‘무사상성’은 양면적이다. 이리에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일본 외교가 국제정치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구미 신현실주의자들의 시각과 닮아 있지만, 동시에 일본 외교의 고유한 정체성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의 역동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리에가 보기에 1930~40년대 일본외교는 다름 아닌 ‘민간의 이상주의자들’에 의한 국내정치의 역동성이 대외적 현실주의를 압도한 결과였다. 일본외교가 고유한 정체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외교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일본의 대전략을 둘러싼 일본 국내정치세력의 분화에 주목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일본 외교의 ‘무사상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무엘스는 일본 국내정치에서 대두되었던 2000년대 국가 정체성 논쟁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일본의 대전략 논쟁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해왔던 다양한 입장의 경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Samuels, 2007). 중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서구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근본적 가치들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본외교의 무사상성과 수동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케네스 파일(Kenneth Pyle)은 아베 정부 대외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목도하면서, 2010년대 이후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쇠퇴가 일본 외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Kenneth Pyle, 2018). 경무장과 경제중심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일본 전후 외교의 준거 틀인 ‘요시다 노선’의 물질 토대가 미일동맹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였다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 국면은 요시다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일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아베의 적극적인 외교행보는 일본외교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며, 아베가 우익 신념형 지도자라는 일각의 시선과 달리 아베는 철저히

실용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지향한다고 평가한다. 이 경우 역시 일본외교의 변화가 대외환경의 변화로부터 비롯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베가 ‘무사상’의 정치인이라고 봤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평화국가론

일본외교를 바라보는 또다른 주요 입장은 일본을 평화국가로 보는 시각이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평화 애호 국가’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평화로운 선진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Kim, 2010). 일본의 국가정체성으로서 ‘평화주의’는 일본의 ‘핵 알레르기’, 국민적인 반전(反戰), 반군(反軍) 관념 및 평화헌법에 대한 지지여론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일본외교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는 ‘무사상의 외교’ 옹호자들은 일본 외교의 속성이 근세 시기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에 주목한다. 반면, ‘평화국가론’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과 원폭 피해 경험을 계기로 역사적 교훈을 얻어 국가이념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후 외교의 독특성과 과거와의 단절성을 강조한다. 일본 국민들이 전쟁 중 체험한 공습과 피폭의 체험, 군국주의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는 반감, 학도병들의 군대 체험 등(남기정, 2014)으로부터 형성된 염전과

반군의 심성이 전전과 전후 외교를 결정적으로 단절시킨다는 것이 평화국가론의 기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국가론자들은 제도화된 전후 평화주의의 내구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일본외교정책이 비탄력적이고 경로의존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구성주의자들이다. 카첸슈타인(Katzenstein)은 2 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국민들의 ‘사회적 학습의 심도’가 평화 우호적인 공공여론을 만들었고, 이것이 일본의 대외행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보았다(Katzenstein & Okawara, 1993; Katzenstein, 1996). 토마스 버거(Thomas Berger)는 일본의 경험을 같은 패전국인 독일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패전의 경험이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독특한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 관념을 형성하도록 했는지 분석한다. ‘일본이 재무장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독일과 달리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군대 자체에 대한 반감을 광범위하게 공유했다는 데에 주목하면서 일본이 근미래에는 군사대국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Berger, T.,1995,135-137). 같은 물음을 2010 년대의 맥락에서 검토한 오로스(Andrew Oros) 역시 일본이 형성해온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가 안보 정체성 으로서의 국내적 반군사주의(domestic antimilitarism)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아 일본의 군비확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Oros, 2017).



사카이데쓰야(酒井哲哉)는 일본 내에서의 전간기 국제 정치학 수용사에 초점을 맞추어 전전 및 전중과 구별되는, 전후 일본외교의 독자성을 부각한다. 사카이에 따르면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을 전간기 이상주의 국제정치학의 구현으로 보는 것은 요코타 기사부로(横田喜三郎)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이다. 전후 지식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국제정치학은 요코타식의 월슨주의적 집단안전 보장론과 이상주의적 세계정부론이 아니라 다바타 시게지로(田畑茂二郎)가 주목한 바텔(Vattel) 식의 ‘진보적, 항의적 주권개념’이었다. 요코타가 지지했던 집단안전보장은 냉전 체제 속에서 전면 강화론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구미의 반공주의적 이상주의에 가까워 일본 국제정치학의 주류였던 항의적 주권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 전후 평화론의 주도권은 요코타가 아니라 마루야마 마사오 등이 이끌었던 ‘평화문제담화회(담화회)’가 쥐었다는 것이 사카이의 평가이다. 평화문제담화회는 전면강화론을 내걸고, 국제연합이 사실상 ‘반공 십자군’으로 기능할 것을 우려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에 의해 지탱되는 주권 개념을 갖고 보편주의 비판, 시민사회론, 반제국주의론의 세 가지를 통합하는 전후 외교론’(사카이 데쓰야, 112)을 형성했다. 사카이는 ‘월슨주의가 파탄한 1930 년대에 청춘을 맞이했던 세대의 복잡한 심정에서 생겨난’(사카이 데쓰야, 113) 진정한 의미의 평화론으로서 전후 평화주의의 독자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일본 국제정치학의 시도들 역시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무사상의 외교론’이 일본을 냉정하고 효율적인 ‘생계형 상인’로 본다면, ‘평화국가론’은 일본을 전의를 상실한 ‘금욕적인 수도승’으로 본다. 하지만 일본을 상인이나 수도승으로 보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편견이 작동한 결과일 뿐이다. ‘무사상의 외교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일본의 군국 주의 경험을 지나치게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의 구체적인 역사체험을 ‘상인 기질’과 같이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다루고, 대외노선을 둘러싼 국내의 논쟁 구도 역시 현재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2010 년대 일본외교의 전환과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어설픈 답변에 만족하거나, 케네스 파일의 경우와 같이 외부에서 변화의 원인을 찾게 되어 일본사회의 독특성에 기반한 내재적인 설명을 포기해야한다. ‘평화국가론’은 일본의 전쟁체험을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전쟁을 전후로 하여 일본 외교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체험에 비교적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후 평화주의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어 일본의 외교적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가령 평화국가론자들은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 언설을 내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결국 일본외교 전환의 원인을 국제구조의 변동과 같은 외부요인으로부터 찾게 되어 비물질적인 관념과 규범에 방점을 두겠다는 스스로의 전제를 배신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전전과 전후를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는 평화국가론은 탈냉전기 동북아시아 시공간의 탈식민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역사학 분과에서 시도되어온 ‘기억의 정치학’을 참조하여 ‘전후 평화주의’의 중층성을 드러낼 필요가 제기된다.

### 기억의 정치학:

#### 마루야마 마사오의 전후 내셔널리즘과 대항기억들

역사학에서 기억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탈냉전 이후, 거대서사가 몰락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들의 증언과 서사가 아래로부터 솟구치기 시작한 것과 관련된다. 기억의 역사학은 내셔널리즘을 국민국가의 공식기억과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기억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기억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은 지속적으로 근대적인 의미의 ‘일본 민족’을 추구해왔다.

다른 국가들은 1950년대만을 ‘전후(postwar)’라고 지칭하고 그 이후를 ‘현대(contemporary)’로 지칭하는데, 일본만은 ‘전후(sengo)’라는 표현을 9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후는 과거의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평화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현대 일본사회의 기본전제들을 구성하는 ‘중층적 기억’으로서의 ‘장기 전후’였다(Gluck, 1993, 93). 전후일본의 ‘공식기억’은 마루야마 마사오 버전의 ‘전후 내셔널리즘’이었다. 일본 ‘전후 내셔널리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종합으로 특징 지어지는 ‘올바른 근대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중(戰中)과 전후를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이 정상적인 근대화 경로로부터 벗어나 패망한 원인은 내셔널리즘이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와 동일시되는 바람에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루야마는 30 년대와 40 년대를 우회하여 에도 시대의 유교사상으로부터 건강한 근대성의 맥아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한 근대적 개인의 ‘애국’을 전후 일본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국가정체성으로 제시했다. 평화헌법 제 9 조 역시 전후 일본의 재출발을 위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기반이었다. ‘평화나 도덕의 주장’이 ‘일본에게 남겨진 마지막 국가정체성의 기반’이었기 때문이다(오구마 에이지, 2019, 193).

그러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증언과 서사가 투쟁하는 ‘기억의 장소’(Pierre Nora)에서, 공식기억은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기억에 의해 도전 받기 마련이다. 마루야마는 전후 재건의 이데올로기로서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제시하면서 전쟁체험을 추상화하고 비인격화했지만, 전쟁체험은 매우 구체적인 죽음의 기억을 우회하고는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프란지스카 세라핌(Franziska Seraphim)은 개인의 전쟁 기억과 전몰자에 대한 애도문화가 일본의 공식기억에 편입되거나 그것과 긴장관계를 이루는 양상을 이익집단 정치 동학을 통해 분석했다.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폭 희생자의 기억이 일본의 공식기억에 균열을 일으키는 과정을

분석했다. 일본은 원폭 문제에 있어 줄곧 피해자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을 ‘국유화’하고자 했는데, 조선인 피폭자의 증언이 등장하면서 ‘히바쿠샤 서사’가 취한 기억의 선별과 선택적 침묵, 그리고 식민주의의 잔재가 폭로되었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는 전후 일본이 표방하는 반핵 평화주의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었다며 일종의 탈식민주의적 비판을 제기한다. 포스트 제국의 전후 내셔널리즘이 전전과 전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과정에서 제국이 병합하고자 했던 조선인과 오키나와인 등을 배제했다는 비판은 피폭자 서사의 국유화 과정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대내적 민주주의와 대외적 평화주의를 통해 관념으로써 전후 시대를 구축하고자 했지만, 실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전쟁시대에 대한 민간의 애도 기억과 지속적으로 뒤섞이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그 본질은 다름아닌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였다.

1990년대에는 기억을 동원하여 전후와 구별되는 일본의 ‘현대’를 구획 짓는 것이 일본 지식사회의 당면 과제였다. ‘종전 50주년’이었던 1995년 출간된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의 〈패전후론(敗戰後論)〉은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패전후론〉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지기 위한 민족 주체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2천만 희생자에 앞서 일본의 3백만 전쟁사자들에 대한 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 어찌 되었건 일본이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아시아의 2천만’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전후론〉의 관점은 우익 역사수정주의에 비해 진일보한 인식일 수 있다. 하지만 하르투니언(Harootunian)은 가토가 ‘식민주의적 위계 구조를 죽은 자들 사이에서 되살리고 있다’며 극우나 다름없다고 보았다(Harootunian, 2000, 727). 〈패전후론〉의 핵심 문제의식은 일본에서는 자국민 ‘전사자 숭배’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대국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일본이 전후시대를 끝내고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희생자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르투니언은 기억과 역사를 구별하면서, 현대 일본의 우파 이데올로그들이 반복적으로 ‘기억’을 동원해서 ‘역사’를 부인하고자 하는 구조를 발견한다. 이들은 ‘진정한 기억’을 통해 ‘역사’를 수정하여 ‘전후’를 종결시킴으로써 현대 일본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한다(Harootunian, 2000, 725). 이처럼 일본사회에서 전쟁에 대한 기억과 전사자에 대한 애도는 현재적 요청에 의해서 반복 소환되어 일본인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아를 구성하는 기제였다.

일본에서 끊이지 않는 ‘애도와 기억의 정치학’의 본질은 강력한 근대지향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90 년대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후 시대부터 지속된 것이었다. 탈식민 동북아시아 ‘기억 체제’의 복잡성은 일본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가 외교적 정체성으로까지 작동하게 했다. 식민화와 탈식민 및 국민국가 형성의 경험 속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이때 제 2 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활용되었다. 냉전 해체 후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에서 억압되었던 ‘아래로부터의 기억’들이 재부상하고, 민주화된 한국과 대국화한 중국이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공식기억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전후 일본이 선택적 망각을 감수하면서 통합해왔던 ‘동북아시아 기억 체제’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정치적 수준의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과거사 갈등’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Fujitani et al, 2).

##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와 도덕적 현실주의

### 일본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다층적인 기억과 증언이 투쟁하는 ‘기억의 장소’로서 내셔널리즘을 역사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사자를 숭배하고 애도하는 행위가 근대 국민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종교의 핵심이라는 인류학의 시선을 참조하면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의 근대지향적 본질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 시민종교는 무의미한 죽음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위대한 희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민족이나 조국과 같은 세속적인 실체에 신성한 지위를 부여한다(임지현, 2021). 국민국가는 추모의례와 기념식을 통해 이를

제도화한다. ‘근대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묘지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언명에서 알 수 있듯, 전사자 숭배와 시민종교야말로 근대 민족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임지현은 여기에 ‘지구화’와 ‘보편 인권규범’의 등장이라는 맥락을 반영하여 근대적인 전사자 숭배와 구별되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도입한다. 과거 집단적 숭배의 대상은 고전적인 민족주의 영웅에 한정되었고, 이 영웅적 죽음은 엘리트주의적 순교로 승화되어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연화 했다. 그러나 지구화 시대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는 전쟁영웅이 아닌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까지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죽음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 냉전 시대를 지배했던 진영화 된 피해자 서사는 탈냉전을 계기로 보편적 도덕의 언어로 재편되었다. 임지현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유대민족만의 비극이 아닌 인류 전체의 고통 기억으로 보편화한 스톡홀름 선언이 있었던 2000 년을 ‘지구적 기억체제의 0 년’으로 설정한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는, 학살과 전쟁범죄를 인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단죄하는 21 세기적인 인권 감수성의 지평 위에서, 무엇보다 도덕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임지현의 입론이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핵심은 집합적 피해자로서의 도덕적 우월감에 있는데, 국민국가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공식기억들 사이에서 끝없는 ‘도덕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또다른 내셔널리즘의 강화가 나타난다. 죽음의 민주화와



함께 나타난 ‘순교의 국민화’로 인해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내셔널리즘은 오히려 강화된다.

일본은 패전의 우울과 고통 속에서 재빠르게 자신의 지위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옮겨 놓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강화했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정치종교적 시도가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기억과 결합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깊은 풀뿌리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그 첫번째 축은 서구세계에 대한 인종주의적 피해 의식이었다.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서양식민주의의 피해자’라는 인식은 근대초기부터 일본 기층에 만연했다. 일본 민족주의의 출발은 메이지 초기의 저항 민족주의였고, 대동아공영권 역시 미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고 방어하려는 역사적 사명감 속에서 시도되었던 것이었다(임지현, 2021, 242). 이러한 반서구적 민족주의는 패전 이후 인종주의적 피해의식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보기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독일이 아닌 일본에 사용한 것은 서양인의 인종주의적 편견이 작동한 결과였다. 도쿄재판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은 미국이 ‘승자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도쿄재판의 유일한 인도인 판사였던 라다비노드 팔(Radhabinod Pal)이 일본에 대해 보였던 우호적인 입장이야말로 인종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공정한 판단이었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다우어, 2009). 이처럼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치하에서 스스로가 ‘포스트식민주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했다(임지현, 2021, 266).

희생자의식을 강화하는 두번째 축으로서 기억의 ‘탈맥락화’는 ‘분리 - 담론화 - 철학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군국주의 지도자들과 일본의 일반 민중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패전 후 가장 많이 사용된 수동표현은 다름아닌 “다마스레타(だまされた, 속아버렸다)”였는데, 이는 평범한 일본인들이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는 확신이 반영된 언어였다 (다우어, 2009, 633). 당대 일본인들이 전시 동원체제 하에서 군부와 민간이 이루고 있었던 공범성을 망각하고 ‘군부, 군국주의, 체제와 같은 추상’이야말로 진정한 전쟁의 가해자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도자급만을 선별하여 처벌했던 도쿄재판 역시 ‘분리’를 정당화했다. 마루야마 마사오 식의 ‘전후 내셔널리즘’ 하에서 일본의 전쟁범죄는 ‘비정상적인 근대화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으로 ‘담론화’되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군벌, 관료, 관제 단체가 인민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국민의 총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었으며(임지현, 2021), 일본인들은 두 번 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구식의 ‘정상적인 근대화 경로’를 다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후 일본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편 것은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피해 기억을 탈맥락화한 것은 원폭의 압도적 파괴력 자체였다. 원자폭탄의

파괴력에 대한 인식은 당대부터 이미 철학적이고 종교적이었다(다우어, 2009). 나가사키의 경우 특유의 기독교적인 분위기 탓에 희생자들의 사망은 ‘순교’로 쉽게 우상화 될 수 있었다. 임지현은 나가사키의 의사이자 가톨릭 신자였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를 매개로 하여 피폭의 기억이 아우슈비츠의 고통과 병치됨으로써 희생자의식 민족주의가 본질화되고 정당화되었던 사례를 인상적으로 서술한다(임지현, 2021, 369-370).

일본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는 전후 재건과 전몰자에 대한 추모의례를 통해 ‘국민화’됨으로써 완성되었다. 패전 직후 GHQ에 의해 수개월간 지속되었던 검열로 인해 자유로운 추모와 애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범아시아주의적 연사, 죽음, 파괴, 패배 등 전쟁을 연상시키는 주제는 물론, 슬픔과 전사자에 대한 추모도 모두 검열의 대상이었다(다우어, 2009, 523). 점령군의 검열체제 하에서 지연된 슬픔과 애도는 후대에 야스쿠니 신사 초혼제나 특공위령제 등 다양한 정치종교의 형태로 민간과 지역사회에서 분출되었다(임지현, 2021, 139-141; 이영진, 2018). 8 월의 수많은 전쟁기념 행사들 가운데서도 일본총리의 방문이 공식화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주최하는 ‘전국전몰자추도식’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이다. 피폭의 기억은 일본사회의 ‘희생자의식을 더 강화하고 기억의 국민화를 재촉했다’(임지현, 2021, 221). 후술하겠지만 이때 이루어지는 총리 연설은 애도의 대상을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일본인 전몰자에 국한함으로써 ‘순교의 국민화’를 수행한다.

## 도덕적 현실주의

전후 내셔널리즘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현대 일본의 외교적 정체성으로 발현된다고 하였을 때, 그 국제정치학적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보편적 인권 개념이 정립된 국제사회에서 희생자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피해의 기억과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는 광범위한 도덕적 호소력을 지닌다. 근대 민족주의가 일국적 민족영웅의 무공(武功)에 기반해 있었다면, 21 세기 지구적 기억 체제에서 민족주의의 기반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야만적 학살을 혐오하는 보편적 도덕 감수성에 있다(임지현, 2021). 일본이 대외적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경험한 ‘절대 피해’로서의 피폭체험을 강조해온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피해자 정체성을 강조하고 ‘고통에 대한 지구적 공감’을 호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도덕적 강자’로 거듭나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러너(Lerner)는 국제무대에서 국민국가가 시도하는 피해자 정체성의 강조와 ‘슬픔의 외적 투사(grievance projection)’가 가해-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제 3 국의 지지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희생자의식 민족주의가 외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Lerner, 2020, 69-71).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잔인성에 대한 혐오

등 감정이 국제정치학에서 사용되는 것 역시 어색하지 않다(Crawford, 2000; Bleiker, R., & Hutchison, E. 2008). 세계평화를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인은 ‘전쟁의 패자’에서 ‘평화의 승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다우어, 2009)는 기대야말로 전후 평화주의의 본질을 잘 드러내 준다. 요컨대 일본은 보편적 도덕에 호소함으로써 ‘승자’가 되고자 했다. 그렇다면 21 세기적인 맥락에서 일본의 ‘희생자 정체성’은 수세적이고 애상적인 자기규정이 아니라, 외교적 ‘힘’이자 ‘자원’이 된다.

두번째 핵심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본질은 결국 ‘자국중심적 내셔널리즘’으로서, 그것이 보편적 도덕 언어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권력정치적인 속성을 강하게 띠는 것이다. 피해자 정체성은 일견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희생자 서사를 통한 문화적 기억의 공고화와 집단적 소속감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누가 더 큰 피해자인지를 둘러싼 도덕성 경쟁’으로 귀결될 위험을 지닌다. 다름 아닌 한-중-일 3국의 ‘기억 전쟁’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도덕성 경쟁이 현실적인 외교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재배치는 연대와 화해로 나아갈 가능성도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후술할 연설문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피폭체험의 압도감은 일본으로 하여금 기억의 도덕성-경쟁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했다. 실제로 일본의 피해자 정체성은 존재론적 안보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여,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

으로까지 인식하게 했다(Suzuki, S., 2015; Tamaki, T., 2004). 전후 평화주의의 실질이 일국적 내셔널리즘이었다면(오구마 에이지, 2019), 대외적으로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매우 강한 뉘앙스의 정체성 외교나 다름없다. ‘전쟁의 피해자로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힐책의 언어에 가깝기 때문이다.

‘외교담론화 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양면적인 성질을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가 요청되는 바, 도덕성의 권력정치적 활용에 주목한 옌쉐통(Yan Xuetong)의 ‘도덕적 현실주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옌쉐통은 도덕의 기능을 무시해온 주류 국제정치학에 반대하면서 고전적 현실주의에서부터 도덕성은 중요한 외교적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고 주장한다. 주류 국제정치학이 ‘국력’의 구성요소로 제시하는 능력(capability), 힘(power), 권위(authority)는 도덕(morality)과의 관계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되기 때문이다.<sup>3</sup> 국가의 대외행동이 보편적인 도덕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국력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옌쉐통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

<sup>3</sup> 옌쉐통은 이를 “ $CC=(M+E+C)*P$ ”라는 수식으로 간결하게 제시한다(Yan, 2019, 13) “M은 군사력(military), E는 경제력(economy), C는 문화(culture)이고 P는 정치적 조정능력(Political Capability)”인데, 중국사상의 전통에서 정치적 조정능력은 바로 도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옌쉐통은 이 정치적 조정능력을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 파워와 구별되는 것으로 제시한다(13-14).

사례를 ‘일본이 국제적 도덕 표준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결과 정치적 리더십이 손상된 사례’로 제시한다(Yan, 2019, 20). 그러나 엔쉐통이 간과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히로시마/나가사키 평화기념식 및 전국전몰자추도식이 모두 국민국가의 추모 의례로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기제라는 점에서는 동류 라는 사실이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경우와 달리 히로시마/나가사키 평화기념식은 ‘반핵 평화주의’라는 보편적 도덕 코드를 과시하는 장으로도 활용된다.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 국제적으로 피해자성을 내세우면서 ‘도덕적 강자’로 행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도덕적 현실주의를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구도 속에서 이해할 경우, 엔쉐통이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도덕성의 기반은 중국 전통사상이 아니라 21 세기 지구적 기억 체제에서 새롭게 떠오른 보편적 인권규범과 희생자에 대한 공감의 분위기였던 것으로 봐야 한다. 일본 전후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로 규정하는 이러한 접근은 전전과 전후, 전후와 현대의 불연속성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2010 년대 일본외교의 전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일본외교의 전환은 대외변수나 국내정치 동학에서만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내셔널리즘의 속성 속에 내재되어 있던 피해자 정체성이, 21 세기 지구적 기억체제의 대두와 함께 주류화 된 ‘희생자 서사’와 결합하여 경쟁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현실주의의 틀 속에서, 일본의 민족주의와 평화주의가 피해자로서의 도덕적 확신에 기반한 권력 정치적 속성을 지닌다고 이해하면 일본 보통국가화의 복합적인 속성도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평화’라는 보편적 도덕의 언어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세계에게는 국제주의적(internationalistic)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시아의 피해국’이었던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피해자 정체성(=도덕적 강자성) 호소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국가화 시도의 권력정치적 실질을 더욱 선명하게 보아내는 것이다.<sup>4</sup>

## 일본 총리 연설문의 언어 분석

일본정부의 공식 담화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흔히 사용되어 왔다. 1993 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1995 년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

<sup>4</sup> 엔쉴통의 ‘도덕적 현실주의’는 미중 패권이행 국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정당화하는 관변담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서정경, 2022). 이 글이 일본의 대외행동을 도덕적 현실주의로 설명하는 것은 일본이 동북아 역내에서 사실상 ‘중국처럼’ 패권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함이다. 중국의 ‘자칭’ 평화부상이 서방 세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도 주변국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독선적인 ‘역내 패권주의’와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후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나 행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했다. 한국 언론도 일본 총리의 구체적인 언어표현과 뉘앙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본정부의 과거사 인식을 문제삼아 왔다.

일본외교의 전환과 관련하여 일본 총리의 외교 언어를 분석하는 경우 주로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되었던 전후 70주년 기념 연설(아베 담화)에 주목한다. 아베 담화는 현재 일본외교의 공식 슬로건인 ‘적극적 평화(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가 처음 등장했던 담화로, 흔히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을 보여주는 문헌으로 평가되어 왔다. 박찬승(2016)은 아베 담화에 나타난 과거사에 대한 소극적이고 불분명한 사죄 표현과 자국 중심적인 애도에 대해 한국, 중국, 미국, 타이완이 보인 반응을 분석하면서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의 충돌 양상을 분석했다. 최순욱(2016)은 아베 담화의 문학적 수사에 주목한다. 아베가 과거사에 대한 주체적 사과를 우회하고 자신의 우파적 비전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문에 가까운 담화를 내놓았다는 평가다. 반면, 이정환(2019)은 아베 담화에 역사수정주의적인 성격보다 국제주의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아베 담화가 상정하고 있는 청자가 아시아의 피해국가들이 아니라 미국이었다고 보면, 아베 담화는 일본 주의적인 우파적 신념을 강조한다기보다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혁태(2009)는 일본 정치권에서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이 정착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것이 곧 피폭체험을 국민화하고 일본국민을 피해자화하는 과정 이었다고 정리한다. 피해자 내셔널리즘이 전후 평화주의의 한 축을 이룬다는 권혁태의 관찰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 글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매년 열리는 국가적 추모행사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평화기념식과 전국 전몰자추도식에서의 총리 연설에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평화기념식과 전몰자추도식은 애도와 추모의 장으로서 ‘애도의 언어’가 바탕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총리 연설문의 언어는 ‘기억의 탈맥락적 결합’을 통해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스스로를 ‘전쟁의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세계평화라는 도덕의 언어를 내세운다. 이 글은 2005 년부터 2023 년까지의 해당 기념식의 모든 총리 연설문을 분석하여 기억의 결합과 배치가 변화하는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한다.

## 히로시마/나가사키 평화기념식의 언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평화기념식 연설문은 전국전몰자추도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편이다.

원자폭탄이라는 ‘절대 악’에 의한 압도적 피해를 경험한 장소가 주는 경건함과 숙연함의 분위기가 평화기념식의 기본 분위기를 이룬다. 같은 피폭지임에도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분노하는 히로시마, 기도하는 나가사키(怒りの広島, 祈りの長崎)”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히로시마는 정치적-좌파적-반미적인 반면, 나가사키는 명상적-종교적-타협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총리의 평화기념식 연설문에서는 그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같은 해의 히로시마 연설문과 나가사키 연설문은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설문 분석 시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차이가 아니라 내각 별, 연도 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5 년부터 2023 년까지의 평화기념식 연설문에서 매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일본이 피폭의 체험을 ‘교훈 삼아’ 국제사회에서 지속하고 있는 비핵화의 노력이다. 전몰자추도식 연설과 달리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평화기념식에서 총리는 단 한 번도 피폭의 원인과 정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피폭의 기억을 탈맥락화하고 일본의 피해자성을 강화한다는 비판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비판이겠으나, 어찌 되었건 수십만명의 자국 민간인이 사망했고 현재까지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국의 총리가 다른 곳도 아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을 맞을 만했던’ 정황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지도 모르겠다. 대신 ‘히바쿠샤(被曝者)’라는 범주를 일반화하여 피폭자의 범위를 일본 국민에 한정하고 조선인 피폭자 등

다른 인종의 피해자들을 주변화 하는 상징폭력은 명백하게 비판할 여지가 있다.<sup>5</sup> 타지의 원폭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본정부의 관료제적 승인 시스템에 편입되어야 하는 아이러니(오은정, 2013)는 총리 연설에서도 확인된다.

일본 정부는 원자폭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 의료, 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개발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정부는 해외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가 일본의 외국에 위치한 기관을 통해 금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생존한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6 년 8 월 9 일 나가사키 평화기념공원, 고이즈미  
준이치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법이 시행된 지 20 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은 늘어가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건강, 의료 서비스 및 복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구호 조치를 철저히 발전시키겠습니다.

(2015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아베 신조)

다음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이다. ‘세계 유일피폭국’이라는 표현은 모든 총리의 연설문에서

---

<sup>5</sup> ‘히바쿠사’ 표현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Yoneyama (1999), 오은정(2013), 오은정 (2018) 참고.

빠지지 않고 매해 등장해온 표현이다. ‘유일피폭국’이란 말은 ‘세계에서 오직 일본(인)만 피폭되었다는 뜻’으로, 여기엔 피폭 체험의 역사적 계승과 반핵평화주의의 주체를 일본으로 한정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권혁태, 2009, 80-81). 이 표현의 정치적 부당성에 민감했던 총리는 아무도 없었다.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2016 년의 연설문에서는 노골적으로 미국을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지칭하며 미국의 가해자성을 부각했다. 아베는 그 다음해인 2017 년에도 오바마의 방문 사실을 연설문에서 언급한다.

원자폭탄의 고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경험한 우리는,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슬픔을 견디고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우리의 조국을 재건하고 나가사키를 아름다운 도시로 복원했습니다. ... 우리 일본인은 전쟁에서 핵의 파멸을 경험한 유일한 인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패없이 이루어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 년 8 월 9 일 나가사키 평화기념공원, 아베 신조)

지난 5 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의 대통령께서 원자폭탄의 현실을 목격하고, 원자폭탄 피해자들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할 것을 세계에 호소하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그러한 세계를 추구할 용기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2016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아베 신조)

세계 유일피폭국임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매해 등장하는 또다른 표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한 전후의 노력에 대한 찬사다. 예외적으로 그런 표현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은 2011 년 평화기념식 연설문이었는데, 이는 당시 대지진의 여파 속에서 성공적이었던 과거의 재건 사실을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의 2011 년 연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원폭 피해의 기억과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의 기억이 ‘핵’을 매개로 결합하는 대목이다. 간 총리는 연설 말미에 동일본 대지진을 언급하면서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지진 복구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하여, 일본이 이 일을 계기로 ‘핵에너지의 안전성 미신’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일본은 에너지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핵에너지의 "안전성 신화(security myth)"를 믿었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모든 인류의 새로운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운 것을 세계 인민과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2011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간 나오토)

서로 다른 맥락의 ‘피해’ 기억이 총리의 언어 속에서 병치됨으로써 일본 국민의 희생자성은 강화되었다. 병치의 위험성은 각 사건의 구체적 맥락이 사상(捨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폭피해는 20 세기 일본에 의한 태평양 전선 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고, 2011 년 동일본대지진은 순수한 자연재해에 가까웠기 때문에, 압도적 재난 상황이었다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두 사건은 서로 참조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에게는 ‘고통의 체험’과 ‘일본사회의 종언’이라는 시대감각 속에서 두 사건을 관련 짓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고, 이것이 총리의 연설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요컨대 일본인들에게 동일본대지진은 21 세기판 원자폭탄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원폭피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억을 추상화, 관념화 한다는 것이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국제정치적 핵심은 자민족의 피해자 정체성을 부각함으로써 도덕적 강자성을 호소하는 것이다. 평화기념식 연설에서는 매해 거의 빠지지 않고 당해의 각종 비핵/군축 관련 국제회의와 외교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 주목해본다면, 총리의 평화기념식 연설은 ‘애도의 언어’라기보다 반핵 평화에 대한 도덕적 의지를 드러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핵 관련 발언권을 확대하는 ‘영향력 외교’의 언어에 가깝다.

저는 지난 해 유엔 총회 핵군축 고위급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핵군축 결의안은 처음으로 100 개 이상의 협조국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되었습니다. 종합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조속한 발효를 향해 나아가면서, 일본은 또한 관련 국가 정상들에게 직접 결의안 비준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핵군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 월에는 이곳 히로시마에서 비핵화 및 비확산 이니셔티브 장관 회의(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nitiative Ministerial Meeting)가 개최되었습니다. 이곳 피폭지에서 우리의 생각이 세계로 강력하게 전해졌습니다. 내년은 피폭 70 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며, 5 년마다 개최되는 핵확산방지조약 총회(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 년 8 월 6 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아베 신조)

일본의 외교적 정체성이 ‘도덕적 현실주의’라고 본다면, 이는 특정 이슈(핵)를 선점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식의 틈새외교나, 비군사적인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매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소프트파워 외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현실주의의 틀에서 도덕성은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기능하여 해당 국가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평화기념식 연설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화헌법수호 의지와 비핵 3 원칙의 언급여부다. 평화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는



정권에 따라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비핵 3 원칙만큼은 모든 내각에서 일관되게 언급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비핵 3 원칙은 국내 차원의 개헌에 대한 정치적 알리바이로 기능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모든 양상이 정치적 현실주의의 틀 속에서 설명되는 것은 물론이다.

<표 1. 히로시마/나가사키 평화기념식 연설문 분석>

2016	아베 신조 2기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오바마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언급	
2017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	X	○	○	오바마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2016) 언급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오바마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2016) 언급	
2018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	X	○	○	히로시마 군속 회의 개최 언급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나가사키 군속 회의 개최 언급	
2019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	X	○	○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2020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	X	○	○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2021		스가 요시히데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	X	○	○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2022	기시다 후미오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	X	○	○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2023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	X	○	○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	X	○	○		

(전몰자 애도, 원폭 피해자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은 매해 언급. 전쟁 반성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

## 전국전몰자추도식(全国戦没者追悼式)의 언어

평화기념식보다 정치적 긴장도가 높고 상징성도 커서 더욱 주목받는 기념식은 천황이 참석하는 전국전몰자추도식이다. 총리의 전몰자추도식 연설의 경우에도 국가적 추모의례답게 전몰자에 대한 애도와 일본의 전후 재건 및 발전사,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이 매해 언급된다. 그러나 히로시마/나가사키 평화기념식과 달리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는 표현이나 ‘평화헌법’, ‘비핵 3 원칙’과 같은 정치적 의제는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무엇보다 전몰자추도식 연설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현의 등장여부다. 한국의 언론에서도 매해 이 대목에 주목하여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우려를 표하곤 한다. 전몰자추도식에서의 반성 및 사죄표현은 정확히는 사죄가 아니라, 회한과 애도의 대상을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로까지 넓히는 것이었다.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 해당 문단은 아베 신조 2 기 내각 출범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문단이였다.

지난 전쟁에서 일본은 많은 국가의 사람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이로 인해 희생된 전쟁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feelings of profound remorse and sincere mourning)을 표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베 신조 2 기 내각부터 해당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기존에 없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등장(2013, 2015)하거나, 특유의 감상주의적인 표현(2013, 2014)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그대들의 소중한 희생 위에 건설된 것입니다. 그대들은 사랑스러운 자식과 아내를 생각하며, 남겨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복을 기원하며, 고향의 산과 강이 푸르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소중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 제 2 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평화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2013 년 8 월 15 일 68 주년 전몰자 추도식, 아베 신조)

‘순교의 국민화’ 혐의는 희생자를 지칭하는 표현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라고 지칭되었던 희생자들이, 아베 신조 1 기 내각부터 관습적으로 일본인 희생자의 숫자를 나타내는 ‘3 백만명’이라는 수식어를 끼고 등장하다가(三百万余の方々), 아베 신조 2 기 내각부터는 ‘영혼’을

나타내는 일본식 표현인 ‘미타마(みたま)’를 사용하거나 아베 ‘3 백만 동포(三百万余の同胞の命)’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희생자를 일본인으로 특정하기 시작했다. 아베의 2014 년 연설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해 총리의 파푸아뉴기니 일본인 전몰자 위령비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해외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대한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2014 년은 일본정부가 임시각의를 통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해로, 당시의 남태평양 순방과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실시는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해외의 전사자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을 다짐하는 것은 이후의 추도식 연설에서도 반복된다. 이 대목에서 이 글이 제시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국제정치적 성격이 드러난다. 죽음과 애도의 정치는 일본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피해자 정체성은 수동적이거나 수세적인 자기규정이 아니라, 강한 내셔널리즘과 근대지향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국제정치적으로는 현실주의에 가까운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또한 아직까지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몰자들의 유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 나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12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의 정글과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손을 모았습니다.*

*(2014 년 8 월 15 일 69 주년 전몰자 추도식, 아베 신조)*

*우리는 아직도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수많은 전몰자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들의 유해가 빠른 시일 내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 년 8 월 15 일 77 주년 전몰자 추도식, 기시다 후미오)

2019 년 전몰자추도식 연설부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가  
직접 언급되기 시작했다. 원폭 피해 뿐 아니라 도쿄 대공습과  
오키나와 지상전 등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의 구체적인 전쟁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문단이 전몰자추도식 연설문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정확하게 아베가 상징정치를 통해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내셔널리즘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문단은  
이후의 스가, 기시다 총리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한다.

전쟁 중에 300 만 명 이상의 동포(compatriots)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전쟁 이후에 먼 타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여러 전투들 중에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도쿄와 다른 도시들에서의 공습,  
오키나와의 지상 전투 등이 무자비하게 많은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의 영혼 앞에서,  
그들의 안식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19 년 8 월 15 일 68 주년 전몰자 추도식, 아베 신조)

외교용어인 ‘적극적 평화(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가  
전몰자추도식 연설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0 년부터였다.  
일본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가 노골적으로 대외적 현실주의와

결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외국과 자유롭게 군사동맹을 맺으며, 그것에 기반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일견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덕적 현실주의의 틀에서 군사동맹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로 이해된다(Yan, 2019, 65-66). 군사력을 통한 국제 공공재의 공급은 강대국의 전략적 신뢰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며, 이는 패권이행 국면에서 리더십 구축이라는 현실주의적인 목표 하에서 이루어진다.

일본의 외교정체성을 ‘상인’이나 ‘수도승’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불연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도덕적 강자성’이 일본의 오랜 정체성 이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변화나 전환이 아니라 지속이다.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의 원칙 하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손을 잡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을 극복하고 현재 세대와 내일의 세대를 위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2020 년 8 월 15 일 68 주년 전몰자 추도식, 아베 신조)*

이처럼 2020 년에 이르러 전몰자추도식은 일본의 외교적 정체성을 밝히는 컨퍼런스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8 월’이 본래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경쟁적 성격을 도덕적 현실주의의 틀로 이해한다면 ‘애도’가 ‘국제정치’와 연결되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피해자 정체성은 전전, 전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것이고, 21 세기에는 기억 정치 동학이 작동하여 그것이 현실주의적으로 구현되었을 뿐이다.

## 나가며

이상으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도덕적 현실주의로 규정하고, 내셔널리즘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외교적 정체성의 일관성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국제정치학이 대체로 일본의 시대구분론을 따라 일본의 외교적 정체성을 불연속적이고

〈표 2. 전몰자 추도식 연설문 분석〉

연도	총리	원폭 피해 사실	전쟁 반성	전쟁 언급	적극적 평화자유	민주주의	감상주의	희생자 지칭	전사자 유해 발굴
2005	고이즈미 준이치로	X	O	X	X	X	X	많은 사람	X
2006		X	O	X	X	X	X		X
2007	아베 신조 1기	X	O	X	X	X	X	3백만명 이상의 사람 (三百万余の方々)	X
2008	후쿠다 야스오	X	O	X	X	X	X		X
2009	아소 다로	X	O	X	X	X	X		X
2010	간 나오토	X	O	X	X	X	X		X
2011		X	O	X	X	X	X		X
2012	노다 요시히코	X	O	X	X	X	X		X
2013		X	X	X	X	O	O	영혼(미타마) (れた御霊(みたま))	X
2014		X	X	태평양 전쟁	X	X	O		O
2015		X	X	X	X	O	X		X
2016		X	X	X	X	X	X		O
2017	아베 신조 2기	X	X	X	X	X	X	3백만 동포 (三百万余の同胞の命)	X
2018		X	X	X	X	X	X	영혼(미타마) (れた御霊(みたま))	O
2019		O	X		X	X	X		O
2020		O	X	도쿄 공습,	O	X	X		O
2021	스가 요시히데	O	X	오키나와 지상	O	X	X	3백만 동포 (三百万余の同胞の命)	O
2022	기시다 후미오	O	X	전	O	X	X		O
2023		O	X		O	X	X		O

(전몰자 애도, 전후 재건 및 발전상,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은 매해 언급. 세계 유일  
피폭국, 평화헌법, 비핵 3 원칙은 언급되지 않음)

단절적인 것으로 규정해온 것에 비해, 이 글은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서 일종의 포스트 식민주의적인 정체성(피해자)을 가지고 전전-전중-전후-현대 내내 일관된 ‘민족주의 외교’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는 엔쉐통의 도덕적 현실주의를 차용하여 이른바 ‘중국 IR’의 적용 범위를 넓혔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국제정치적으로 재해석하여 국제정치학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찰하였다.

일본인의 내면에 천착하여 일본의 진정한 외교적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서 ‘도덕적 현실주의’는 실제 사례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가령, 일본은 일관된 피해자 정체성에 기초하여 언제나 강한 도덕적 확신에 입각해 다른 국가를 인식해왔다. 역사학자 요나하 준(與那覇潤)은 일본의 외교가 ‘유교화’되고 있다며 평범한 일본인의 대외인식을 예로 든다. 그에 따르면, 평범한 일본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 “(과거사 인식과 관련하여) 이렇게나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는 것인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하여)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기분(마음)으로 참배하고 있는데 뭐가 나쁘단 말인가”, “(침략전쟁 인정여부를 떠나서) 선의에서 한 행위를 비난하는 중국인이나 한국인, 또 일본 내 좌익이 편협한 인간인 게



아니냐”(요나하 준, 2013, 242-243).<sup>6</sup>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억울함’과 자신의 ‘도덕성(선한 의도와 마음)’을 내세우는 것이 현대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사용하는 외교 언어의 기본 뉘앙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을 상대로 할 때 두드러진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위안부 합의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강제징용 판결 관련)’ 등 규범과 도덕에 입각하여 강한 어조의 판단을 내려왔으며, 급기야 2018~2019 년 초계기 사건에서는 ‘한국이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식으로 피해자 정체성을 호소하였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의 제안자인 임지현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를 희생’시켜서 기억의 연대를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임지현, 2021, 522-523).

국민국가적인 상상에 가려진 역사의 비식별역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억압된 기억을 서사화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나날이 내셔널리즘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민족주의의 극복’만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지나치게 계몽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유할 수 있는 피해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희생자의식

---

<sup>6</sup> 요나하는 독특한 역사관에 입각하여 현대일본이 점차 ‘중국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그의 분석을 따라, 유교윤리의 내면화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연쇄통이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론을 일본에 적용하는 것은 제법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있다. (요나하 준, 2013)

민족주의의 해방적인 측면에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해 한일 정상회담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공동참배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종전 80 주년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1 차 문헌

히로시마 평화기념식 일본 총리 연설문(2005~2023)

나가사키 평화기념식 일본 총리 연설문(2005~2023)

전몰자 추도식 일본 총리 연설문(2005~2023)

### 2 차문헌

#### 1) 단행본

Yan, X., 2019. Leadership and the rise of great powers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Yoneyama, L., 1999. Hiroshima traces: Time, space, and the  
dialectics of memory (Vol. 10). Univ of California Press.

Fujitani, T., White, G.M. and Yoneyama, L. eds., 2001. *Perilous Memories: The Asia-Pacific War (s)*. Duke University Press.

사카이 데쓰야. 2010. 근대일본의 국제질서론. 연암서가.

오구마 에이지. 2019. 민주와 애국. 돌베개.

이리에 아키라. 1993. 일본의 외교. 푸른산.

이영진. 2018. 죽음과 내셔널리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오베 마코토. 2002.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임지현. 2021.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휴머니스트.

요나하 준. 2013. 중국화하는 일본. 페이퍼로드.

존 다우어. 2009.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 2) 논문

Bleiker, R. and Hutchison, E., 2008. Fear no more: emotions and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4(S1), pp.115-135.

Berger, T., 1995. Unsheathing the Sword?: Germany's and Japan's Fractured Political-Military Cultures and the Problem of Burden Sharing. *World Affs.*, 158, p.174.

Calder, K.E., 1988.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4), pp.517-541.

- Crawford, N.C., 2000. The passion of world politics: Propositions on emotion and emotional relationships. *International Security*, 24(4), pp.116–156.
- Gluck, C., 2003. The ‘End’ of the Postwar: Japan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States of memory: Continuities, conflicts, and transformations in national retrospection*, pp.289–314.
- Gluck, C., 1993. The past in the present. *Postwar Japan as history*, 64, pp.74–87.
- Gustafsson, K., Hagström, L. and Hanssen, U., 2023. Japan's pacifism is dead. In *Survival* 60.6 (pp. 137–157). Routledge.
- Gustafsson, K., Hagström, L. and Hanssen, U., 2019. Long live pacifism! Narrative power and Japan's pacifist model.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2(4), pp.502–520.
- Harootunian, H.D., 2000. Japan's long postwar: The trick of memory and the ruse of history.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99(4), pp.715–739.
- Hagström, L. and Gustafsson, K., 2019. Narrative power: how storytelling shapes 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2(4), pp.387–406.
- Hagström, L. and Gustafsson, K., 2015. Japan and identity change: why it matt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cific Review*, 28(1), pp.1–22.
- Heginbotham, E. and Samuels, R.J., 1998. Mercantile realism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2(4), pp.171–203.
- Jacoby, T.A., 2015. A theory of victimhood: Politics, conflict and the construction of victim-based identity. *Millennium*, 43(2), pp.511–530.
- Katzenstein, P.J. and Okawara, N., 1993. Japan's national security: structures, norms, and policies. *International Security*, 17(4), pp.84–118.
- Katzenstein, P.J. ed.,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M., 2010. Japanese Pacifism: Problematic Memory. In *Northeast Asia's Difficult Past: Essays in Collective Memory* (pp. 53–70).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 Lerner, A.B., 2020. The uses and abuses of victimhood  
nation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6(1), pp.62–87.
- Megill, A., 1998. History, memory, identit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1(3), pp.37–62.
- Mercer, J., 2014. Feeling like a state: Social emotion and identity.  
*International Theory*, 6(3), pp.515–535.
- Oros, A.L., 2016. Japan's Strategic Culture: Security Identity in a  
Fourth Modern Incarnation?. In *Strategic Cultures and  
Security Policies in the Asia–Pacific* (pp. 62–83).  
Routledge.
- Oros, A.L., 2015. International and domestic challenges to Japan's  
postwar security identity: ‘norm constructivism’ and  
Japan's new ‘proactive pacifism’. *The Pacific Review*,  
28(1), pp.139–160.
- Pyle, K.B., 2018. Japan’s return to great power politics: Abe’s  
restoration. *Asia Policy*, 13(2), pp.69–90.
- Samuels, R.J., 2007. Securing Japan: the current discourse.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pp.125–152.
- Shirokawa, N., 2023. When War Becomes Peace: Ruination and  
Transvaluation in the Hiroshima and Nagasaki Peace

- Memorial Parks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Suzuki, S., 2015. The rise of the Chinese ‘Other’ in Japan’s construction of identity: Is China a focal point of Japanese nationalism?. *The Pacific Review*, 28(1), pp.95–116.
- Tamaki, T., 2004. Taking the ‘taken-for-grantedness’ seriously: problematizing Japan’s perception of Japan – South Korea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4(1), pp.147–169.
- Waltz, K.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pp.44–79.
- 권혁태, 2009.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 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 1, pp.60–89.
- 남기정, 2014.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pp.94–134.
- 박영준, 2009. 국제 핵질서와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정책.
- 박영준, 2015.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아세아연구*, 58(4), pp.6–41.
- 박찬승, 2016. 동아시아에서의 제 2 차 세계대전의 기념과 집단기억. *동아시아문화연구*, (64), pp.13–50.

- 서승원, 2009. 탈냉전기 일본의 중국정책과 그 전환: 관저외교, 정당정치, 그리고 내셔널리즘. *아세아연구*, 52(1), pp.145-177.
- 서정경, 2022.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식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적 현실주의 (Moral Realism)’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8(4), pp.35-70.
- 오은정, 2018. ‘전쟁민’(戰災民)에서 ‘피폭자’(被爆者)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일본비평*, 19, pp.308-341.
- 오은정, 2013. 한국 원폭 피해자의 일본 히바큐샤 되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설정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환, 2019.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아시아리뷰*, 9(1), pp.179-205.
- 이주경, 2021. 수상관저의 관료 통제와 관저주도 정치의 확립. *일본비평*, 25, pp.66-95.
- 최순욱, 2016. 아베담화의 문학적 수사 (rhetoric) 읽기. *일본문화연구*, 58, pp.327-349.

### 3) 웹 자료

- 한겨레. 2017. “유엔총회 결의안 기권…박근혜 정부는 맞고 문재인 정부는 틀리다?”. *한겨레*. 2017 년 10 월 30 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6633.ht](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6633.html)  
ml〉 (검색일자: 2024 년 1 월 11 일)

굽히는 제국과 열린 쇄국: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읽기  
데지마

조이언

연세대학교

들어가며

평화의 요건은 무엇인가? 두 세력 간에, 두 문화 간에, 혹은 두 관점 간에 평화의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609 년이었고 이들이 데지마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1641 년이었다. 그리고 1860 년까지 일본과 네덜란드는 데지마라는 작은 인공섬을 사이에 두고 200 년이 넘도록 관계를 지속하였다. 국제정치사에서 굽고 짧은 우정은 흔한 데 반해 가늘고 긴 우정은 그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국제정치적인 통념은 전적으로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교섭과 평화, 우정이 역사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근세의 일란관계는 정치학적인 해명과 해석을 요청하는 역사적 사건이자 주제이다. 네덜란드 식민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으며 도쿠가와 일본의 쇄국은 어떤 쇄국이었기에 이러한 관계가 가능하였던 것인가? 두 나라 간의 관계란 어떤 성격의 것이었으며 두 나라는 어떻게 두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그 독특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 글에서는 데지마로 상징되는 일란관계가 어떠한 내용의 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조정이 18 세기에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었는지를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에 대한



▲ 2024 년 1 월 18 일 오전 10 시 26 분의 데지마

분석을 바탕으로 추적하고 있다.

##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 관한 서지정보**

1633년부터 1860년 사이에 일본에 거주하던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작성된 일기와 서신, 공증서 및 회계장부는 거의 전부 현전하고 있으며 (Massarella, 1988, p. 372) 그 전체 분량은 삼만 오천 페이지에 이른다. (Massarella, 1992, p. 553; van der Velde, 2023, pp. 21-27)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의 서문을 쓴 일란학회(日蘭学会)의 회장 Nakashima Nobuyuki에 의하면 동경대학사료편찬소(東京大学史料編纂所)와 일란학회 산하에 Iwao Seiichi 교수에 의해 설립된 일란교섭사연구회(日蘭交渉史研究會)에서 각각 데지마 일기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일기의 원본을 전부 번역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일란학회는 일찌감치 Leonard Blussé 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데지마 일기의 여백에 쓰인 주(marginalia)를 영역하는 프로젝트(The Deshima Diaries Source Publication Project)를 추진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van der Velde & Bachofner, 1992, p. xi) 데지마 일기의 1년 치 분량은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당대의 상관장(商館長)<sup>1</sup>들이 이것을 참고

---

<sup>1</sup>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는 네덜란드어opperhoofd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의 chief에 얼추 대응되는 표현이다.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컸고<sup>2</sup> 이에 따라 1673년부터는 본문의 여백에 쓰인 주들을 별도의 목록으로 옮겨 적어 데지마 일기의 본문에 대한 목차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 목록을 영역하여 출간하는 아이디어는 1964년에 데지마 아카이브의 전체 자료목록을 출간 하였던 M. Roessingh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그의 동료인 Opstall 교수와 Leiden 대학의 Blussé 교수는 Isaac Alfred Ailion Foundation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1985년에 해당 프로젝트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van der Velde, 2023, p. 21) 영역 프로젝트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A.C.J. Vermeulen 교수에 의해 번역, 편집된 *The Deshima Dagregisters: the Original Tables of Contents*라는 제목의 시리즈였고 둘째는 이를 이어받아 Paul van der Velde 교수가 기존 시리즈를 재차 번역, 편집하여 출간한 *Deshima Diaries Marginalia* 시리즈이다. 첫 번째 시리즈는 기록 보관상의 도구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였던 반면에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첫 번째 시리즈가 네덜란드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헤이그의 문서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학자들에 의해 사실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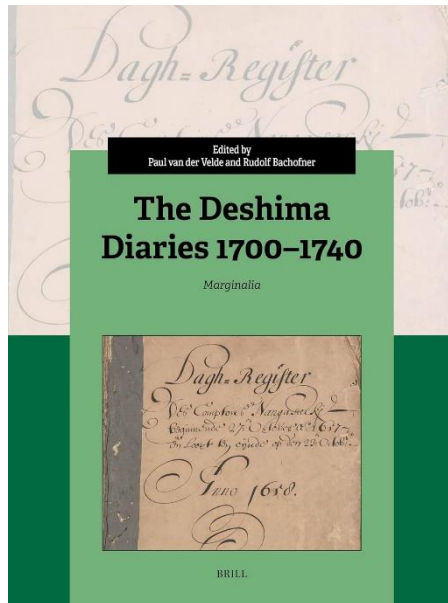
---

<sup>2</sup> 데지마 일기는 본래 매년 교체되었던 상관장들이 일본에서의 생활 및 일본인들과의 교섭에서 행동 지침 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한 부는 바타비아(자카르타)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본부를 전송되었다. 데지마 일기가 상관장들에 의해 활용된 양상에 관하여서는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의 소개글인 “A Glimpse behind the Screens: Some Remarks on the Significance of the Deshima Dagregisters for the Study of Tokugawa Japan”를 참조하라.

1차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리하였던 이유’, ‘그 주제에 대한 생각’, ‘회의에서 있었던 일’ ‘그 일의 내막’과 같이 단순히 지시적인 주석들의 많은 부분을 실제 분문의 내용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텍스트로 대체하였다. (van der Velde & Bachofner, 1992, pp.

xii-xxiii) *Deshima*

*Diaries Marginalia* 시리즈는 현재까지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2년에 출간된 1700년부터 1740년까지의 일기, 2004년에 출간된 1740년부터 1800년까지의 일기, 2023년에 출간된 1641년부터 1660년까지의 일기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자료는 1992년에 출간된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하나뿐이다.



▲ *The Deshima Diaries 1700-1740*의 표지

## 네덜란드의 입장(1): 네덜란드 식민제국의 무역연결망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무역은 네덜란드 식민제국이 17세기 전반에

구축한 아시아 내 무역연결망(inter-Asian network of trade links)이 작동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연결고리였다. 이들은 남인도 면직물을 인도네시아로 운반하고, 타이완에서 가져온 중국 생사(生絲)를 일본에서 은과 구리로 교환하고, 인도 면직물과 페르시아 생사를 구매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향신료를 인도와 페르시아로 옮기고, 그렇게 구한 면직물과 생사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였다. (Israel, 1995, p. 941) 일란무역을 촉발시킨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에는 은이 있었다.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아시아에서 행사하는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은 은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하여서만 지탱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네덜란드의 해양 주도권이 팽창하던 1621년에 재개된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스페인 측으로부터 들어오는 은의 유통을 크게 장애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는 일본과의 독점 무역을 성사시켜 일본의 은을 아시아 시장으로 유출, 유통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sup>3</sup> (Israel, 1989, pp. 171-173)

네덜란드의 대일본 무역 전략을 포함한 아시아 무역 전반은 1660년대에 들어 위기에 봉착하였다. 1662년에는 정성공(鄭成功)의 군대에 의해 대만으로부터 구축되었고 1666년에는 그 전부터 네덜란드의 상행위를 제한하여 오던 청나라가 그 동안 네덜란드에 부여되었

---

<sup>3</sup> 당시 일본은 세계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200톤의 은을 매해 생산하고 있었다. 동인도회사에 의해 유출된 은의 가치에 관한 통계는 *Dutch Primacy in World Trade 1585-1740*의 Table 5.16. 참조하라.

던 약간의 무역 특권마저 박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639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던 일본과의 무역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1668년 에도 막부가 은의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일본 무역은 네덜란드 입장에서 이전만큼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다. 이후 일란 무역에서는 꿩 대신 닭 격으로 구리가 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네덜란드 상인들은 대량의 구리를 인도와 페르시아에 판매하는 식으로 아시아 내 무역을 지속하였다. (Israel, 1989, pp. 254-255)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교섭 장면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인들에게 구리의 수출량은 늘리고 가격을 내려달라고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요구하는 장면인 것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 Dutch Trading Post Heritage Network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역연결망 지도



## 네덜란드의 입장(2): 네덜란드 식민제국의 세계관

일란무역의 배경과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있고 그런 정보의 많은 부분이 데지마 아카이브를 토대로 한 연구들에서 비롯하고 있으므로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를 분석하는 작업은 이러한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식민제국의 제국으로서 입장과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네덜란드 식민제국이 과연 제국주의적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Wesseling은 네덜란드 제국주의의 ‘이상한 역사’를 고찰하면서 국제적인 제국주의 논쟁에서 네덜란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Wesseling, 1988, p. 59) Koekkoek과 그의 동료들은 네덜란드에서 역사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나 지배적이었던 자아상, 즉 네덜란드 식민정책의 성격이 상업적이고 비폭력적이었으며 본질적으로 비제국주의적이었다는 관념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논쟁적인 관념이라는 사실을 지성사적으로 폭로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sup>4</sup> (Koekkoek et al, 2017, p. 83) 여타 유럽 열강들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 식민제국이 유달리 상

---

<sup>4</sup> 이러한 성격의 연구의 한 사례로는 자연법과 자연권에 관한 그로티우스의 이론이 네덜란드 식민정책의 팽창주의와 독점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연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Martine Julia van Ittersum, “The long goodbye: Hugo Grotius’ justification of Dutch expansion overseas, 1615-1645.” *History of European Ideas* 36:4 (2010)를 참조하라.

업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폭력적이었다는 명제에도 일정한 진리가 있지만 착취와 폭력, 노예무역과 식민통치의 전적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식민제국의 성격과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같이 그 자체로 논쟁적인 개념에 비추어 그것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여러 개별적인 장면들을 통해 총체적인 진상을 구성해나가는 접근이 요구된다.

네덜란드 식민제국과 관련하여 여러 시각이 공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인도회사와 아시아 지역들 간의 관계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타람(Mataram), 반텐(Banten), 마카사르(Makassar)와 같은 인도네시아 지역들에서 동인도회사가 보인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는 제국주의 세력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형적인 경우였던 것은 아니다. 동인도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군사력을 갖춘 명·청나라, 무굴 제국, 사파비 제국, 아유타야 왕국의 경우에 동인도회사는 이들 지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중국과의 관계는 간헐적이었으며 군사적 충돌<sup>5</sup>이 때때로 발생할 만큼 우호적이지 못했고 시암의 아유타야 왕국의 경우 지속적인 관계가 정착되었지만 이는 동인도회사가 해양봉쇄 압박을 통해 체결한 1664년 네덜란드-시암 조약

---

<sup>5</sup> 17세기 전반에 중국과 네덜란드 간의 갈등은 만성적인 것이었으나 1624년 명 함대에 의해 펑후군도(澎湖群島)로부터 타이완으로 쫓겨난 것과 1662년 정성공에 의해 타이완에서 쫓겨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에 기초한 관계였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일란관계에서 동인도회사가 보인 굴종적인 태도는 전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Clulow et al, 2014, pp. 255-262)

## 일본의 입장(1): 도쿠가와 막부의 세계관

네덜란드 측에서는 제국주의 논쟁이 전개되는가 하면 일본 측에는 쇄국사관 논쟁이 존재한다. 쇄국사관은 1630년대 실시된 일련의 ‘쇄국 정책’으로 과거 일본이 외국과의 외교·무역 또는 문화 면에서 국제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사관을 가리킨다. (토비, 2013, p. 97) 1630년대에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하였으며 포르투갈인을 추방하고 네덜란드 상인들을 데지마에 가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쇄국사관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로널드 토비(Ronald Toby)에 의하면 “이른바 ‘쇄국’이 완성된 것으로 이야기되는 1630년대 에도 막부에는 스스로의 정책을 ‘쇄국’이라 간주하는 인식이 없었고, ‘쇄국’이라는 말도 없었다”. (토비, 2013, p. 99) 토비는 쇄국 대신 대군외교나 화이·해금, 네 개의 창구 같은 표현들이 근세 일본의 기본적인 대외자세를 가장 적확하게 드러낸다고 제시한다.<sup>6</sup>

---

<sup>6</sup> 해금(海禁)이라는 표현이 제안되는 이유는 통상 쇄국령이라고 지칭되는 1630년대에 5회에 걸쳐 내려진 금령이 당대에는 해금, 어금제(御禁制), 어금(御禁) 등으로 불렸기 때문이고 대군이라는 표현이 제안된 이유는 쇼군의 외교상 칭호가 ‘일본국 대군’이었기 때문이다. 대군이라는 호칭은 이후 아사이 하쿠세키가 일본국왕으로 바꾸

(토비, 2013, p. 128) 네 개의 창구는 당대에도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중국<sup>7</sup>과 네덜란드와 교역하였던 나가사키, 조선과 교역하였던 쓰시마, 류큐와 교역하였던 사쓰마, 에조(蝦夷)<sup>8</sup>와 교역하였던 마쓰마에를 가리킨다. 토비는 네 개의 창구가 쇄국의 예외가 아니라 네 개의 창구 자체가 막부의 방침이었음을 강조한다. (토비, 2013, p. 131) 에도 막부 시기의 일본의 대외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나가사키에 출입하는 중국 상인들과의 비공식적<sup>9</sup>인 사업 거래가 그 관계의 전부였다. 양국 간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조공책봉관계 따위의 주종 관계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명·청 조정의 입장에서 자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벌이는 상행위는 밀수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는 1607년에 정식으로 수교하였고 그 이후로 조선은 12

---

개 하였다.

<sup>7</sup> 나가사키의 중국 상인들은 도진야시키(唐人屋敷)에 거주하였다.

<sup>8</sup> 에조(蝦夷)는 아이누를 포함한 일본 동북부의 종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sup>9</sup>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있는 대외관계는 통신, 상업·무역 관계만 존재하는 대외관계는 통상으로 분류하였다.



▲ Plan of Nagasaki, Hizen Province

변에 걸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역은 쓰시마의 소씨(宗氏) 가문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부산 지역에 위치하였던 왜관도 소씨 가문에 의해 설치된 것이었다.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외교문서는 상호 간에 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양국이 서로에 대하여 실지로 어떤 주관을 형성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부 설명해줄 수 없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중산(中山) 왕조의 류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조공국이였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비공식적이고 상업적인 종류의 것이었으나 데지마 상관장

은 매년 사절단을 꾸려 에도에 가서 쇼군을 알현하여야 했다. (Kazui, 1982, pp. 288-289)

이와 같은 일본의 대외관계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이탈은 의도된 것이었다. 근래의 연구들은 도쿠가와 막부가 가문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중화’라 간주하는 일본형 화이질서를 표방했다는 견해를 주류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비는 도쿠가와 막부가 표방한 화이질서가 대외적으로 인정되었다기보다는 “일본이 스스로 구축한 관념적 구상(픽션)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일본형 화이관념(또는 의식)’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시한다. (토비, 2013, pp. 125-128) 일본이 대내적으로는 조선통신사가 조공 사절이라고 선전하였던 것이나 네덜란드 상인들에 대해서 매해 조공사절<sup>10</sup>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

<sup>10</sup> Adam Clulow는 *The Company and the Shogun*에서 이를 조공사절의 한 형태로 보기보다는 다이묘들을 정기적으로 에도에 머물게 하였던 참근교대(参勤交代)의 변형된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 일본의 입장(2):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 경제와 아라이 하쿠세키



▲ 아라이 하쿠세키

*The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기는 상업의 갑작스러운 확장으로 일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이런 시대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 화폐정책과 경제사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 경제가 처한 위기는 이중

이었는데 첫째는 시장 거래가 급속히 성장하는 데 반해 통화관리의 수준이 열악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었던 일란무역으로 인해 귀금속 보유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 위기에 대한 막부의 대응은 개주(改鑄)였고 1695년부터 1868년까지 12번의 개주가 있었으나 매번 쇼군에게만 단기 이익을 내주었을 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금융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즈키, 1989, pp. 30-35)

당대 가장 저명한 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sup>11</sup>는 당대의 중농주의자들과는 달리 농업이 모든 부의 원천이라 주장하지 않고 귀금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쿠세키는 금과 은이 “하늘과 땅에서 만들어”지고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쿠세키는 1709년부터 1716년까지 6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노부와 7대 쇼군인 토쿠가와 이에츠구의 최고고문으로서 정책 제안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무역 문제와 그에 따른 귀금속 유출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스즈키, 1989, pp. 30-45) 그는 나가사키 관청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귀금속 유출에 대하여 나옴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가 케이쵸(慶長) 시대부터 107년 동안 나가사키 부교쇼(長崎奉行所; 관청)의 정보를 기초로 외국으로 나간 금·은의 총량을 같은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금·은의 양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금 4분의 1, 은 4분의 3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세기에 우리는 금은 절반, 은은 전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리는 무역량에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에도 부족한 실정이다.<sup>12</sup>

---

<sup>11</sup> 新井白石 (1657-1725)

<sup>12</sup> Ackroyd, Joyce (ed.), *Told Round a Brushwood Fire: The Autobiography of Arai Hakusek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279. 테사 모리스 스즈키, 박우희 옮김, 『일본의 경제사상』 (솔, 1989), p.35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했듯이 은의 수출은 이미 1668년에 막부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하쿠세키의 시대에는 유효한 문제가 아니었다. 여하간 하쿠세키는 책과 약재<sup>13</sup> 수입을 제외하고는 무역을 불필요하고 낭비스러운 것으로 여겨 무역을 더욱 감축하자고 주장하였고 1715년에는 정덕신례<sup>14</sup>를 제정하여 청과 네덜란드의 무역 범위와 수출품 항목 등을 크게 제한하였다. 이러한 그의 조치는 수출을 늘려서 국제수지를 흑자로 만들고자 하기보다는 무역 자체를 해악으로 여겨 감축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하쿠세키는 통화 문제도 해결하려 했으나 통화 가치와 상품 가치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면 순환되는 금의 양을 대폭 줄이고 그 질을 상승시키고자 했던 그의 정책은 금융제대의 미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스즈키, 1989, pp. 36-37) 그는 네덜란드 상인들과도 여러 번 만났는데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1712년 4월 3일 일기에는 상관장 Cornelis Lardijn과의 만남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sup>13</sup> 하쿠세키가 외국 문물에 관심이 많기도 하였고 본인도 수입된 약의 덕을 많이 본 것으로 데지마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sup>14</sup> 正徳新例; 해박호시신례(海舶互市新例), 나가사키 신령(長崎新令)이라고도 부른다.

선물을 포장하는 것을 마치었다. 겐우에몬(源右衛門)<sup>15</sup>이 아라이 하쿠세키<sup>16</sup>의 도착을 알리었다. 하쿠세키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고 나는 거기서 그를 만났다. 그는 서양인들이 일본식으로 앉으면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편한 대로 앉으라고 했다. 그는 그가 호기심에 찾아왔으며 또한 매우 오래되긴 하였지만 잘 보존된 세계지도들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해주었다.

작년에 데지마에서 번역한 지도도 그 중에 있었다. 이어 그는 브레다의 항복 따위를 묘사한 오래된 네덜란드 인쇄물들 몇 가지와 브라질 해안의 네덜란드 점령지들이 그려진 작은 지도 몇 편을 보여주었다. 그 물건들에 대한 질문들에 내가 답하는 동안 그는 접착지에 메모를 하여 그 물건들에 붙이고 있었다. 우리와의 볼 일을 다 보고나서 그는 감옥에서 시도티 신부<sup>17</sup>를 만나고 왔다고 털어놓았다. 시도티 신부는

---

<sup>15</sup> 겐우에몬(Gen'eimon)은 통사 이마무라 에이세이(今村 英生; 1671-1736)의 별명이다. 젊은 시절 앵겔베르트 캠퍼(Engelbert Kaempfer)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겐우에몬은 에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통사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포르투갈어도 약간 하였고 라틴어 사전을 가지고 있었다.

<sup>16</sup>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는 Arai Chikugo라고 표기되어 있다.

<sup>17</sup> 예수회 소속의 지오바니 바티스타 시도티(Giovanni Battista Sidotti)는 이탈리아의 사제로 일본의 마지막 순교 선교자로 알려져 있다. 일기에는 시도티가 처음 체포되었을 때 괜히 불똥이 튕까 봐 네덜란드 상인들이 염려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른바 '시도티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가 바로 아라이 하쿠세키였다. 하쿠세키는 시도티를 심문하면서 얻게 된 지식으로 『서양기문(西洋紀聞)』을 저술하였다. 하쿠세키는 시도티를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기에서는 Father Joan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아직 건강하다고 했다. 하쿠세키가 떠났을 때는 이미 밝이 어두웠고 그는 또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1712년 4월 3일)

1714년에도 일본에서 복무했던 C. Lardijn은 1714년 4월 16일 에도에서 하쿠세키를 다시 만난다. 정책적으로는 무역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던 데 반해 하쿠세키는 외부세계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 자체에는 무척 적극적이었다.

아라이 하쿠세키가 나를 방문하였다. 그는 유럽과 인도, 특히 마닐라의 풍습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시도티 신부와 그가 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시도티 신부는 하쿠세키한테 곧 교황이 일본에 대사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시도티 신부는 150년 전에 일본에서 선교하였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시신이 지금까지 썩지 않았으며 인도 고아(Goa)에 모시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하쿠세키는 내게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나는 하비에르가 고아에 묻혔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시신에 관한 가톨릭스러운 헛소리에는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쿠세키와의 대화는 세 시간이나 이어졌다. (1714년 4월 16일)

여기서 네덜란드 상인들의 가톨릭교도들에 대한 태도도 엿볼 수가 있다. 이후 Lardijn이 일본을 떠나면서 탑승한 Arion호가 코친차이나 인근에서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쿠세키는 유감을 표하며 지원

을 약속했다.<sup>18</sup> 1716년 3월 19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마치부교 오우카 키요스케는 아직 Arion호의 난파 소식을 막부에 알리지 않았지만 나는 아라이 하쿠세키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는 상관장 Lardijn이 자신의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1716년 3월 19일)

하쿠세키와 상관장의 일화는 일본인들이 일란무역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감각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은 왜 네덜란드인들과 무역을 200년 넘게 지속하였는가? 하쿠세키 본인이 비판하였듯이 수입은 일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기도 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들여오는 것도 아니었다.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는 물건들이 없다고 해서 일본이 크게 아쉬워했을 일도 아니었다. 앵겔베르트 캄퍼는 일본이 네덜란드인들로부터 한 해 동안 수입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비단과 각종 재료를 일주일 사이에 소비한다고 적고 있다. (젠슨, 2006, p. 1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무역을 지속하였던 이유는 당시 일본 사회에 외부와의 접촉에 대한 수요가 내재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정식으로 제

---

<sup>18</sup> 상관장 Cornelis Lardijn은 난파로 인해 사망했다. Arion호의 난파와 관련하여서는 <https://mass.cultureelerfgoed.nl/arion>을 참고하라.

출되었던 화란풍설서를 비롯하여 여러 공식적,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방인과의 만남은 이미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하쿠세키와 상관장의 일화에서 하쿠세키가 상관장에 대하여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황과 인물이 특별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른 예를 찾기 어렵다.

##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읽기**

### **(1): 도쿠가와적 질서의 수용**

근세의 네덜란드와 일본은 각각 독자적인 세계질서 내지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는 신생공화국이자 식민제국으로서 개성적인 자의식과 세계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식 화이질서 및 네 개의 창구라는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한 두 세계관은 서로 전혀 이질적이면서도 자국 중심적이라는 데서 불길하게 유사하기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세계관들이 거칠게 충돌하는 대신에 두 세계 간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가 200년 넘게 유지되었던 것은 문명교류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가능하였던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17세기 전반에 일본과 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권역 내에서는 전적으로 도쿠가와적 질서를 수용하는 것을 대일 무역의 기본 지침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sup>19</sup> 그리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유독 일본에 대하여 그러한 정책을 취하였던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가 여타 아시아 지역들과는 달리 일본에 대하여서는 교섭의 우위를 점할 만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군사 행동은 물론 해상봉쇄와 같은 간접적인 압박도 일본의 경우에는 불가능했다. 1638년 12월 바타비아 총독은 동인도회사의 대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인들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내력으로 좋은 때와 기회를 노려야 한다. 그들은 말대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바람으로 사는 작고 겸손하고 암전한 상인인 체를 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수록 그들의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존중은 커진다. 오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웠다.... 일본에는 너무 겸손하다는 건 없다.<sup>20</sup>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동인도회사의 지도부

---

<sup>19</sup> 17세기 전반 일관관계가 확립된 자세한 과정에 관하여서는 Adam Clulow의 *The Company and the Shogun*을 참고하라.

<sup>20</sup> Coolhaas, *Generale Missiven*, 1:704. Adam Clulow,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p. 260에서 재인용.

인 17인 위원회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상관들에게 이 오만하고 웅장하고 까다로운 민족을 모든 방면에서 만족시키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다.<sup>21</sup>

그리하여 확립된 쇼군과 동인도회사의 관계는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 내지는 종주국과 조공국의 관계와 유비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인도회사는 봉신 내지는 조공국의 의무들을 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첩보 활동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군사적 지원, 해상 군사 활동 금지, 쇼군의 법적 권위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 (Clulow, 2014, p. 261) 네덜란드 상인들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겸손과 굴종은 이들이 쇼군을 알현하면서 견뎌야 했던 수모를 묘사한 장면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앵켈베르트 캠퍼의 유명한 묘사<sup>22</sup>만큼 자세히는 아니지만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도 네덜란드 상인들이 겪은 굴욕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1702년 3월 26일의 기록이다.

드디어 우리는 쇼군에게 데려가졌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페이스

---

<sup>21</sup> Mijer, *Verzameling van Instructiën, Ordonnanciën en Reglementen*, 99. Adam Clulow,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p. 261에서 재인용.

<sup>22</sup> 이는 마리우스 B.詹슨, 김우영 외 옮김, 『현대일본을 찾아서 1』 (이산, 2006), pp. 136-1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리가 차려져 있었다. 남은 것은 종이로 싸여 있었다. 세 명의 신하들을 통해 쇼군은 우리에게 코트를 벗고 회의를 하는 연기를 해보라고, 또, 절을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다. 물어보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집 같은 것이며 상관장의 아들이 장애로 춤을 출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1702년 3월 26일)

네덜란드 상인들은 왕왕 코트를 벗어볼 것, 걸어 다녀볼 것, 노래 부르고 춤춰볼 것, 일본어를 해볼 것, 펜싱을 해볼 것, 회의하는 모습을 연기해볼 것 등등 갖은 무례한 요구들을 받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네덜란드가 도쿠가와적 질서를 수용하였다는 것은 일본의 권역 내에서 자신들의 해양세력으로서의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의 권력 구조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주장하지 않고 일본의 화이관념에 협조하였음을 함의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일본의 화이관념이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일본의 대외관계와 불일치한다는 점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류큐와 에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이관념과 객관적인 대외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선과 청나라의 경우 그러하지 않았다. 조선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상호 간에 평등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일본의 화이관념에 따르자면 조선은 일본의 조공국이 되어야 했다. 청나라와 일본의 경우 양국 간에는 비공식적인 통상의 관계만이 존재하였거니와 이마저도 일본에서는 막부가 중국 상인들을 직접 관



리하고 있었던 데 반해 청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상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었다는 데서 인식의 불일치가 존재했다. 더욱이 일본의 화이관념이 청나라의 천하질서에 대하여 대항적인 세계관이었음을 생각하면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더한 불일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단순히 청의 천하질서를 부인한 것을 넘어 만주족을 북적(北狄) 취급하여 스스로 중화라 자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일본의 화이관념을 어느 한도까지 수용하였는가? 우선 네덜란드 상인들부터가 스스로 오랑캐 취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있었으므로 일란관계가 화이관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청일 관계에 관하여서도 네덜란드가 청나라의 천하질서에 구속을 받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대청 인식이 거슬릴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와 중국 조정 간의 관계는 우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중국 상인들과는 아시아 무역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관계였다. 이러한 경쟁적인 관계는 나가사키에서도 재현되었는데 나가사키 시장에 판매자가 둘뿐이고 일본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서로 간에 상당 부분 일치하였기 때문에 경쟁과 견제는 만성적이었다. 실상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는 일종의 ‘중국인 감시 일지’라 해도 될 만큼 감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1703년 3월에 부상관장이 작성한 일기에는 상관장이 에도로 떠난 동안 중국인을 감시한 내역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크선들이 짐을 내리기 시작했다. 정크선의 숫자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703년 3월 3일)

매일 정크선이 도착하고 있다. 한 정크선은 사쓰마에서부터 견인되어 왔다. (1703년 3월 11일)

젠우에몬에 의하면 중국인들이 가루 백설탕보다 사탕수수 원당[무스코바도]을 더 많이 가져왔다고 한다. (1703년 3월 18일)

정크선들의 화물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없다. 작년 정보도 없다. 일본 인들은 그들이 심하게 감시당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 명이 금지당했다고 말했다.<sup>23</sup> 네 척의 정크선들이 견인되어 들어왔다. (1703년 3월 20일)

모든 감정가들이 도진시야키에서 선물들을 바빠 정리하고 있었다. (1703년 3월 25일)

중국인들이 사쓰마에서 무제한한 활동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많은 정크선들이 그곳에 ‘강제로’ 정박해야 했고 검사 없이 상품을 운송할 수 있었다. / 한 달 동안 38척의 정크선들이 도착했다. (1703년 3월 31일)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인들은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정크선의 개수, 중국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품목과 가격, 거래규모를 최대한 알아낼

---

<sup>23</sup> 맥락상 네덜란드인들에 협력하였던 일본인들이 도진야시키에서 정보 수집을 하다가 그 중 한 명이 출입 금지를 당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수 있는 만큼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상인들이 벌인 잣은 밀수와 폭동, 일본인들과의 갈등에 관한 내용 역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선이 일본의 조공국이라는 일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서 조선이 일본의 조공국이라는 주장은 주로 네덜란드 상인들이 siks, seecon, sicq, sick, 혹은 cataber라고 표기한 날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이는 모두 음력 5월 5일인 단오를 의미한다. cataber는 카타비라(帷子)라는 일본의 여름 옷을 가리키는데 당시 일본인들은 단오에 카타비라를 입고 축제를 즐겼다 한다.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의 편집자들은 용어사전에서 siks, seecon, sicq, sick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단오를 이르는 말인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에서 셋쿠(節句; 절구)를 들리는 대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절구는 명절이라는 뜻으로 주로 3월 3일이나 5월 5일을 일컫는다.

일본인에 의하면 카타비라(帷子)날은 제국의 모든 곳에서 기념되고 있다. 이 날에 일본인들은 조선이 일본이 조공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한다. (1703년 6월 18일)

---

<sup>24</sup>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의 편집자들에 의하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일본어 단어들과 이름들을 자의적으로 표기한 것이 번역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데지마 하인들의 대다수가 절구(節句)와 관련하여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날은 일본의 조선 정복을 기념한다. (1704년 6월 6일)

절구(節句). 대부분의 하인들은 그들의 절구와 관련하여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날의 축제는 조선을 자신들의 조공국으로 만든 승리를 기념한다. 이 날은 일본인들이 카타비라를 입기 시작하는 여름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하인들은 하루종일 맘껏 즐길 거라며 마을로 떠났다. (1712년 6월 8일)

내일은 백 년 전 조선이 스스로, 혹은 그보다는 강제로 일본에 복속된 사실이 기념될 것이다. (1715년 6월 5일)

네덜란드 상인들이 조선통신사를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가 다루고 있는 시기 동안에 조선통신사의 방문은 1711년-1712년, 1719년-1720년 이렇게 총 두 번이 있었다. 1711년-1712년에는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정사 조태억, 부사 임수간, 종사관 이방언이, 1719년-1720년에는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정사 홍치중, 부사 황선, 종사관 이명언이 에도를 방문했다. 1719년-1720년의 방문에 관하여서는 일기에 언급이 없지만 1711년-1712년 통신사에 관하여서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다. 1712년 에도로 향하던 상관장의 사절

단이 에도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조선통신사와 시모노세키에서 마주친 것이다.

우리는 조선 왕의 세 대사들이 쇼군의 즉위를 축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무리는 660명에 달하였다. 약 백 년 전에 태함(太閤)<sup>25</sup>이 그들을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만들었다. / 막부는 모든 다이묘들에게 이들을 최고의 격식과 호화로운 선물들로 맞이할 것을 명했다. 조선인들의 선물은 인삼과 모피로 이루어져 있었다. (1712년 2월 28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도착하자 조선인들이 가득 탄 작은 배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 우리 쪽 호위대는 급하게 우리를 여관으로 안내하고 문들을 닫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선인들은 담장을 기어올라 우리 통사들을 경악하게 했다. 통사들은 조선 쪽 호위대에게 조선인들을 말리라고 부탁했지만 몇몇 조선인들이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완벽한 일본어로 대답하여 통사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하들에게 실내로 들어갈 것을 명했다. 조선인들은 우리가 모두 외국인들이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서로의 본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고 중국어로 계속 소리쳤다. 시간이 지나자 소리치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여관을 몰래 빠져나와 배로 가서 조선들에게 시달리

---

<sup>25</sup> Taiko로 표기되어 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리킨다.

지 않기 위해 거기서 잠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712년 2월 29일)  
담수가 부족해 항해할 수 없었다. 조선인들이 다시 우리와 접촉하려  
시도하였으나 우리 쪽 호위대에 의해 저지당했다. (1712년 3월 1일)

조선을 일본의 조공국 내지는 그 유사한 지위에 있는 나라로 여긴 네덜란드의 대조선 인식은 17세기 초부터 존재하여온 것이다. 일본과 통상을 시작한 이후 동인도회사는 조선 무역을 시도하였는데 1609년에 당시 네덜란드의 최고지도자(stadtholder)였던 마우리츠(Maurits) 왕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전달한 서한에는 “각하의 은혜와 원조에 의해 코레(Coree)와의 무역을 향수하고” 싶다는 표현이나 “고려국에도 어쩌면 가고 싶다고 말씀드릴 때는 허락(朱印)을 지시하여 내려주실 것을 삼가 부탁”드린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한다. 당시 네덜란드는 조선과의 무역에 관하여 일본의 답을 듣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동인도회사는 여러 번 조선 무역을 고민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다가 하멜 사건 이후 다시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중국에는 조선무역을 포기하였으니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조선이 “시나인과 일본인 양쪽의 신하”여서 중국과 일본이 조선과 “무역거래를 행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신동규, 2003, pp. 78-104)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는 이러한 대조선 인식이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란관계, 청일관계, 조일관계 등의 국제적 관계들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주장에 대하여 거의 아

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일란관계에 대해서는 감내하여야 했고 청일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며 조일관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읽기 (2): 통제된 갈등<sup>26</sup>

네덜란드가 도쿠가와적 질서를 수용함에 따라 일란관계의 형식에 대하여서는 양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 내용에 관하여서는 갈등의 요소가 상존하였다. 양국 간에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무역량과 가격이 일본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니 이윤을 남겨야 하는 네덜란드 측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란무역은 하쿠세키가 지적하듯이 산

---

<sup>26</sup> Adam Clulow는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에서 근대 초기의 아시아-유럽 관계와 관련하여 학계 내에 존재하는 경쟁하는 두 개념적 틀로서 파트너십의 시대(age of partnership)와 통제된 갈등의 시대(age of contained conflict)를 소개하고 있다. Clulow는 통제된 갈등(contained conflict)이라는 개념적 틀을 취해 17세기 초에 일란관계가 탄생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에 나타나는 통제된 갈등의 양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Clulow가 관계 초기 탐색과 조정 단계에서 갈등이 통제된 양상을 고찰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탐색과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갈등이 관리된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품(産品)을 귀금속과 바꾸는 무역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1698년에 설치되어 나가사키 무역을 총괄적으로 관리, 규제하였던 나가사키 회소(長崎会所)<sup>27</sup>는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수수료와 관세를 부과하였고 구리 가격을 규제하였다. 이는 네덜란드 상인들 입장에서 달가울 수 없는 일이었고 회소가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관장 Dijkman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통사들과 다른 일본인들이 감찰관<sup>28</sup>들에 대한 선물과 답수를 가져오는 동안 범선들을 견인하였던 부교의 하인들에 대한 지불에 관한 우리의 답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나는 이미 가격이 높고 이 감찰관들이 쇼군의 사적인 하인들이며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이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바타비아 총독부가 감찰관들에게 선물을 줄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거기에 더해 바타비아는 부교의 하인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는 나쁜 무역 조건과 도시가 나가사키 회소를 통하여 하는 무역의 이윤 때문이다. (1701년 8월 9일)

중국인들에 대한 감시 내용과 더불어 나가사키 회소, 미야코(교토) 시

---

<sup>27</sup> 나가사키 카이쇼(nagasaki kaisho)라고 발음되며 일기에는 geldkamer라고 표기되어 있다.

<sup>28</sup> Metsuke(目付)를 의미하며, dwarskijker로 표기된다.



장의 가격표, 구리 가격, 사절 비용 절감 등 이윤과 관련된 사항들이 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인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은 많은 부분 미야코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인들에 의해 결정되었고 구리 가격은 나가사키 회소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미야코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과 구리 가격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상인들로서는 중요한 임무에 속하는 일이었다.

일란관계에서 갈등이 통제되어 있었다는 것은 일본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저기에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에 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 측이 이러한 요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였으며 무역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무역 자체는 감소됨에 따라 때때로 동인도회사의 불만은 일본과의 무역을 포기하는 것을 고민하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하쿠세키의 정덕신례가 제정된 이듬해인 1716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아울러 (통사 겐우에몬과 고헤이에게) 나는 Arion호의 동료들과 관련한 우리의 요청이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를 알아봐달라고 했다. 또한 만약 동인도회사가 일본을 떠난다면 남은 상품들과 우리 배들에 의해 구매된 상품들을 팔고 떠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구리를 구매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 /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동인도회사가 일본을 떠난다면 우정의 연이 끊어질 것이고 과거에 동인도회사가 거둔 커다란 이윤을 생각한다면 손

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1716년 3월 15일)

일본인들은 우리가 떠나든지 남든지 신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의 존재로부터 득을 보는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1716년 3월 19일)

하치재몬<sup>29</sup>과 고헤이<sup>30</sup>가 새 상관장이 임명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들은 우리가 분명히 내년에도 일본에서 교역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716년 5월 24일)

우리는 오우카 키요스케의 거주지로 갔다. 그는 무역에 관한 새 명령들[정덕신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부하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 정덕신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는 이것이 동인도회사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해 자유로이 질문할 것을 청했다.. 오우카 키요스케<sup>31</sup>가 그런 뜻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었기에 나는 그를 믿기를 주저했다. 음식을 제외하고는 그가 검사하기 전에 섬에 들어올 수 있

---

<sup>29</sup> Namura Hachizaemon, 네덜란드어에 유달리 능통한 상급 통사였으며 겐우에몬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통사 중의 한 명이었다.

<sup>30</sup> Namura Gohei, 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견습 통사로 무능력하고 네덜란드어를 못한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sup>31</sup> 오우카 키요스케(Ōoka Kiyosuke)는 당시 무역에 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여 이를 아라이 하쿠세키에게 보고했다. 오우카 키요스케의 보고서는 정덕신례가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는 것은 없다. (1716년 5월 26일)

1716년 9월 1일 Ternissen호와 Rijxdorff호가 정덕신례 수용 및 무역 지속 여부에 관한 상부의 결정과 함께 도착한다. 결론은 정덕신례를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쿠세키는 네덜란드와 교역을 중단시킬 의도가 없었다. 그러므로 무역의 규모를 규제하면서도 네덜란드가 교역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이윤은 남기게끔 규제를 설계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동인도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는 장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무역을 지속할 정도의 이윤은 남길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정덕신례에 관한 상부의 결정을 일본인들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정덕신례를 따를 것이다. 통사들은 우리 상품들의 가격이 작년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치부교는 우리 상부의 답을 예도로 전했다. (1716년 9월 4일)

마치부교의 거주지에서 정덕신례가 선포되었다. (1) 일본인 하인들은 더 이상 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 우리 측 배가 직접 물을 가지러 와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일본 배들이 물을 공급하여 줄 것이고 비용은 마치부교가 치를 것이다. (3) 섬에서 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지불은 나가사키 회소를 통하여 송금되어야 한다. (4) 앞으로 모든 것은 검사될 것이다. 식량은 창고에 보관될 것이다. (5) 네덜란드

인과 일본인 모두 검문될 수 있는 새로운 경비실이 지어질 것이다.  
(6) 매달 새로운 식량 가격표를 받을 것이다. (7) 일본을 떠나는 모든  
물건은 부고의 하인들에 의해 포장될 것이다. 우리는 매 조항마다 일  
본어로 ‘카시아마타(Casiamatta)’<sup>32</sup>라고 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을 표  
시해야 했다. (1716년 9월 19일)

1730년대에는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더 높은 수위로 발생했다. 후쿠  
다 로쿠재몬(Fukuda Rokuzaemon)은 나가사키의 연기(年寄)<sup>33</sup>였는  
데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마뜩찮게 생각한 인물로 무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네덜란드 상인들이 배 세 척으로 무역할 수 있게 허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연기인 도카사와 사크베(Tokasawa Sacbe)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논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연기 로쿠재몬과 사크베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나가사키 주민들의  
가난을 고려하여 사크베는 우리에게 우리가 조정으로부터 배 세 척으  
로 무역할 허가를 받았으며 충분한 구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해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로쿠재몬은 이에 반대했다. 그들은 싸우고  
자 했으나 이는 저지되었다. 그들은 서로 감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

<sup>32</sup> 편집자들은 각주에서 Casiamatta [Kashikomatta]: Very well, Sir라고 풀이하고  
있다.

<sup>33</sup> 도시의 원로로서 막부의 벼슬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언젠가 스카베의 관점이 이기길 바란다. (1729년 6월 3일)

1732년 9월 가격 결정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낮게 제시되자 상관장 Boockesteijn은 통사들에게 가격 수준을 1725년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했으나 통사들이 거절하자 그렇다면 1727년 수준으로 요청해달라고 다시 부탁한다.

젠우에몬이 1731년의 가격 수준이면 만족하겠느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들이 가격 수준을 1725년으로 올릴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했다. 나아가 내가 직접 이나바와 로쿠재몬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젠우에몬은 두 제안 모두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 그래서 나는 가격 수준을 1727년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통사 무리에 의해 거부당했다. 젠우에몬은 우리가 무역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그가 누구를 대변하여 그렇게 말하는지 되물었다. 그는 자신으로서 한 말이라고 답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답하고 요청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려서지 않았고 젠우에몬은 저녁에 우리의 결정을 들으러 다시 온다고 말했다. / 다시 돌아오자 젠우에몬은 요청이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렇다 해도 계속 무역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 모호한 질문에 대해 나는 중도책으로 가격 수준을 1729년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 나는 동인도회사의 위원들이 우리가 이따위 취급을 받는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위원들이 아마도 일본과의 무역을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주장은 다른 주장들처럼 통사 무리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끝내 열한 시가 다 되어서 겐우에몬은 그들이 가격 수준을 1729년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로쿠재몬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네 번째 호가(呼價)는 마치부교들이 겨우 납부하고 있는 쇼군에게 바치는 세금이 제하여진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쇼군에게 세금을 납부하느라 찢찢매고 있다고 했다. 겐우에몬은 배들이 떠나고 나면 자신은 해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1732년 9월 29일)

겐우에몬은 요청을 제출했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 로쿠재몬은 우리 말이 맞다며 그 역시 일본과의 우리의 거래가 더 이상 수익성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했다. (1732년 9월 30일)

이후에도 타협은 쉬이 내려지지 않았다. 1729년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상관장은 장뇌(camphor)와 구리를 원하는 만큼 많이 살 수 있다는 조건으로 1730년 가격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했지만 겐우아몬은 1731년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제출했고 로쿠재몬은 쇼군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을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했다. 결국 겐우에몬이 다섯 번째 호가를 전달하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732년의 무역은 힘겹게 성사되었다. 이듬해

로쿠재몬이 전보다 강력한 무역 규제를 선포하자 네덜란드의 불만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1734년에는 바타비아 총독이 쇼군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지마에 도착했으나 쇼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일본인들의 만류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1730년대 내내 지속되지만 무역이 실제로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

18세기의 갈등 국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네덜란드 입장에서 본다면 대일본전략의 요체는 자신들이 일본인에 대하여 정치적 충성을 바치면 일본 무역에서의 흑자수지를 통해 아시아 무역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굴종을 팔아 은과 구리를 사는 장사였다. 그런데 17세기 중반부터는 은의 수출을 금지하더니 1715년에는 정덕신례로 인해 배도 두 척밖에 운용하지 못하게 되고 1733년에 로쿠재몬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니 거래의 공정한 균형이 깨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하쿠세키의 예가 가장 잘 보여주듯이, 일란무역의 경제적인 이익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흔히 강조되듯이 서양과의 교역이 가지는 대체 불가능한 효용도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비대한 식민제국과의 교역에는 위험과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끝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는 일본과 네덜란드 양방에 있어 일란무역이 가지는 가치가 경제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이윤만으로도 무역은 유지할 가치가 있었다. 일본의 입장에서조차 일란무역이 가지는 문화적, 정치적, 전략적 가치는 그 경제적 가치의 양가성에 의해 흐려질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둘째는 일란관계가 매우 강력한, 18세기의 경우에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무역갈등을 억누르는 수준의 경로의존성을 띠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초의 일란관계는 벌써 백 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상황이었다. 이 사실은 특히 일본 측에서 일란무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까닭에 대하여 설명력을 가진다. 일본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검증된, ‘고분고분한’ 서양 세력이라는 메리트가 작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백여 년 넘게 서양과 교류하여 온 상황에서 서양과의 교역을 쉽사리 일체 중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로쿠재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내에서도 일란무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며 이는 당시 일본 사회 내의 정치적 갈등과 얽매이기도 하였다. 18세기에는 주로 무역에 부정적인 견해에 더 많은 힘이 실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무역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표현되었다.

## 나가며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는 역사적으로는 이백 년 관계사의 한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는 네덜란드 측에서 데지마의 국제정치를 살아내는 동시에 존속시켰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일란무역의 경제적 득실을 따지기 시작한 일본과 쇠



퇴하는 식민제국 사이에서 일찍이 17세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이 해관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현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통제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교역은 지속하였다. 일란무역의 전성기에 비하면 18세기 전반은 침체와 불화가 잦은 시대였으나 100년의 우정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데지마의 국제정치가 보여주는 것은 평화의 내막은 실로 고요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관계는 역동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데지마는 두 국가 간의, 혹은 두 세계 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교섭의 장치였지만, 그 합의가 200년에 걸쳐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데지마의 인간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가장 이질적인 두 세계 사이에서 그 조정과 타협을 매개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된 평화와 통제된 갈등을 요체로 하는 데지마의 국제정치는 데지마를 둘러싼 거시적, 미시적 현실을 아울러 고찰했을 때 그 온전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는 동과 서, 미시와 거시의 접점에 서 있는 개인들의 살아진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데지마의 국제정치가 가지는 함의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저자들인 네덜란드 상인들이 의도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진실이 진술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스즈키, 테사 모리스. 박우희 옮김, 『일본의 경제사상』 솔, 1989.

젠슨, 마리우스 B, 김우영 외 옮김, 『현대일본을 찾아서 1』 이산, 2006..

토비, 로널드. 허은주 역, 『일본 근세의 ‘쇄국’이라는 외교: 일본의 ‘쇄국’은 ‘쇄국’이 아니었다』 창해, 2013.

하멜, 헨드릭. 김태진 역. 『하멜 표류기』 서해문집, 2003.

하쿠세키, 아라이. 이윤지 역. 『서양기문』 세창출판사, 2021.

Clulow, Adam, *The Company and the Shogun: The Dutch Encounter with Tokugawa Jap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Israel, Jonathan. *Dutch Primacy in World Trade 1585–174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The Dutch Republic: Its Rise, Greatness, and Fall 1477–180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Laver, Michael.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in Early Modern Japan: Gift Giving and Diplomacy*. Blomsbury, 2000.

McKay (ed.), *The Asian Studies Parade*. Leiden University Press,

2023.

Van der Velde, P., & Bachofner, R (eds.). *The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Leiden, The Netherlands: Koninklijke Brill NV, 1992

## 2. 논문

신동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조선무역 시도와 조·일 근대화문제.” 하멜표류 3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3.9).

Kazui, Tashiro. “Foreign Relations during the Edo period: Sakoku Reexamined.” Translated by Susan Downing Videen,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Summer 1982),

Koekkoek, Richard, & Weststeijn, “Visions of Dutch Empire: Towards a Long-Term Global Perspective.”, *Low Countries Historical Review* 132-2 (2017)

Massarella, Derek. "The Deshima Dagregisters. Their Original Tables of Contents, 2: 1690–1700." (1988).

———“The Deshima Diaries Marginalia 1700–1740.” (1992).

Van Ittersum, Martine Julia. “The long goodbye: Hugo Grotius’ justification of Dutch expansion overseas, 1615–1645.” *History of European Ideas* 36:4 (2010)

Viallé, Cynthia. “Daily Life of the Dutch in Canton and Nagasaki:  
A Comparison Based on the VOC *Dagregisters* and Other  
Sources.” *Itinerario* 37-3 (December 2013)

Wesseling, H.L. “The Giant that was a Dwarf, or the Strange  
History of Dutch Imperialism.”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1988),

“19 세기 일본, 영 제국과 조우하다  
: 팩스 브리타니카와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의 ‘활동성’”  
글로버가든

윤도원

연세대학교

## 1. 들어가며

본 답사기가 궁구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근대 서양의 장(場)에 ‘포섭’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양 자본/자본가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다. 이는 광대한 주제이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대 / 서양 / 전근대 동아시아 / 근대와의 조우 / 자본과 자본의 역할 등 굵직한 주제들에 관한 선행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이를 피상적으로 짚는다면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분석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는 불명료한 설명으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증대시킨다. 관건으로 이를 모두 담아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필자는 본 답사기에서 시대 (19 세기), 장소(일본), 인물(T.B. 글로버와 그와 ‘연계’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대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행위자들의 역할 및 그 활동성의 동학을 재고/재평가하고자 했다.

선행연구들은 필자가 선정한 시대/장소/인물들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들을 ‘규명’해왔다. 그렇다면 본 답사기의 연구의의는 무엇인가? 본 답사기는 다음 2 가지 점에서 연구의의를 가진다. 첫째, 무대와 인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이다. 백과사전적 지식은 대형언어모델(LLM)이 정교화되는 현재에는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초 자료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 하겠다. 해당 주제 및 소재들에 대한 2 차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이한 주장들을 접하게 되었다. 특히 해당 사항들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나아가 필자는 기존 연구들이 불명료하게 서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둘째,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한 기여 차원이다. 해당 차원은 기여를 위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문제점이 항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언급빈도가 적었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서술·분석하고자 했다. 답사기는 크게 2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했다. 첫째, 글로버(Thomas Blake Glover, 1838-1911)의 도일(渡日)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적 조건인 자딘매디슨(Jardine

Matheson & Co.)/이화양행(怡和洋行, 후술할 시 해당명칭을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글로버와 그의 글로버 상회(Glover and Co.)는 중국-해협식민지-인도로 이어지는 영 제국 네트워크의 자장 속에서 활동하였다. 그 자장 속에서 핵심적인 중심을 차지하는 존재가 이화양행이다. 후술하겠지만, 동아시아 근대에 미친 이화양행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분석은 경제사 혹은 경영사적 차원에서 접근되었다. 본 답사기는 이화양행의 행위자성과 해당 결과에 대해서 주목한다. 둘째, 글로버의 인적 교류에 대한 재고이다. 기존 연구들을 포함하여 그와 연계된 일본의 역사적 인물들은 조슈번(長州藩)과 연계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유신 3 겹 중 하나인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와 조슈 5 겹(長州五傑/Chōshū Five)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 야마오 요조(山尾庸三, 1837-1917), 엔도 긴스케(遠藤謹助, 1836-1893) 그리고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 1843-1910)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의 공수동맹인 삿초동맹(薩長同盟)의 ‘중개자’였던 도사번(土佐藩)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1836-1867)도 높은 빈도로 언급된다. 그렇지만, 글로버가 주요하게 접촉했던 또 하나의 세력인 사쓰마번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언급 빈도가 적다. 막부 말기 사쓰마번의 역할과 그 구성원들의 이후 기여도를 생각할 때 이는 기이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갭을 매우고자 사쓰마번이 1865 년 영국으로 파견했던

사쓰마번견영사절단(薩摩藩遣英 使節團)에 주목하였다. 1863 년이 조슈 5 결이라면 1865 년은 19 명의 사쓰마 번사들이다. 사절단의 구성원 중에는 고다이 도모아쓰(五代友厚, 1836-1885),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 1832-1893), 모리 아리노리(森有礼, 1847-1889) 등 막부 말·메이지 일본에서 중추적인 정치가·관료·사업가들이 적지 않았다. 해당 사절단에 대한 전문이 국내에 부재한 실정이기에 그들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부기하였다.

본 답사기는 영일관계사의 한 편린을 상세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영 제국이 구축한 파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가 일본 내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도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을 ‘개국’시킨 국가는 미합중국이었지만, 19 세기 당대의 국제질서를 주도한 것은 영 제국이었으며, 일본 역시 그 자장에 매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자장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한 인물 중 하나가 ‘스코틀랜드 사무라이(Scottish Samurai)’ 글로버이다, 그와 만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논의할 무대에 대한 소개가 먼저 요청된다. 본 답사기는 무대/행위자/사건 순으로 서술해 나갈 것이다.

### 1.1. 무대: 19 세기, 서세동점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19 세기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기였다. 해당 단어는 밀려오는 파도의 이미지와 그에 대한 응전을 상기시킨다. ‘근대’를 선취한 혹은 해당 개념을 주조한 구미



열강에게는 해당 시기가 다르게 기억된다. 단적으로 ‘문명화사명’(civilizing mission)과 같이 ‘선진적’인 자신들의 표준이 주변부 지역으로 전이/전파되는 시기였다(권태억, 2014). 이는 물질적으로는 구미 열강의 세력증대와 더불어 비물질적인 정신/심상(心象) 차원에서는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우월적인 인식론의 토대로 기능했다.

19 세기가 서세동점의 시기라 호명되지만 동아시아 3 개국인 조선·청나라·도쿠가와 막부의 대응과 응전은 상이하였다. 그리고 응전의 상이성은 3 개국 역사 경로를 노정하였다. 통속적으로 비교되는 단적인 사례가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의 ‘개항’ 시점의 차이가 야기한 양국의 상이한 결과에 대한 논의이다. 1853 년(嘉永 6 年) 매튜 C. 페리의 흑선내항(黑船来航)과 미일화친조약(1854.3.) vs. 1875 년 9 월 운양호사건(雲揚號)과 강화도조약(1876.2.)에 대한 동일차원 에서의 비교가 그 단적인 예이다. 양 ‘국가’가 처해있던 구조와 조건이 유사하다면 최대유사체계분석(Most Similar Systems Design)이 유효할 것이지만, 양국은 최대상이체계분석(Most Different Systems Design)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달랐다. 단적으로 조선의 ‘중앙집권형’ 국가와 도쿠가와 막부가 채택한 막번체제(幕藩体制)는 그 중심을 향한 물질적·비물질적 지향에서 차이가 컸다. 도쿠가와 막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도쿠가와 막부는 자신의 직할지인 어령(御領) 혹은 천령(天領)을 일본 열도의 주요 거점에

배치하여, 해당 정치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친족들인 고산케(御三家)·고산쿄(御三卿)·일문(一門)을 포괄하는 신판(親藩), 집권 이전부터 보필했던 가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다이(譜代) 그리고 자신들의 집권 이후 복속된 도자마(外様)로 영주/다이묘(大名)를 구분하여 대우하였다. 도쿠가와 막부를 현대 정치학의 기준으로 분석하면 해당 정치체제는 군사 독재(military dictatorship)이다. 해당 체제는 자신들에 대한 안보를 위협하는 더 강대한 세력이 출현하거나 해당 세력과의 ‘힘’ 차원의 경쟁에서 밀린다면 자신들의 집권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들의 집권이 정당성 기제보다는 물질적인 힘인 ‘폭력’이 주효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집권 정당성은 빠르게 흔들리고 만다. 도쿠가와 막부 당대에는 자신들의 이러한 힘을 어위광(御威光)으로 표현했다 (와타나베[渡辺], 2023). 그리고 이 어위광은 1853년 흑선내항 이후 빠르게 빛을 잃어갔다. 해당 상황이 발생하자 미토번(水戸藩) 등 신판다이묘의 영지에서도 정치적 격변이 발생하였지만, 격렬한 활동은 도쿠가와 막번체제에서 가장 외곽에 존재하던 도자마다이묘들의 영지에서 촉발되었다. 특히, 웅번(雄藩)이라 불릴 정도로 ‘변정개혁’에 성공했던, 조슈, 사쓰마, 도사 그리고 사가(=히젠) 등 4개의 번이 삿초도히(薩長土肥)로 불리며,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三谷, 2012; 박훈, 2014; 박훈, 2019; 박훈, 2020).

## 2. 행위자: 영 제국과 상인(商人) 그리고 글로버

### 2.1. 주역(主役) I : 글로버

#### 2.1.1. 연구사

글로버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자신의 활동과 그 범위를 조정했다. 우리가 방문할 글로버 정원(Glover Garden/グラバー園)은 1860년대 그와 그의 상회의 궤적을 살피는데 유효한 장소이다.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인물들 간 상호작용은 막부 말(幕末) 정치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글로버에 대한 연구를 크게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에서의 연구경향으로 양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경향이다. 주요한 연구서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연구경향은 그의 개인적인 생애와 함께 그가 영향을 미쳤던 일본의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한다.

○ Sugiyama, Shinya. (1984). “Thomas B. Glover: A British Merchant in Japan, 1861–1870.” *Business History* 26(2), pp.122–38.

○ 스기야마(杉山, 1993). 『明治維新とイギリス商人：トマス・グラバーの生涯(메이지유신과 잉글랜드상인: 토마스 글로버의 생애)』.

○ 나이토(内藤, 2001). 『トーマス・B・グラバー始末：明治建国の洋商(토마스 B. 글로버: 메이지건국의 서양상인)』.

○ 미즈다(水田, 2017). 『幕末明治初期の洋式産業施設とグラバー商会(막부말·메이지초기 서양산업시설과 글로버 상회)』.

다음은 일본 국외에서의 연구 경향이다. 해당 연구경향도 일본의 연구경향과 유사하지만 그의 조건(스코틀랜드人) 등을 부각하는 면모도 존재한다. 주요한 연구서들은 다음과 같다.

○ McKay, Alexander. (1993). Scottish Samurai: The Life of Thomas Blake Glover.

○ Gardiner, Michael. (2007). At the Edge of Empire: The Life of Thomas B. Glover.

McKay(1993)와 Gardiner(2007)/ガーデナ(2012)의 단행본은 글로버의 생애와 그와 연계된 이야기들의 기초적인 토대이다. 해당 저서들은 글로버가 작성한 1 차 자료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의 다각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인물연구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1 차

자료의 유무에 달려있다. 글로버는 적지 않은 1 차 자료를 남겨주었다. 글로버가 남긴 자료들은 ① Glover, Thomas. Uncollected Letters, 1858-1910, ② Glover, Thomas. Records of Takashima Colliery, 1869-70 이다. 해당 자료들은 현재 나가사키현립도서관 (長崎県立長崎図書館)에서 이용할 수 있다(Gardiner, 2007; ガーデナ, 2012). 활자화되지는 않았지만 『グラバー史談速記 (글로버사담속기)』도 주요 전거자료이다.

추가적으로 영일경제관계사에 대한 연구서와 더불어 한국의 글로버에 대한 분석도 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확인하기로는 토마스 B. 글로버에 대한 전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2 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간행된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일본 근대화를 만나다: 서울대생들의 규슈와 도쿄이야기』 중 3 장 “19 세기 영·일관계와 토머스 글로버”에서 그를 다룬다. 해당 내용은 그의 개인사, 19 세기 영일관계, 기도 다카요시와 조슈 5 결과의 만남, 그리고 평가로 나뉜다. 짧은 분량이지만 국문으로 서술된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특기하고자 한다.

○ 스기야마(杉山, 2017).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일영경제관계사연구: 1860-1940)』.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2).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일본 근대화를 만나다: 서울대생들의 규슈와 도쿄이야기』.

## 2.1.2.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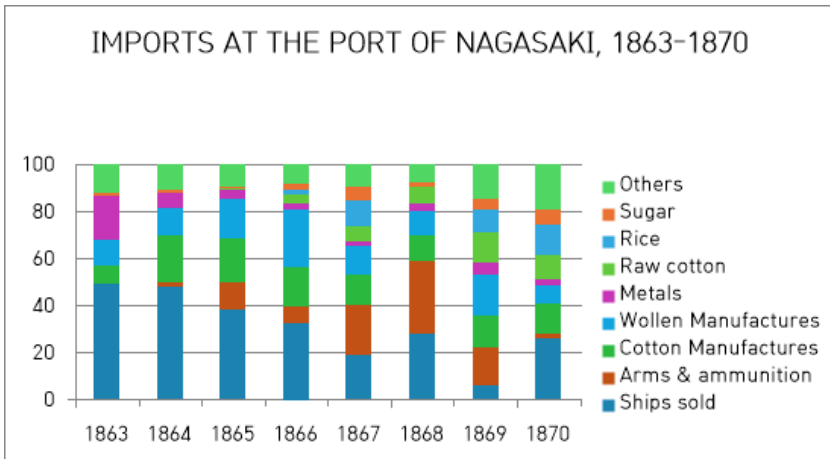
해당 전거들의 교차검증을 바탕으로, 그의 개인적인 생애와 도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는 1838 년 6 월 6 일 스코틀랜드 북동부 애버딘셔주(Aberdeenshire) 프레이저버러(Fraserburgh)의 커머스 스트리트 15 번지에서 런던 북스홀(Vauxhall)의 해안경비대 장교였던 토머스 베리 글로버(Thomas Berry Glover, 1806-1878)와 애버딘셔주(Aberdeenshire) 포다이스(Fordyce, Banff-shire 교구 출신의 메리 핀들리(Mary Findlay, 1807-1887) 사이에서 8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그는 생애 첫 6 년을 어업과 무역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프레이저버러에서 보냈다. 그의 가족은 1844 년 처음에는 그림스비(Grimsby)의 해안경비대로, 애버딘셔의 콜리스턴(Collieston)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버딘의 브릿지 오브 돈(Bridge of Don)으로 이사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해안경비대장으로 승진하였다. 어린 토머스는 먼저 프레이저버러에 새로 개교한 교구 학교(parish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그림스비, 콜리스턴의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올드 애버딘의 학교(Chanonry School)에서 교육을 받았다. 학교를 졸업한 후 글로버는 무역 회사인 이화양행의 해운 사무원으로 취직했고, 1857 년 상해로 이주했다. 동아시아로의 취업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었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다.

1859년 9월 19일 21세의 나이에 글로버는 상해에서 나가사키로 이주했다. 그의 나가사키행은 그의 상해행과 비교하면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는 동료인 맥켄지(Kenneth Mackenzie)와 더불어 도일하였다. 그의 도일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시점은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日米修好通商條約)을 포함한 「안세이 5개국조약」(安政 五カ国條約)에서 명시된 나가사키의 개항 시점 직후에 해당한다. 「미일수호통상조약」 제3조에 따르면 「미일화친조약」에 의해 개항된 시모다(下田), 하코다테(箱館)에 더하여, 가나가와(神奈川) /요코하마(横浜)와 나가사키(長崎)는 1859년 7월 4일, 니가타(新潟)는 1860년 1월 1일, 그리고 효고(兵庫)는 1863년 1월 1일에 개항하기로 약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명백히 규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코하마에는 이화양행의 일본 무역거점이 설치될 예정이었기에 글로버와 맥켄지는 요코하마 이외의 항구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혹은 나가사키뿐이었다. 더욱이 중국과의 무역망 연계를 생각한다면 나가사키는 실질적인 유일한 선택지였다.

글로버는 처음에는 일본 차(茶)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서구의 재화를 무역하는 업무에 주력하였다. 동업자인 맥켄지가 1861년 일본에서 철수하자 그는 동년 자신의 회사인 글로버 상회를 출범시켰다. 글로버 상회는 1861년부터 1870년까지 단기간 존속했지만, 막부 말기 일본 정국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무역 트렌드는 어떠하였을까? 상회가 존속했던

기간과 거의 동일한 기간인 1863-70 년 동안 나가사키 항에서의 수·출입 항목들의 액수와 비중에 대한 세관자료가 남아 있다. 차상인으로 시작한 그의 상인 여정은 1860년대 중반을 지나며, 무기와 군함을 공급하는 무기 브로커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다. 그는 막부 말 정국의 흐름과 긴밀하게 발을 맞춘 양상(洋商)이었다. 하단의 [도표 1]과 [도표 2]는 글로버가 주요하게 활동하던 시기의 나가사키 항에서의 물품에 대한 수입/수출 비중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는 당대의 시대추세와 ‘동행’한 인물이었다.

[도표 1] 1863-1870 년 나가사키 항으로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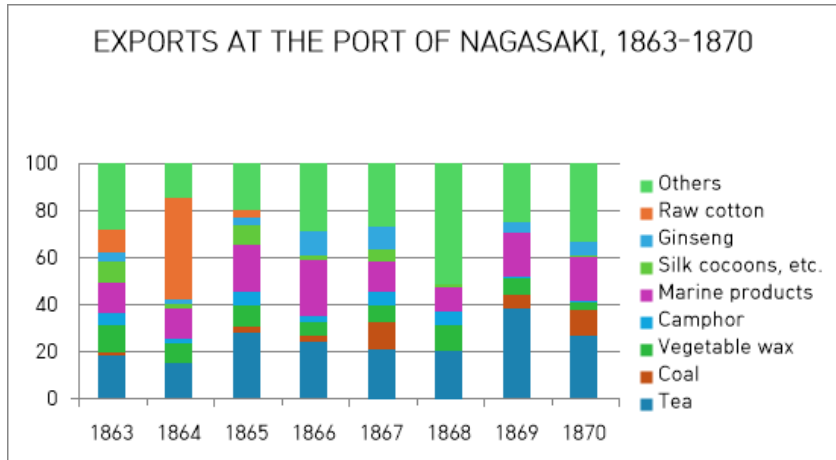


출처: Sugiyama(1984), p.120.



주 1: 단위는 %임.

[도표 2] 1863-1870 년 나가사키 항에서의 수출



출처: Sugiyama(1984), p.121.

주 1: 단위는 %임.

## 2.2. 주역(主役) II: 이화양행

### 2.2.1. 동아시아 근대 레짐의 키플레이어

이화양행은 글로버의 첫 직장임과 동시에 일본 사업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였다. 따라서, 이화양행은 글로버의 궤적을 다룸에 있어 반드시 언급되는 회사이다. 그렇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글로버를

중심으로 이화양행을 다루는 것은 본말전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화양행은 동아시아 근대의 출발점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키플레이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자딘매디슨/이화양행에 대한 연구서들은 적지 않다. 본 답사기에서는 Blake, Robert. (1999). *Jardine Matheson: Traders of the Far East*,와 이시이 (石井, 1984) 『近代日本とイギリス資本:ジャーディン=マセソン商会を中心に(근대일본과 잉글랜드 자본: 자딘매디슨상회를 중심으로)』를 주요 전거로 삼고자 한다.

19 세기 서세동점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시되어 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하나의 요인만으로 거대한 귀납적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난망하거나 허망하다. 19 세기 서세동점의 현실 자체를 특정 요인만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아시아 근대의 출발점이자 서세동점의 시작점으로써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지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1839-42 년 진행된 제 1 차 아편전쟁이 그것이다.

주요 역사적 사건인만큼 아편전쟁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영국과 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아편(鴉片)이라는 무역물품이 가지는 해악성 등에 대한 지적과道光제(道光帝, r.1820-50)와 임칙서(林則徐, 1785-1850)라는 행위자들의 행동과 영국의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쟁이 발발하였다. 해당 전쟁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을 구분해본다면, 제반조건들은 원인(遠因)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근인(近因)은 무엇인가? 우리는 해당 질문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이화양행과 대면하게 된다.

### 2.2.2. 탄생과 ‘아편’

이화양행의 설립과 변영은 기존 무역레짐의 변경과 함께 찾아왔다. 오랫동안 영국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는 극동 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했다. 해당 조치는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야기했다. 독점권과 더불어 동인도회사가 사용한 일부 고압적인 방법 역시 문제였다. 해당 독점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을 야기하는 사람은 “해적”과 동일하게 처벌받았다. 때때로 자유 무역업자들이 동인도회사로부터 “국가 무역(country trade)”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제약되었다. 그렇다면, 해당 상황을 회피할 방법은 무엇인가? 당대의 사람들은 외국의 영사권(consulship)을 수락하는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원 존 리드(John Reid)가 처음 사용한 이 방법은 윌리엄 자딘(William Jardine, 1784-1843)이 광주(Canton)에서 사업체를 설립할 때 원용되었다.

1834 년 동인도회사의 중국 내 무역독점권이 종료되자 자딘과 제임스 매디슨(James Nicolas Sutherland Matheson, 1796-1878) 그리고 동료/경쟁 잉글랜드 상인들은 동인도회사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 이화양행은 동인도회사의 주요 상업 대리점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역 회사 중 하나로 변모했다. 자딘은 이제 다른 무역상들에게 ‘대관리자’라는 뜻의 중국 구어체 호칭인 “타이판(Taipan/大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화양행은 소비자 시장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화양행의 단기간 성공에는 아편 무역과 같은 ‘비도덕적’ 요인이 상존했다. 이화양행만이 아편을 공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대중무역에서 아편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었다. 시기를 앞질러 “1800 년과 1810 년 사이에 중국은 대외무역으로 약 2,600 만 멕시코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1828 년과 1836 년 사이에는 약 3,800 만 멕시코달러의 적자”를 냈다(Blake, 2022: 46). 이러한 놀라운 반전은 아편 수출에 따른 결과였다. 기존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는 비용을 인도산 생면, 은괴 등의 물품 수출로 충당했지만, 이제는 아편 수출만으로도 해당 무역 역조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아편이 유입된 것일까?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금수품 목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추산이 제시되었다. “1800-1821 년 아편 거래는 평균 총 4,500 건/건당 63.5 킬로그램이었지만, 이후로는 폭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1831-32 년에는 19,000 건으로 증가하더니, 1838-39 년에는 40,000 건에 육박”했다(Blake, 2022: 47).

### 2.2.3. 아편전쟁의 촉진자 & 촉발자

무역 역조의 증대와 함께 무역품인 아편의 파생효과는 청 당국의 행동을 촉발시켰고, 청과 영 제국, 정확히는 영 제국의 상인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도광제는 1838 년 12 월 임칙서를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파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했다. 임칙서는 두 가지 노선으로 아편을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는, 지역 향신(鄉紳)들의 협조를 통해 아편 사용을 제어하는 방법, 둘째는, 적극적인 화근 제거로서의 접근법이다.

화근은 광저우의 아편 중개상과 아편 운반 쾌속선, 아편 소굴, 창고, 흡연실, 그리고 그 외 눈에 드러나는 부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임칙서가 반드시 시기와 형세를 잘 살펴 아편을 적극적으로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X, 1978: 185).

이에 대한 서양 상인들의 대응을 협조 노선과 대립 노선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화양행은 청에 대한 강경 대립 노선을 취했다. 그들은 1757 년부터 시작된 광주에서의 ‘제한무역’을 타파하고자 했다. 그들은 광둥무역체제(Canton System)를 타개하여 자신들의 이익확대를 도모했다.

청과의 무력분쟁이 시작된[제 1 차 천비해전(穿鼻海戰)] 시점인 1839 년 12 월 19 일 자딘은 매디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원정 계획과 향후 성취해야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제 충고는 중국의 만리장성 이남부터 전성[지명]에 이르기까지, 혹은 북위 20 도에서 40 도에 이르는 중국 해안을 봉쇄할 해군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해군력은 두 척의 전함, 두 척의 프리깃함, 강을 운행할 수 있는 두 척의 바닥이 평평한 증기선으로 구성하되 6,000-7,000 명의 해군을 실을 수 있는 충분한 운송선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군은 베이징 인근까지 진격해 모욕에 대한 사과, 포기한 아편에 대한 보상, 공평한 무역 협정,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문, 복주, 영파, 상해, 교주 등의 북부 항구와 무역할 수 있는 자유를 황제에게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Blake, 2022:158).

그들의 주장은 어떻게 현실태로 발현되었을까? 한 상회의 요청이 영 제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때 이화양행의 영향을 ‘증명’해주는 자료를 만날 수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증인은 파머스턴 경이다. 제 1 차 아편전쟁이 끝난 직후 전쟁 중 외무장관이었지만 당시는 잠시 관직에서 물러나있던 파머스턴 경 헨리 템플(Henry John Temple, 1784-1865)이 이화양행의 런던 대리인 스미스(John Abel Smith)에게 다음과 같은 문건을 발송했다.

1842 년 11 월 28 일

우리가 중국 내 군사적 외교적 업무와 관련해 이처럼 성공적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지시를 자세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귀하[스미스]와 자딘씨가 너무나 훌륭하게 우리에게 도움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839 년 가을 귀하와 우리가 만난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1840 년 2 월 우리가 내린 지시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너무도 정확하고 완벽해 우리의 후임자들이  
지시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훗날의 결과가 증명했듯이, 결정적인  
군사작전이 양쯔강에서 실행되었고, 이는 우리가 일찍이 1840 년  
2 월 해군 사령관에게 제안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약의  
조건들은 우리가 전권대신인 엘리엇과 포팅거에게 확보하라고  
충고한 조건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이번 사건은 분명 영국에 상업적 이익에 있어 가장  
큰 이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Blake, 2022:178).

하나의 단편적인 문건이 실상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영 제국 외교정책결정권자인 파머스턴 경의 해당 발언을  
통해 이화양행이 제 1 차 아편전쟁 준비·진행·결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제 1 차 아편전쟁은

동아시아 서세동점의 상징적인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이화양행이 존재했다.

이화양행의 행동을 염두해둔다면, 영 제국 상인들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활동과 영향력은 무역 분야로만 제약될 수 없었다. 그들은 영국의 해군력과 자신들의 자금력을 접목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확대하고자 했다. 해당 관점의 연장에서 약관의 젊은 혹은 어린 나이에 도일하여 일본에서 자리잡은 글로버와 그 상회의 활동 및 영향력에 대해서도 재고할 수 있다. 글로버 개인의 역량과 비전을 넘어서서 팩스 브리타니카라는 국제정치적 조건은 그의 활동범위와 영향력의 기반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영 제국 네트워크 속 상인들의 활동과 영향력은 영국의 세계전략의 향방과 국가 이익에 따라 매개되었다.

### 3. 사건

#### 3.1. 사쓰마번사들과의 조우(遭遇)

[사진 1] UCL 내 1863 년 1865 년 ‘일본’ 유학생 기념비





군상들인가? 해당 19 명은 사쓰마번견영사절단(薩摩藩遣英使節団)의 이름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사쓰마 번사들이었다. 정확히는 17 명은 사쓰마 번사들이었고, 2 명은 타번 사람들이었다. 역할을 구분하면 인솔자와 안내역은 3 명, 통역 1 명, 유학생은 15 명이었다. 아래는 [표 1]는 총원 19 명의 간략한 인적사항이다.

[표 1] 사쓰마번견영사절단(薩摩藩遣英使節団) 명단

성명	연령	비고
마치다 히사나리 (町田久成)	27	제국박물관 초대관장
마치다 다케히코 (町田猛彦)	20	
마치다 신시로 (町田申四郎)	18	
마치다 세이쥬 (町田清蔵)	14	
하타케야마 요시나리 (畠山義成)	23	이와쿠라 사절단 참가 개성학교교장(開成學校校長)

사메시마 나오노부 (鮫島尚信)	23	영불대리공사(英仏代理公使)
나가자와 카나에 (長澤鼎)	13	“미일친선의 조상” (日米交流の祖)
모리 아리노리 (森有礼)	18	중국대사 초대 문부대신
마츠무라 준조 (松村淳蔵)	23	미 해군사관학교 유학
요시다 기요나리 (吉田清成)	20	이와쿠라 사절단 참가 미국대사
무라하시 히사나리 (村橋久成)	23	개척사 맥주양조소 개설에 관여
다카미 야이치 (高見弥市)	34	
도고 아이노신 (東郷愛之進)	25?	
나고시 헤이마 (名越平馬)	20	
다나카 세이슈 (田中静洲)	23	

나카무라 히로나시 (中村博愛)	21	마르세유 영사 & 덴마크 대사 귀족원의원
니이로 츠조 (新納中三)	33	인솔자
데라시마 무네토리 (寺島宗則)	33	안내역 외무경 / 문부경 / 참의(參議)
고다이 도모아쓰 (五代友厚)	29	안내역 귀국 후 실업계에 투신
호리 다카유키 (堀孝之)	21	통역 나가사키 출신

출처: 犬塚(1974)를 바탕으로 저자재구성.

주 1: 연령은 1865 년 기준

그 중 기존에 알고 있던 인물은 초대 문부대신을 역임했던 모리 아리노리와 문부경을 역임했던 데라시마 무네토리밖에 없었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어떤 목적으로 도영(渡英)했는지, 이후 그들의 행적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과 글로버의 관계는 어떻게 접점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일본 및 서구 자료에서도 19 명 모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없었다. 사절단 이후 개인별 성취와

개개인의 행로에 따라서 역사적 위상이 상이해졌기 때문이다. 본 답사기에서는 이누즈카(犬塚, 1974)의 『薩摩藩英国留学生(사쓰마번영국유학생)』 및 이누즈카(犬塚, 2001) 『密航留学生たちの明治維新: 井上馨と幕末藩士(밀항유학생들과 메이지유신: 이노우에 가오루와 막발번사)』를 주요 전거로 삼았다.

필자는 해당 인원 중에서 이채로운 이력과 글로버와 다양한 접점을 가진 고다이 도모아쓰란 인물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당 인물과 접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에 대해 탐구할수록 흥미로운 점이 많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소환된다. “동쪽의 시부사와, 서쪽의 고다이”가 그것이다.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 1840-1931)는 관료이자 근대 일본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실업가이다. 고다이는 근대 오사카의 산업 및 실업계에 주춧돌이었다.

### 3.2. ‘팔색조’ 고다이

#### 3.2.1. 삶의 전반기

그의 삶의 전기에 관해서는 다츠키(田付, 2018)의 평전인 『五代友厚:富国強兵は「地球上の道理」(고다이도모아쓰: 부국강병은 ‘지구상의 도리’)』에 기반하여, 후술할 내용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는 1836 년(天保 6 年) 『삼국명승도회(三国名勝図会)』의 저자이자 기록관인 고다이 나오자에몬 히데다카 (五代直左衛門秀堯)의 차남으로 사쓰마국 가고시마성에서 태어났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시하는 사츠마의 기풍 속에서 자랐으며, 8 세 때 아동원학숙 (児童院の学塾)에 다니다가 12 세 때 성당(聖堂)에 진학해 문무를 겸비한 학문을 습득했다.

텐포 년간(天保, 1831-45)에 태어난 동시대인들과 같이 고다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1853 년 흑선내항과 이어진 막말 15 년 격동기라 하겠다. 1854 년(安政元年) 페리가 우라가 앞바다에 다시 나타나자 전국이 요동쳤다. 이때 고다이는 “소년의 뜻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때”라고 감격했다고 전해진다. 1855 년(安政 2 年), 사쓰마번의 군방서역조(郡方書役助)가 된다. 그의 형이 쇄국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국론자의 입장에 선다. 이듬해 나가사키 해군전습소(長崎海軍伝習所)에 번의 전습생(藩伝習生)으로 파견되어 네덜란드 사관에게 항해술을 배운다. 이것이 고다이가 본격적으로 근대 학문과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1862 년(文久 2 年), 그는 번의 증기선 구입 계약을 맺기 위해 뱃사람(水夫)으로 막부 소유의 센자이마루(千歳丸)에 승선해 상해로 건너갔다.

1863 년(文久 3 年) 8 월, 1862 년 9 월 나마무기사건(生麦事件)으로 발생한 영국-사쓰마 전쟁(薩英戦争)에서 영국군은 사쓰마의 증기선 3 척을 압수하는데, 그때 고다이와 데라시마 무네노리는 영국 해군의 포로가 되었다. 고다이는 통역 시미즈

우사부로(清水卯三郎)의 계락을 통해 요코하마에서 작은 배를 통해 영국 함선을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번내에서는 그가 영국군의 포로가 된 것에 따른 오명이 높아져 있었다. 즉시 사쓰마로 귀번하지 못하던 그는 나가사키에서 체류하게 되었고, 나가사키에서 만난 사쓰마 번사 노무라 모리히데(野村盛秀)의 주선으로 귀번을 허락받게 된다.

### 3.2.2. 스코틀랜드 사무라이와의 만남

1863-64 년 잠복기간 중 고다이와 글로버는 나가사키에서 교류하게 된다. 해당 기간 이전에는 양자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렵거나 우호적인 상황에서 만나기 어려웠다. 1862 년 9 월 나마무기사건 이후 영국과 사쓰마, 사쓰마와 막부 간 관계는 해당 사건의 해결 및 ‘타협’ 건으로 이지러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1863 년 8 월의 ‘전쟁’은 그 상황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영국과 사쓰마가 무력분쟁을 벌였지만, ‘전쟁’ 이후 영 제국에게는 사쓰마와의 관계 진전 모색 및 막부와의 관계 재고를 생각하게 되었다. 사쓰마측에게는 해당 ‘전쟁’이 양이(攘夷)의 비현실성을 깨닫게 하는데 주효했다.

주목할 점은 영국-사쓰마 ‘전쟁’ 이후 글로버가 서남지역의 응변에 대한 ‘조력’ 활동을 본격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율’된 타이밍에 고다이와 ‘스코틀랜드 사무라이’는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고다이의 제반여건은 제약되어 있었다. 고다이와 데라시마 무네노리는 전쟁 중 영국 측에 ‘투항’했기 때문에 막부 관리와 외국인 배제를 지지하는 양이파의 눈을 피해 은신해야 했다. 두 ‘도망자’는 사쓰마 가문과 도쿠가와 막부 모두에서 반역자로 의심받는 형국이었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고다이는 나가사키에서 은신하면서 글로버와 교분을 쌓게되었다.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고다이는 세계 정세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기했다.

그 ‘이해’의 연장에서 1864 년 6 월경, 고다이는 사쓰마번에 일본 근대화 개혁에 관한 상서(上書)를 제출했다. 고다이가 제출한 상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었다. 1) 최첨단 기계를 구입하여 사쓰마 가문의 산업을 현대화할 것 2) 근대 기술을 배우고 서양 문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학생들을 해외에 파견할 것 3) 외국 기술자를 고용할 것 4)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상하이와의 무역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그는 사람들이 해외에 유학하여 서양의 기술을 배워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시대에 뒤쳐질 것이기에.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던 사쓰마번은 그의 진언 내용을 채택해 3+1 명으로 구성된 시찰단과 함께 15 명의 학생들을 영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865 년(慶応元年) 4 월, 번의 명령에 따라 고다이는 데라시마 무네노리, 모리 아리노리 등과 함께 사쓰마번의 사절단으로 영국으로 출발하여 유럽 각지를 순회했다.



사쓰마번의 사절단의 파견에 있어 글로버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고다이의 상서를 촉발시킨 점과 더불어 글로버는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업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사절단은 1865년 4월 17일 사쓰마국 쿠시기노하시마(現 가고시마현 이치키 쿠시기노시)에서 글로버가 주선한 증기선인 오스트레일리아호(オーストライエン号)를 타고 영국으로 출항했다. 고다이는 5월 영국에 도착하였고, 7월에는 벨기에, 9월에는 프로이센,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프랑스를 방문한다. 고다이는 1866년(慶応 2年) 2월 귀국/귀번 후 승진(御小納戸奉公格)하여 사쓰마번의 상사(商事)를 총괄하는 회계 담당에 취임한다. 그는 해당 시기 글로버와 합작으로 나가사키 고스게(長崎小菅)에 부두를 개설하는등 사업가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두란 속칭 주판 부두(そろばんドック)라고 불리는 것으로 현존하고 있다. [小菅修船場跡].

### 3.2.3. 유신 이후

1868년(慶応 4年), 보신전쟁(戊辰戦争)이 발발하자 고다이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과 함께 막부 타도에 활약했다. 그 결과 1868년(明治元年)에 메이지 신정부의 참여직외국사무과[参与職外国事務掛]를 맡았다.

외무관권판사(外国官權判事), 오사카부권판사 겸직으로 오사카에 부임하여 사카이 사건(堺事件), 영국 공사 파크스 습격 사건(イギリス公使パークス襲撃事件) 등의 외교적 사안의 처리에 임했다. 외교 사안에 대한 처리와 함께 고다이는 오사카에 조폐료를 유치했다. 나아가, 초대 오사카 세관장이 되어 오사카 세관 역사의 막을 열었다. 1869 년(明治 2 年) 관직 퇴임 후에는 모토키 쇼조(本木昌造)와의 협력으로 영일사전을 간행하고, 동전에 대한 신용을 높이기 위해 금은분석소를 설립했다. 방직업, 광업, 제염업, 제염업 등의 제분야 산업발전에도 힘썼다.

관직에서 은퇴하였지만, 삿초번별 정부와의 연계가 강해 1875 년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타가키 다이ске 등이 요정에 모여 의견을 교환한 오사카 회의(大阪會議, 1875.2.11)나 구로다 기요타카가 비판을 받은 개척사 관유물 불하사건 (開拓使官有物払下げ事件)에도 관여되어 있는 등 미쓰비시의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 1835-1885)와 같은 정상(政商)의 면모를 보였다. 그 밖에도 오사카 재계인 다나카 이치베(田中市兵衛, 1838-1910) 등과 함께 오사카 증권거래소, 오사카상업회의소, 오사카 상업강습소, 오사카 청동회사, 간사이무역사, 공동운수회사, 고베 부두, 오사카 상선, 오사카상선, 한카이 철도 등을 설립했다. 이른바 “근대 오사카 경제의 아버지”라 명명되기에 부족하지 않은 행보였다.

#### 3.2.4. 만남의 연쇄

한 인물의 일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측점이 존재할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점의 순간과 고점의 순간이 그 관측점들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특히, 가장 저점의 순간에서 한 인물이 취하는 행동은 그의 본질적인 모습과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라 하겠다. 고다이의 일생을 반추한다면, 1863-64 년이 부침이 가장 심각한 시점이었다. 그는 사쓰마번의 ‘근대화’의 주요 기수로써 젊은 시절부터 두각을 보였다. 그러나, 1863 년 영국-사쓰마 ‘전쟁’은 그에게 재난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그는 번에서도 막부에서도 주목 받는 ‘기피’인물이 되었다. 단기간의 급격한 ‘전락’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해당 기간 나가사키에서 ‘은신’하였는데, 위기와 기회로 전변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글로버와의 만남 및 교류를 통해 사고의 심화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단순한 사람 간 만남을 넘어서서 고다이와 글로버의 만남은 긍정적인 연쇄과정으로 지속되었다. 1865 년 사쓰마번의 유학생 파견 및 사쓰마번(고다이)과 글로버의 공동사업 진행 등으로 확대·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되었다. 고다이의 인생을 서술함에 있어 필자는 광산업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유신 이후 글로버의 주요 활동 무대가 광산/탄광업이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양자의 관계는 긴히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로버는 왜 고다이와 같은 젊은 지사(志士)들과 ‘공명’하였는가? 선행연구는 글로버의 막부 말 현실에 대한 ‘개입’의

동기를 1) 자신의 이윤 추구, 2) 이상(理想) 지향, 3) 제국주의적 시선 등으로 정리한다. 이 동기들은 상호배타적 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어떠한 요소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글로버에 대해서는 글로버 자신의 발언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글로버는 자기자신을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번역자 중 제일의 번역자”(McKay, 1993)로 표현했다. 그가 도쿠가와 막부의 어떤 측면에 부정적인 인식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그는 막부의 권력에 강력히 저항하려는 강한 유인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글로버는 말년에 1866년 주일영국공사인 해리 S. 파크스(Harry Smith Parkes, 1828-1885)의 사쓰마행에 있어 수행한 중개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1866년 파크스는 해당 만남을 통해 번주 시마즈 다다요시(島津忠義) 및 ‘국부’ 시마즈 히사미쓰, 사이고 다카모리, 데라지마 무넨노리 등과 만났다. 그리고 이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 혹은 교섭의 장이었다.

글로버의 ‘회고’는 단순한 중개자의 역할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중개 행위가 야기한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버에게 있어서 사쓰마의 주요 소통 대상으로써 고다이 도모아쓰가 있었다. 우발적인 조우로 사그라들 수 있었던 양자의 ‘만남’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넘어서 기능했다. 사쓰마와 글로버 상회 그리고 영 제국을 매개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은 다른 파이프라인과 연계되며, ‘혁명’적 변화를 추동하는 기초가 되었다.

## 4. 나가며

본 답사기는 이화양행, 토머스 글로버 그리고 고다이 도모아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시대/장소/인물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답사기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그 구상이 최초의 목표대로 달성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개별적인 요소들의 연쇄작용에 일면을 포착하고자 시도했으나, 연쇄작용의 연쇄는 필자가 상정한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답사기에서는 다음 3가지 차원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첫째, 19 세기 동아시아 서세동점의 시기에 있어 이화양행 등 서구상인들의 역할에 대한 재고이다. 자본은 모든 역사적 사건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조건이지만, 19 세기 동아시아에서는 토대를 구성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활동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토머스 글로버라는 개인의 활동성에 대한 재고이다. 그의 개인적인 성품과 의도를 넘어서서 그는 19 세기 영 제국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 역시도 그 네트워크의 일부로써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연계는 그의 활동범위와 영향력의 토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막부 말기 일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들’ 중 하나로 부상했다. 셋째, 고다이 도모아쓰 등 사쓰마 번사들의 활동성에 대한 재고이다. 기존 연구들도 막부

말기 사이고 다카모리·오쿠보 도시미치 등 사쓰마번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 하게 다루었지만, 본 답사기에 다루는 토머스 글로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다루었다. 필자는 사쓰마번견영사절단(薩摩藩 遣英使節團)과 그 중심인물인 고다이 도모아쓰와 글로버의 연계에 주목하였고, 그 의의와 영향을 서술하였다.

본 답사기를 저술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파편적인 지식들의 연쇄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함께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시각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서사를 구축하는 것의 지난함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 난망하지만 그에 대한 시도는 다른 연구에서 지속될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1 차 자료

グラバー史談速記(글로버사담속기).

Glover, Thomas. Uncollected Letters, 1858-1910.

Glover, Thomas. Records of Takashima Colliery, 1869-70.

## 2 차 자료

권태억. (2014).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 1904-1919』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와타나베 히로시(渡辺 浩). 이새봄 옮김. (2023).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 .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2).

『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일본 근대화를 만나다: 서울대생들의  
규슈와 도쿄이야기』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훈. (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 민음사.

박훈. (2019). 『메이지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훈. (2020). 『메이지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 .

## 21 세기북스

石井寛治. (1984). 『近代日本とイギリス資本: ジャーディン=マセ  
ソン商会を中心に』 . 東京大学出版会.

犬塚孝明. (1974). 『薩摩藩英国留学生』 . 中公新書.

- 犬塚孝明. (2001). 『密航留学生たちの明治維新 井上馨と幕末藩士』. 日本放送出版協会・NHK ブックス.
- 杉山伸也. (1993). 『明治維新とイギリス商人: トマス・グラバーの生涯』. 岩波新書.
- 杉山伸也. (2017). 『日英經濟關係史研究: 1860-1940』.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田付茉莉子. (2018). 『五代友厚: 富国強兵は「地球上の道理」』. ミネルヴァ書房.
- 内藤初穂. (2001). 『トーマス・B・グラバー始末: 明治建国の洋商』. アテネ書房.
- 水田 丞. (2017). 『幕末明治初期の洋式産業施設とグラバー商会』. 九州大学出版会.
- 三谷 博. (2012). 『明治維新を考える』. 岩波書店.
- Blake, Robert. (1999). *Jardine Matheson: Traders of the Far East*. Orion Pub Co.
- (한국어역: 로버트 블레이크 지음. 김경아·오준일 옮김. (2022). 『청제국의 몰락과 서양상인: 이화양행
- Gardiner, Michael. (2007). *At the Edge of Empire: The Life of Thomas B. Glover*. Birlinn.
- McKay, Alexander. (1993). *Scottish Samurai: The Life of Thomas Blake Glover*. Canongate Books.



(日譯: マイケル・ガーデナ. (2012). 『トマス・グラバーの生涯: 大英帝国の周縁にて』 村里好俊, 杉浦裕子訳. 岩波書店).

Sugiyama, Shinya. (1984). “Thomas B. Glover: A British Merchant in Japan, 1861-1870.” *Business History* 26(2), pp.122-38.

##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국제정치 규슈 국립박물관

김성아

서울시립대학교

### 들어가며

오늘날 ‘반도체’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사와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반도체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 제품 뿐만 아니라 여객기,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의 생산라인, 의료기기, 무기 체계, 인공지능(AI)까지 첨단 산업분야의 기반이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은 어느 한 국가가 독점으로 생산을 할 수 없고, 설계, 제조, 패키징 및 어셈블리의 각 단계가 국가별로 분업화 되어있는 지구반도체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Covid-19과 같은 팬데믹기간 동안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구글의 전 CEO인 에릭슈미트(Eric Schmidt)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혁신력’에 있으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이 ‘국가 권력’의 원천이다”라고 하였다.(Foreign Affairs, 2023.2.28) 이러한 과학기술력에 있어 ‘혁신’은 패권국의 필요조건인 경제력과 군사력 의 주요한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세계 패권 질서의 향배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2050년 미래 국제 질서를 예측하기 위하여 오늘날 지구 반도체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혁신 역량 강화’와 수출 통제 조치와 같은 ‘제재’를 통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을 통해본 미래 아·태 질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어제와 오늘

### 반도체 산업의 역사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성능 및 생산성 향상을 거듭하였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웹기반의 온라인 서비스와 스마트폰의 개발로 이어졌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23, 16)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간 세계 GDP의 약 3조 달러가 반도체 혁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간접적인

영향은 약 11조 달러에 달한다. 또한 향후 10년간 반도체 기술의 혁신은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혁신을 이끌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8년 벨연구소에서 윌리엄 쇼클리(William Bradford Shockley)가 트랜지스터를 발견한 이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잭킬비(Jack S. Kilby)와 페어차일드의 로버트 노이스 (Robert Noyce)가 1958년 집적회로를 개발하여 오늘날의 반도체 산업의 포문을 열었다. 1960년대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Gordone Moore)등을 통해 반도체 시장은 호황을 맞게 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로 제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한 일본이 반도체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에서 1986년 사이에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20%로 급감한 반면, 일본의 DRAM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30%미만에서 약 75%로 급증하였다(Irwin, 1996, 7).

미국에서 개발한 반도체가 일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리카도의 비교 산업 우위론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인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론에 기인한다(Lee, 2023, 12).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굴기에 강한 위기감을 느꼈고 양국은 무역 마찰을 겪었다.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마찰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에 대한 인식 격차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칩의 경쟁력 저하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일본은 섬유, 자동차 등 산업제품을 둘러싼 기존 무역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았다(Akihiro Okada, The Japan News, 2023.8.5)

1980년대 미국의 적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협정에 따른 반덤핑 관세와 시장 접근의 제한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때,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Ibid.) 또한, 일본은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집중한 대만의 TSMC와 달리 종합반도체회사(IDM)가 주도하는 최종 단계 상품(전방산업)에 집중한 나머지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Lee, 2023). 1985년 무역분쟁의 환율 조정을 위한 플라자합의 이후, 부담을 느낀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1991년 1차 반도체 협정, 1991~1996년 2차 반도체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80년대 말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2022년에 약 9%로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과의 싸움의 틈새속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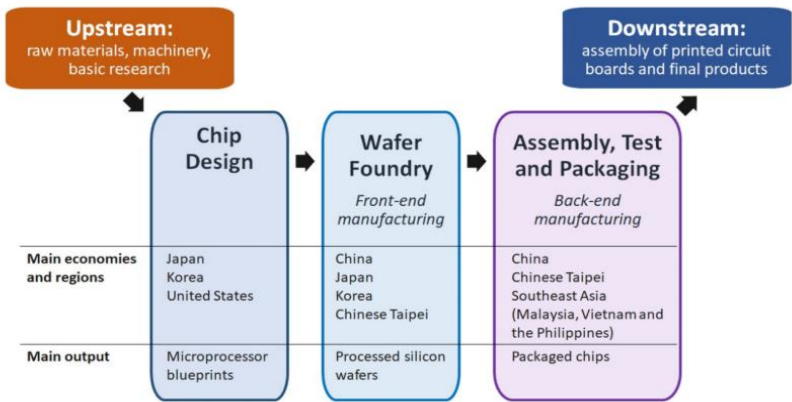
## 반도체 산업 구조 및 현황

반도체 산업 구조는 크게 설계(Design), 제조(Fabrication), 패키징(Assembly&Test)으로 구분된다. 먼저, 반도체 설계는 반도체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후방산업(Upstream)과 연관된다. 설계에는 설계자산, 공정 및 측정 장비, 소재 업체 등이 있으며, 설계와 유통만을 담당하는 쉘컴, 엔디비아와 같은 팹리스 기업, 설계와 제조 모두

담당하는 삼성과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업체 (IDM, Intergrated Device Manufacturer)등이 있다. 설계의 경우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는 영국의 ARM과 같은 IP(Intellectual property)기업의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다. CSIS의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설계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EDA, 반도체 IP및 설계 서비스 매출을 포함한 전 세계 설계 시장 점유율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hadani and Allen, 2023, 6). 다음으로 반도체칩 제조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과 같은 제조 기업(파운드리)가 담당하는데 네덜란드의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반도체 설계를 식각한다. 반도체 제작과정은 실리콘 채취로부터 시작해 실리콘을 정제하여 지름 300mm안팎의 웨이퍼로 제조 한다.<sup>(최제영, 2022., 136).</sup> ‘실리콘 웨이퍼’로 대표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은 ‘21년 기준 대만이 시장 점유율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 한다. (미국 13%, 일본 13%, 대만25.4%, 한국 18.3%, 중국 14.8%, 기타 15%)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반도체 웨이퍼 시설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1,470개의 웨이퍼 제조 시설중 1, 215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Thadani and Allen, 2023, 17).웨이퍼 제조 및 생산을 담당하는 팹 건설 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설비투자를 많이 한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팹리스 기업의 수탁을 받아 첨단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진 이유이다. 펍에서 웨이퍼별 공정이 완료되면 개별 칩을 절단, 분리, 테스트, 조립하여 회로기판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패키징 과정을 ATP(Assembly, Test, Packaging)라고 한다. ATP는 노동집약적인 과정으로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전방산업(Downstream)은 최종 상품으로 조립되는 모바일기기, 컴퓨터, 자동차, 가전, 방위 산업 등이 해당된다.

〈그림 1〉 반도체 산업 구조



출처: McKinsey and Company (2022) and BCG and SIA (2021) OECD(2023/05)

VULNERABILITIES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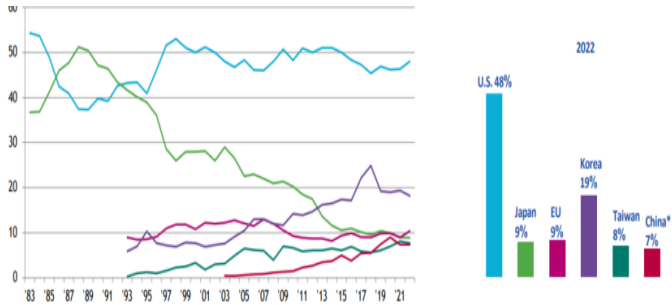
반도체 종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D램과, 장기기억을 담당하는 낸드플래시가 있다. 반도체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로직, CPU, 광학, 아날로그, 개별반도체 등)는 연산, 추론과 같은 정보처리를 수행하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여 팹리스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및 서버 CPU시장의 인텔, 통신용 반도체 시장의 브로드컴, 무선통신과 모바일 프로세서의 퀄컴, AI데이터를 가속 처리하기 위한 GPU 시장의 엔디비아 등이 있다(최계영, 2022). 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기업 또한 설계를 최적화하고, 제품별 맞춤 생산 및 공급망 관리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한 칩하드웨어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수직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걱정은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파운드리로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뿐 이라는 것이다.(Ibid.) 하지만, 현재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총 가치의 39%를 차지하며, 일본, 유럽(네덜란드, 영국, 독일), 대만, 한국 등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 및 지역의 기여도가 53%에 달하고 있다.(Khan et al., 2021, 3) 현재 미국은 달러기반 기축 통화국임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지구반도체 가치 사슬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축 반도체 국가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림 2〉 반도체 산업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출처: SIA(2023) Factbook (세계반도체 무역통계(WSTS), Omdia 및 SIA추정치

## 반도체 전쟁의 서막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질서가 이어졌다. 이후 2012년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적 약세, 사이버 위협의 부상(2007년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의 디도스 공격 등), 희토류등 자원을 매개로한 2010년-2014년 미-중간의 자원 전쟁은 미-중 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미국은 2018년 국방수권법에 의거하여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COVID-19에 의한 전염병 기반 팬더믹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충격을 주었다. 반도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물가 인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졌다. 미국의 200개 이상의 제조업 부문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에의 존한 업종의 가격은 다른 제조업보다 6% 높았으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미국의 자동차 가격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Klyman, The Wall Street Journal, 2022.6.12). 또한, 반도체 산업별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한 OECD보고서 (Haramboure et al., 2023)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으로 높은 고정 생산 비용과 높은 집중도를 특징으로 한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반도체 생산의 무게 중심은 일본과 미국에서 중국, 한국, 대만등 아시아 생산국으로 옮겨갔다. 만약, 반도체 생산이 한 국가에서 중단될 경우 수 많은 후방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게르마늄 및 갈륨 원석 채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필수소재 공급국으로 미국기업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최대의 반도체 시장이다. (SIA, 2023, 15) 이러한 복합적인 지구 반도체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은 수출 통제조치를 통한 ‘제재’ 와 동시에 반도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

### 1.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와 대중국 ‘제재’라는 두 트랙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개편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8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를 제정하였다. 반도체 과학법은 약 2,8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과 세액공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에 25%의 세액 공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미 상무부의 반도체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설립 운영 (NSTC,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반도체 산업분야 인재 개발등이 포함된다.

최근 미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상의 가드레일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23.9.22). 이 가드레일 조항은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 설비 확장을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 있어서

자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경쟁국 산업 발전에 활용되는 것과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어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통해 첨단 반도체 뿐만 아니라 생산 장비 까지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하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전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하게 중국에 대한 경쟁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와 동맹국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차이점을 보인다. 2022년 5월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EU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등을 통한 전략적 공조뿐 만 아니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을 대상으로 칩4동맹(미국, 한국, 대만, 일본) 및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2. 중국

중국은 시진핑 1기서부터 핵심기술의 확보 및 자립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반도체 등 10개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국은 'China Standard 2035' 계획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표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2020년 10월 중국 공산당 오중 전회에서는 처음으로 전략과학기술의 분야 및 목표, 조치 등이 발표되었고, 이는 1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다. 14년차 5개년 계획은 첨단 기술 자립을 위하여 R&D투자를 매년 7%이상 확대하여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반도체산업 진흥책’을 발표하고 2021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시대 핵심인 반도체의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로 한다. (백서인 외, 2022) 그리고 2023년에는 디지털 중국의 미래 전략을 담은 ‘디지털 중국 건설 전체 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국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으로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와 과기부에서는 국제 협력을 위하여 2023년 1월, ‘외자유치확대를 위한 외자 R&D조성에 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 BRI)과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상하이 협력기구(SCO)등을 통해 아·태지역내 교역활성화와 역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3. 일본

일본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국내적으로 경제시책을 일체적으로 강구함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반도체와 공급망 관리등 첨단기술 확보 및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 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제정하였고, 2023년 5월에는 이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전략은 일본 반도체 생산 매출액을 증대시켜 일본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하여 2022년 5월 미-일 상공업파트너십을 통해 ‘반도체 협력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같은해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본 원칙 이행을 위한 공동 테스크포스(TF)가 발족하였다. 2022년 7월 미-일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R&D)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결과 미국의 국립 반도체기술센터(NSTC,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를 모델로 하는 일본 정부 지원의 R&D센터(LSTC, Leading-Edge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미국 및 유럽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일본 기업 컨소시엄인 라피더스(Rapidus)를 구성하였다. 정부R&D지원센터(LSTC)의 지원을 받을 라피더스(Rapidus)는 2027년 부터 차세대칩 2나노 미터(nm)의 설계 및 생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국의 마이크론은 2012년 파산한 일본 DRAM 제조사 엘피다메모리즈(Elpida Memories)를 인수하면서 일본에 제조시설을 설립하였고,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생산된 DRAM중 최고 밀도인 새로운 고용량 저전력 1베타 DRAM을 만들기 위해 히로시마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Shivakumar

el al.,2023) 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는 일본의 소니와 자동차 부품제조사인 덴소와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웨이퍼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 이어 첨단 미세공정을 도입하는 두번째, 세 번째 TSMC팩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해외 기업 유치에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일조했다. 또한 일본이 1990년대까지 추구했던 반도체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외국과의 파트너십같은 국제협력 없이는 칩분야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현재 인식과 유사하다는 점(Ibid.)에서 주목할 만하다.

#### 4. 한국

한국은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반도체’가 선정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인 ‘K-칩스법’을 공포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등을 통해 약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투자활성화, 선도기술개발, 인력 확보등을 추진하고, 메모리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투자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전용 펀드를 민관이 함께 출범 코자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주도의 RCEP에 참여한데 이어('22.1월) 미국 주도의 IPEF에도 가입 ('22.5월) 하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CHIP4(미국, 한국, 일본, 대만) 동맹에도 참여하고 있다.

## 5. 대만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약 60%, 세계 최첨단 칩의 92%를 공급하고 있다. 대만은 기존 국민당 정부하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여왔다. 하지만 반중, 친미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Tsai Ing-wen)정부가 2016년 정권을 교체한 이래로, 소위 "반도체 방패론(Silicon Shield)"을 내세우며 TSMC의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16대 총통으로 당선된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Lai Ching-Te) 후보 또한 반도체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반도체 주도 성장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특히 중요합니다. "실리콘 방패"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망가트리려는 권위주의 정권의 공격적인 시도로부터 우리와 다른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역 최첨단 생산 거점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Tsai Ing-wen, Foreign Affairs, 2021 년 10 월)

대만은 2021년 행정원 각료회의에서 ‘대만 반도체 제조 우위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2030년 반도체 생산액 5조 달러 도달을 목표로 소재, 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2021년 TSMC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약 275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기초 소재의 자립,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20년부터 「차세대 초미세(옹스트롬) 반도체 계획」 추진을 통해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던 대만이나 중국 대신 일본과 미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다.

##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의 미래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은 지구 반도체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반도체 혁신 역량’ 강화와 수출 통제 조치를 통한 ‘제재’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반도체 혁신 역량’은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모델스키와 탐슨(Modelski and Thompson, 1996)의 리더십 장주기론에 따르면, 선도부분(Leading Sector)의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가 세계 정치의 패권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선도 부분에 대한 혁신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혁신체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따라 혁신역량을 평가한다 혁신요소로는 연구개발투자, 인적자원이 있고, 산출요소로는 기술특허, SCI논문 등에 대한 지표가 있다.(배영자, 2017). 이러한 평가 지표중 연구인력, 과학출판물, 특허 등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과학기술혁신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Allison et al., 2021) 따라서 선도 부분에 대한 혁신을 국가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혁신체제 투입요소로 연구개발투자, 인적자원과 산출요소로는 기술특허, SCI논문 등에 대한 지표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혁신 역량을 평가한다(Ibid.). 이러한 평가 지표중 연구인력, 과학출판물, 특허 등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과학기술혁신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Allison et al., 2021) 또한, 중국이 혁신을 하기 위한 역량이 집중되었을 때,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력 전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apkin and Thompson, 2003, 333).

다음으로 제프리 덩(J. Ding, 2023, 4)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력을 평가할 때, 기술의 혁신력(Innovation Power)과 확산력(Diffusion Power)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확산력’은 연구개발로 인한 효과가 산학연 연계를 통해 기술 상용화 단계를 거쳐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천 기술로 개발된 신기술이 상용화 단계를 거쳐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과정에 도입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세기 초 유럽보다 적은 혁신력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기술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Ibid.) 반면 냉전기 소련의 경우 ‘혁신력’과 관련된, R&D지출 및 인력 지표에서 미국보다 앞섰지만, 국가주도의 폐쇄적인 경제 시스템하에 상용화 기술 단계로 확대되는데 결함이 있어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제프리 덩은 글로벌 혁신 지표(Gloval Innovation Index)와 글로벌 경쟁력 지표(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토대로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혁신력’과 ‘확산력’ 사이에 차이(Gap)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덩에 따르면(Ding, 2023, 17), 중국의 ‘혁신력’은 미국과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확산력’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아직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측정하기 위한 혁신 역량 평가에는 ‘혁신력’ 뿐 아니라 ‘확산력’을 고려해야 한다.

CSIS 전략기술 프로그램 이사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 정책에 대한 제언에서 화웨이의 경우 중국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첩보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한다. (Lewis, 2023, 5)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민간에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자유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하 경쟁 체제와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의 국가주도의 혁신 체제간의 시험대(Testbed)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루이스는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탈취한 기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즉,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제한하기 위한 탈위험화(de-risking)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Lewis, 2023, 9). 이는 곧 ‘제재’와도 연관된다.

미국은 2023년부터 대중국 정책을 설명하는데 있어 ‘디리스크잉’(De-risk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디리스크잉은 중국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다각화, 선택적 디커플링 등을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양자 무역관계는 2022년도에 6,9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따라서 미-중간의 ‘디커플링’(De-coupling)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Engelke and Weinstein, 2023). 힌리치재단(hinrich foundation)의 알렉스 카프리(Alex Capri, 2023)는 “디커플링은 경제적인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고, 디리스크잉은 특정국가와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다 미묘하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디리스크잉’이 ‘디커플링’과는 다르게

위험이 제거된 이후에는 거래 및 투자는 지속하는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크잉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올라프 솔츠(Olaf Scholz)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지도자들의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반대를 표명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잉과 다변화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디리스크잉’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22년 10월 7일 전면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데 이어, 2023년 10월 1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기술 범주와 지역을 확대한 보다 강화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였다(DOC, 2023). 수출 통제는 특정 상품, 기술, 서비스의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및 법률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가 및 국제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 이후 1996년 미국과 동맹국들이 체결한 바세나르 협정은 회원국의 수출통제와 관련 헌법과 관련 역할을 하고 있다. (Allen and Benson, 2023, 16~18)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생산이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는 16나노미터(nm) 공정 노드 이하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로직 칩, 18nm 노드 이하의 단기 메모리 칩(DRAM), 장기 메모리 칩(NAND)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된 규제에

따라 노드에 구매받지 않는 장비는 구형 칩 모델만 생산하는 공장으로만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네덜란드가 추가 통제를 채택했고, G7 히로시마 정상 공동성명, EU 경제안보전략, 독일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과 같이 동맹국들이 외교 정책의 도구로서 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Ibid.)

미국의 수출통제와 같은 ‘제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도 있다. ASML의 CEO 피터웨닝크(Peter Wennink)는 “수출 통제를 위해 그의 회사는 “희생”했고 미국 회사는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였다(MIT Technology Reveiw, 2023). 한국의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메모리칩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제재로 인해 미국에 허가 예외 적용을 위한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 Validated End-Users)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제재’의 효과에 대하여 미국 Belfer보고서(Klyman, 2022)에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제재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강화시켜 미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라고 지적하며, 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표한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제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대만뿐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을 포함한 EU회원국까지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제재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Allen, 2023).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능력을 간과할 수 없고,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구축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기도 한다(Chiang, CNBC, 2023).

이에 대해 중국은 ‘디리스크’는 위장된 ‘디커플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Globaltimes, 2023)에서도 디리스크는 디커플링의 언어유희에 불과” 하며, 디리스크는 탈중국화 (De-China) 혹은 탈지구화(De-Globalization)과 같은 의미로 디리스크 자체가 세계 경제에 위험(risk)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주요 원자재 수출 금지등의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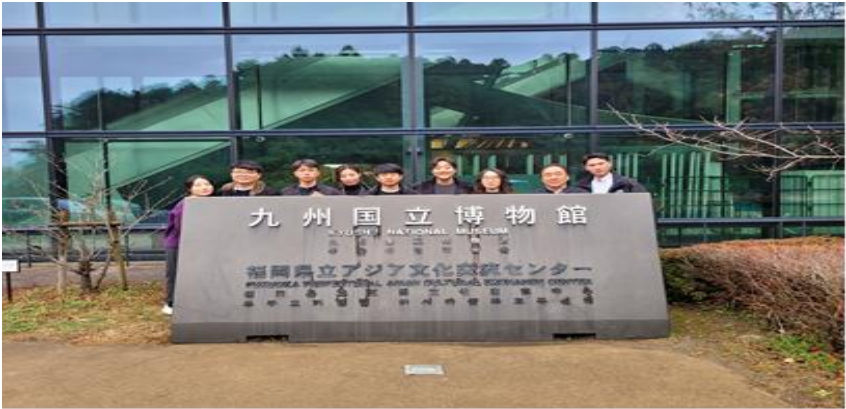
‘디리스크’와 ‘디커플링’ 모두 중국에 대한 ‘위협’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따라서 CSIS에서는 디리스크가 의도치 않게 디커플링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본다(Emily Benson and Gloria Sicillia, 2023).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Ngozi Okonjo-Iweala)사무총장은 ”다양한 글로벌시장과 회복력을 통해 과잉 없는 상호의존을 통한 재세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Foreign Aff.,2023)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기지 다변화 및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국가와의 협력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나가며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은 소련에 대해 ‘봉쇄’(Containment) 전략을 펼쳤다.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 주도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한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관여 전략은 결국 ‘환상에 기반한 것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Orion, 2020)이 되었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후 세계 경제 2위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부터 중국을 경쟁 상대이자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고, 위험 관리 차원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 의존된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속에서 각 국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제재’라는 투트랙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인 한국은 ‘민감성’과 ‘취약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대응하는 주먹구구식 전략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청사진이 필요하다.

지구반도체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 재세계화(Reglobalization)된 미래 2050의 아·태질서 속에서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규슈 국립박물관 앞에서 만청선생님과 사랑방 21기: ‘도자기’로 ‘반도체’를 빛다?>

실리콘을 주 원료로 한다는 점에서 도자기는 반도체와 비유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Allen, G,C and Benson, E, 2023. March 1. Clues to the U.S.-  
DutchJapanese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Deal Are  
Hiding in Plain Sight,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https://www.csis.org/analysis/clues-us-  
dutch-japanese-semiconductor-export-controls-deal-are-  
hiding-plain-sight](https://www.csis.org/analysis/clues-us-dutch-japanese-semiconductor-export-controls-deal-are-hiding-plain-sight)
- Allen, G,C, 2023.October, In Chip Race, China Gives Huawei the  
Steering Wheel Huawei's New Smartphone and the \Future  
of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https://www.csis.org/analysis/chip-race-china-gives->

huawei-steering-wheel-huaweis-new-smartphone-and-  
future

Allison, Graham. 2021. “The Great Rivalry: China vs. the U.S. in the  
21st Century.” Paper,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great-rivalry-  
china-vs-us-21st-century](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great-rivalry-china-vs-us-21st-century)

Akihiro Okada, 2023, Curtain Rising on Era of ‘diplomatic War’ over  
Semiconductors  
[https://japannews.yomiuri.co.jp/editorial/political-  
pulse/20230805-127624/](https://japannews.yomiuri.co.jp/editorial/political-pulse/20230805-127624/)

Alex Capri, China decoupling versus de-risking: What’s the difference?,  
hinriCH FOUNDATION, 2023,  
[https://www.hinrichfoundation.com/research/article/trade-  
and-geopolitics/china-decoupling-vs-de-risking/](https://www.hinrichfoundation.com/research/article/trade-and-geopolitics/china-decoupling-vs-de-risking/)

Chun-Yi Lee, 2023, When Globalisation Meets Geopolitics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https://www.freiheit.org/publikation/when-globalisation-  
meets-geopolitics-semiconductor-supply-chain](https://www.freiheit.org/publikation/when-globalisation-meets-geopolitics-semiconductor-supply-chain)

Ding, J. 2023. The diffusion deficit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wer: re-assessing China’s ris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26.

<https://doi.org/10.1080/09692290.2023.2173633>

Emily Benson and Gloria Sicillia, 2023.12.20, “A Closer Look at De-risking”,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https://www.csis.org/analysis/closer-look-de-risking>

Engelke, P., & Weinstein, E. 2023. Global Strategy 2023: Winning the tech race with China. Atlantic Council, June, 27.  
<https://www.atlanticcouncil.org/content-series/strategic-insights-memos/assessing-chinas-approach-to-technological-competition-with-the-united-states/>

Haramboure, A., Lalanne, G., Schwellnus, C., & Guilhoto, J. 2023. Vulnerabilities in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https://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vulnerabilities-in-the-semiconductor-supply-chain\\_6bed616f-en](https://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vulnerabilities-in-the-semiconductor-supply-chain_6bed616f-en)

Irwin, D. A. 1996. The US-Japan semiconductor trade conflict.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rotection* (pp. 5-1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Ing-Wen, T. 2021. Taiwan and the fight for democracy: A force for good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Foreign Aff.*, 100, 74.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aiwan/taiwan-and->

fight-democracy-tsai-ingwen

Kevin Klyman, June 12, 2022, Biden's War on Chinese Computer Chips  
Harms Americans, The Wall Street

Journal[https://nationalinterest.org/blog/techland-when-  
great-power-competition-meets-digital-  
world/biden%E2%80%99s-war-chinese-computer-chips](https://nationalinterest.org/blog/techland-when-great-power-competition-meets-digital-world/biden%E2%80%99s-war-chinese-computer-chips)

Khan, S. M., Mann, A., & Peterson, D. 2021.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Asses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CSET  
Issue Brief.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CSET).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Lewis, J.A.,2023, November, Rethinking Technology Transfer Policy  
toward Chin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p. 5  
[https://www.csis.org/analysis/rethinking-technology-  
transfer-policy-toward-china](https://www.csis.org/analysis/rethinking-technology-transfer-policy-toward-china)

Modelske, G., & Thompson, W. R. 1996.Lead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Orion, Assaf. 2020 .Illusion, Awakening, Rage, and Response: Th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Chin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http://www.jstor.org/stable/resrep25540>

- Okonjo-Iweala, N. 2023. Why the World Still Needs Trade: The Case for Reimagining-Not Abandoning-Globalization.Foreign Aff.,102, 94.
- Rapkin, D., & Thompson, W. 2003. Power transition, challenge and the (re) emergence of China.International Interactions,29(4), 315-342.
- Schmidt, E. 2023. Innovation Power: Why Technology Will Define the Future of Geopolitics.Foreign Aff.,102, 38.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eric-schmidt-innovation-power-technology-geopolitics>
- SIA, 2023 “State-of-Industry-Report”, (July)  
<https://www.semiconductors.org/2023-state-of-the-u-s-semiconductor-industry/>
- Sujai Shivakumar, Charles Wessner, and Thomas Howel,AUGUST, 2023,,Japan Seeks to Revitalize ItsSemiconductor Indust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202308/J230721\\_Shivakumar\\_Japan\\_Semiconductor.pdf?VersionId=U24ZzfAVjyFJIwki7FFQDV.XiQli9WYN](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202308/J230721_Shivakumar_Japan_Semiconductor.pdf?VersionId=U24ZzfAVjyFJIwki7FFQDV.XiQli9WYN)
- Sheila Chiang,2023, “Don’t underestimate China’s ability to build its own advanced chips despite U.S. curbs, tech analysts say”, CNBC, June 6, 2023,

<https://www.cnn.com/2023/06/06/dont-underestimate-chinas-ability-to-build-advanced-chips-analysts-say.html>

Thadani, A., & Allen, G. C. 2023. May. Mapping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https://www.csis.org/analysis/mapping-semiconductor-supply-chain-critical-role-indo-pacific-region>

Xin Ping “From ‘decoupling’ to ‘de-risking’ : Playing with words simply does not work”, Global Times, Aug 02, 2023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8/1295517.shtml>

Zeyi Yang, 2023.1.3, What’s next for the chip industry Aggressive new US policies will be put to the test in 2023. They could ultimately fragment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3/01/03/1065959/whats-next-chip-industry-2023/>

백서인외. 2022.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배영자, 2017,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혁신,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패널(NSP) 연구보고서

최계영, 2022, 『차가운 평화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미중 기술패권』, 서울: 인문공간.

# 번리(藩籬)체제의 양무(洋務)적 운용 - 이홍장의 조선 속방론(屬邦論)과 입약권도책

일청강화기념관

송지혜

서울대학교

## 1. 이홍장의 조선 속방론과 입약권도책

19 세기 말, 조선이 ‘만국공법’의 질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의 속방(屬邦)으로서 가지는 지위가 문제시되었다.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일본이었지만, 일본이 이것을 문제삼을 수 있었던 근거는 조선이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데에 있었다. 청을 법적 대리인으로 세우지 않고 조선이 스스로 조약 체결의 주체가 된 이상,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가 청의 ‘속국’이 아님을 다룬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 청은 일관되게 그리고 강력하게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1894 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은

상당수의 군사를 맞파병한 후 조선이 청의 속방인지의 여부를 문제시하며 철군하지 않았다. 일본의 군대가 한성을 에워싸고 “조선이 중국이 보호하는 속방인지 여부를 힐난하며 … 만약 속방을 인정하면 곧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sup>1</sup>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도 이홍장은 “(일본이) 조선을 핍박하여 중국의 속방을 인정하지 않게 함은 단연코 따라서는 안 된다”<sup>2</sup>고 지시했다. 조선이 청의 속방인지를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은 청일전쟁에서 청이 일본에게 패배하여 조선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까지 지속되었다.<sup>3</sup>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선이 각국과 통상하도록 설득하고 지도한 것도 이홍장이었고, 청이 대리하지 않고 조선을 직접 통상의

---

<sup>1</sup> 광서 20 년(1894) 5 월 26 일: 원세개가 급전을 보내 아뢰기를, “일본이 3,000 여 명을 추가 파병했고, 추가 파병해 상륙시킨 1,000 명이 한성으로 왔습니다. 오오토리는 조선이 중국이 보호하는 속방인지 여부를 힐난하며 며칠 내에 답변하도록 해서 만약 속방을 인정하면 곧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G20-05-165 [『이홍장전집』, 225 쪽].

<sup>2</sup> 광서 20 년(1894) 5 월 26 일: 저(이홍장)는 답하기를, “전보가 이를 동안 통하지 않다가 홀연히 급전을 받았는데, 일본의 추가 파병이 확실하지 않다. 조선을 핍박하여 중국의 속방을 인정하지 않게 함은 단연코 따라서는 안 된다. 러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논의가 현재 긴박하니 대략 인내하면 반드시 변통하여 처리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간절하게 조선에 부탁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G20-05-166 [『이홍장전집』, 226 쪽]

<sup>3</sup> 청과 일본의 전쟁을 종결짓는 1895 년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 1 조는 다음과 같이 조선의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규정했다: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주독립에 해가 되는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貢獻, 전례典禮 등은 장래에 완전히 폐지한다(량치차오, 2013, 207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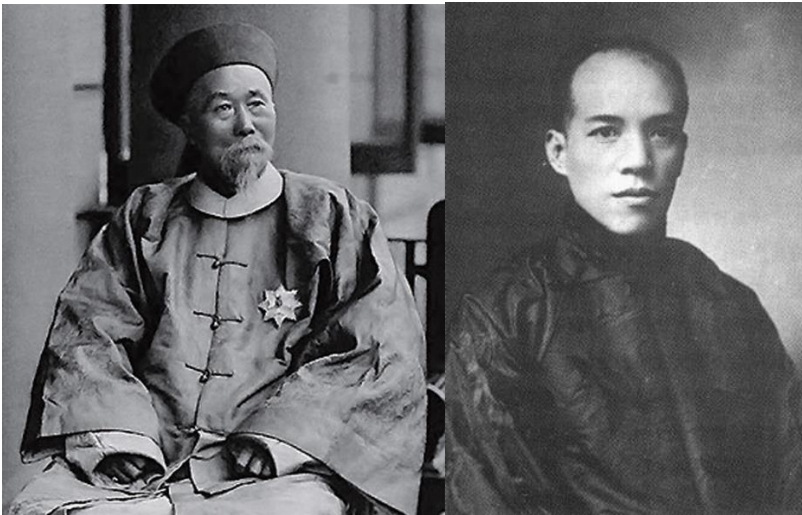


주체로서 세우기로 결정한 것도 이홍장이었다. 다시 말해,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고자 했던 이홍장이 바로 조선이 청의 속방인지의 여부를 다룰 여지를 만든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이홍장이 조선 속방론을 주장하고 그에 입각하여 행동했다는 사실과 그가 조선으로 하여금 각국과 통상하는 주체가 되게끔 인도했다는 사실은 당대인들에게도 모순적인 행보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1 년, 양계초는 이홍장에 대한 평전을 쓰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원칙대로라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조선의 외교는 중국이 주관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 역시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다(량치차오, 2013,  
160 쪽).

처음에 그는 국제법을 이해하지 못해, 조선이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도록 잘못 권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책임이다. 일단 조약이 체결되었으면  
조선의 자주독립을 묵인했어야 하는데, 군대를 파견해  
조선의 내란에 간섭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책임이다(량치차오, 2013, 183 쪽).

여기서 양계초는 국제법 상의 ‘속국’ 개념에 의거하여 조선과 청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청과 조선이 전통적으로 맺어온 관계를 국제법에 의거해서 판단해볼 경우 조선은 명백하게 청의 ‘속국’이다. 그런데 이홍장은 이러한 국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탓에 조선이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함으로써 조선이 ‘독립국’이 되게끔 인도하는 동시에 조선의 내란에 간섭함으로써 조선을 ‘속국’ 취급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고, 이는 결국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요컨대, 양계초는 이홍장이 조선 속방론을 견지하는 동시에 조선의 각국과의 통상을 지도했던 까닭을 이홍장의 국제법에 대한 무지에서 찾았다.



좌: 이홍장, 우: 양계초

그러나 이홍장이 19세기 후반 조선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속방’과 ‘속국’을 충분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양계초의 이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홍장은 조선이 통상조약을 맺는 국가들에게 종래의 청과 조선의 관계를 주지시킴에 있어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강조했을 뿐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주장한 바 없다. 또한 1880년대 들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로 1895년 청일전쟁이 종결되던 시점까지 이홍장은 공식적인 문서에서 조선을 ‘속방’ 혹은 ‘속토(屬土)’라고 지칭했을 뿐 ‘속국’이라는 단어로 직접 지시한 바 없다. 실로 청이 조선의 군주로 하여금 타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상대국의 정부나 의회에 따로 조회를 보내 알리게 한 것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속방’이라는 사실이었다.<sup>4</sup>

---

<sup>4</sup>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하는 것은 이홍장이 조선을 대신하여 미국 전권대신 슈펠트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조정 대상이 되었던 일이다. 이홍장은 조약의 제1조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정과 외교문제는 종래 모두 자주할 수 있었다(『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234쪽)”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슈펠트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 타협점으로써 해당 내용을 조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별도로 조회문을 보내게 되었다. 당시 조선국이 미국에 보냈던 조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조선은 본래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예전부터 모두 대조선국 군주가 자주해왔습니다. 현재 대조선국과 대미국이 피차 조약을 체결함에 모두 동등하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대조선국 군주는 조약 내 각 조항을 반드시 자주공례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대로 시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대조선국이 중국의

당대에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만들자는 주장들이 청 조정  
에 빚발쳤던 정황을 고려하면,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닌 ‘속방’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홍장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주일청국공사 여서창은 “조선 국왕을 폐하고 군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고, 한림원 시독 장패륜은 “조선을 정복하고  
조선통상대신을 파견하여 외교를 다스리게 할 것을 상주하기도  
하였다(유바다, 2016, 184 쪽).” 하여장이 총리아문에 올렸던  
「主持朝鮮外交論」에서도 이처럼 조선을 확실하게 청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의 형세도 날로  
급박해집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오늘날 형세를  
논하자면, 몽고나 서장의 예처럼 조선에  
주차변사대신을 두고 모든 국내의 정치 및 외국과의  
조약을 모두 중국이 주지함으로써 외국인들이 감히  
엿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상책입니다.(『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 99 쪽)

---

속방이라고 하였지만, 그 직분 내에서 응당 시행해야 할 모든 사항은 모두 대미국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국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4』, 74-75 쪽).”

청이 조선의 외교를 주재하는 방식에 대해 하여장은 명시적으로 조선에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상책으로 보고 있다. 이홍장처럼 조선의 대신들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비공식적으로 조선의 외교를 지도하는 방식은 하여장이 보기에 상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구할 만한 중책이다.

그러나 이홍장은 이처럼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만들자는 입장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하며 조선이 타국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되 조약 체결을 대리하지는 않는 자신의 방침을 견지하고자 했다. 그는 조선 속국론에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문건에 걸쳐 몇 가지 제시한 바 있는데, 한 가지는 조선을 ‘속국’으로 삼는 것은 청에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장패륜의 건의를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문건에서 이홍장은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를 대리하도록 할 경우, “이후 각국과 조선의 교섭 사건에 대해 반드시 오로지 중국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아마도 조정과 총리아문이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 285 쪽)”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한 청이 실질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성공적으로 간여할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내정 간섭을 시도했다가 일이 틀어질 경우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종래의

관례조차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sup>5</sup> 이처럼 이홍장은 외교를 대리하는 일과 내정에 간여하는 일에 대해 비용의 문제와 능력 부족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명백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다.<sup>6</sup>

---

<sup>5</sup> “다만 조선의 국내 정치에 대해 중국은 지금껏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은근히 그 권력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풍토가 서로 다르고 인제가 미약하여 여러 조치의 성패가 반드시 우리 뜻처럼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조선이 앞에서는 받들고 뒤에서는 거스르거나 혹은 남의 선동을 받아 사이가 벌어진다면, 조정은 또한 장차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여 생각해보았으나 감히 황급하게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군기대신이 총리아문과 함께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다음에 답변 상주를 올리도록 지시해주실 것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 286 쪽).”

<sup>6</sup> 내가 언급한 이 동일한 사료에 대한 해석을 개진하며 유바다는 이홍장이 대신을 파견하여 조선의 통상을 주관하고 조선 정부의 내정에 간여한다면 청이 조선을 “태서 속국과 같이 삼을 수 있다(與泰西屬國之例相符)”고 주장했음에 대해 “이렇게 되면 조선은 국제법에 따른 청의 속국이 되는 것이며 그 국제법적 지위는 반주지국이 된다”라고 해설했다(유바다, 2019, 181 쪽). 그러나 “與泰西屬國之例相符”는 “태서 속국과 같이 삼을 수 있다”고 번역하는 것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번역처럼 “서양 속국의 사례와도 들어맞습니다”로 옮기는 것이 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보인다. 또한 유바다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문장이 각주 5의 문장임을 고려할 때, 해당 문단 속에서 이 문장의 의미를 이홍장이 ‘대신을 파견하여 조선의 통상을 주관하고 조선 정부의 내정에 간여’함으로써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삼겠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문맥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이홍장은 ‘대신을 파견하여 조선의 통상을 주관하고 조선 정부의 내정에 간여’하는 일이 서양의 속국의 예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그것이 결국 청의 내정간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것에 반대하고 있다. 즉, 이 문건에서 이홍장이 청이 조선을 “속국과 같이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유바다의 해석과 달리, 이홍장은 이

이홍장은 조선의 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주선해나감에 있어서 조선을 청의 ‘속국’과 같이 취급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직접 대리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종래의 ‘속방’을 대하는 전례에 의거해서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지도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자주(自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신하고자 했다. 이는 청이 당시의 시점까지 간접 지배를 했던 신장, 내몽고 등의 지역을 적극적으로 직할해나감으로써 청의 확실한 ‘속국’으로 위치시키고자 했던 시도들에 비추어볼 때, 그 차별성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실로 1870년대 국방 예산의 향방을 두고 이홍장과 대립하던 좌종당은 신장 지역을 수복하고 그에 대한 청의 직접 지배를 수립해 내는 데에 공헌한 바 있다. “몽고나 서장의 예처럼 조선에 주차변사대신을 두고 모든 국내의 정치 및 외국과의 조약을 모두 중국이 주지”하는 것이 조선에 대해서도 상책이라는 하여장의 주장은 청의 서북부 지역에 취한 공세적 정책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처럼 이홍장이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속방’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테기 토시오(茂木敏夫, 1987)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의 서구 국가에 대한 개국에 대해 이홍장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틀”을 존중하며 조선을 대하려 했다. 그는 이처럼 전통적인 속방 자주 원칙을 존중하는 것은 하여장이 제기한 식민지적 지배에 비해 훨씬

---

문건을 통해 도리어 서양 속국의 사례처럼 조선을 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펴렷던 것이다.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지만,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하고 식민지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외국과의 문제를 모두 떠맡아야 했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당시 청에게 없었다고 지적한다. 앞서 이홍장이 장패륜의 주장에 반박했던 논리에 비추어보면, 19 세기 후반 청의 입장에 대한 모테기 토시오의 이해는 당시 이홍장의 판단과 공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건대, 이홍장이 조선을 각국과의 조약 체결의 주체로 세우는 동시에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 일은 양계초의 이해처럼 그가 국제법을 몰라서 저지른 모순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발생시킨 의도된 모순이다. 종래의 청에 대한 조선의 지위가 국제법상의 ‘속국’에 해당한다고 단언해버린 양계초와는 달리, 이홍장은 종래의 ‘속방’ 지위와 국제법적 ‘속국’ 지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해나갔던 것이다. 이홍장은 청 조정을 설득하는 동시에 조선을 대상으로도 이처럼 일견 모순되는 행보를 취하는 것의 장점을 열심히 설득시키고자 했다. 일례로 그는 김윤식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조선이 각국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만국공법의 보호와 각국의 세력균형을 이용하는 동시에 청의 속방으로 남음으로써 종래와 같은 청의 보호를 받는 것이 조선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267-276 쪽). “청과의 자주적 속방 관계를 유지하면서 태서 각국과 만국공법에 따라 조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하영선, 2019, 49 쪽)”하는 김윤식의 양득체제론의



배경에는 이처럼 조선 입약권도책과 조선 속방론을 동시에 추진했던 이홍장의 ‘의도된 모순’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홍장은 당시 어떤 고려와 판단에 의해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행보-조선 입약권도책과 조선 속방론-를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일까. 본고에서 나는 이홍장의 ‘의도된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시도로서 그가 조선을 중국의 ‘울타리,’ 즉 ‘번리(藩籬)’로 여겼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1880-90 년대에 걸쳐 그가 조선에 대해 내렸던 일련의 결정들은 청의 동쪽 울타리를 지켜냄으로써 청의 전통적 안보체제로서의 ‘번리체제’를 견고히 하려고 했던 그의 고민과 노력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이홍장이 조선의 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지도한 일은 ‘번리체제’를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그 의미가 재조명될 수 있는데, 나는 이를 번리체제의 ‘양무(洋務)’적 운용으로 지칭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탐구해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속방론과 입약 권도책이라는 일견 상호 모순적인 이홍장의 행보들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맥락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는 시론적 논의를 본고에서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2. 번리체제와 대륙형 제국의 안보 패러다임

이홍장: 다만 조선이 능히 다른 나라와 접촉하고  
외교를 하여 스스로 울타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 곧  
천진, 길림, 산둥, 직예가 모두 울타리의 보호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880 년 11 월 22 일]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3』, 111-112 쪽)

여서창: 올해 (제 2 차 수신사로 일본에 온)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해 깜짝 놀라 탄복하면서, 자못  
(중국과 일본) 양쪽에 모두 걸치려는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땅히 시급하게 사신을  
조선으로 파견하여, 조선을 위한 조약 체결 등의 사무를  
처리해주어야 할 듯합니다. 또 반드시 부산, 원산진  
등지에서 항구 한 곳을 찾아 군함을 정박시키는 곳으로  
삼는다면, 다른 나라의 교활한 음모를 가라앉힐 수  
있으니, 이 일은 동쪽에 울타리를 치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1882 년 모월 모일]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4』, 306 쪽)

이홍장과 여서창은 조선이 각국과 통상하도록 청이 지도해야  
하는 이유를 중국의 동쪽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찾고 있다. 두 사람은 조선은 청의 동쪽 ‘울타리’이며, 이 울타리를  
보호하는 것이 곧 청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홍장이 이유원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중국과 귀국은 한집안이나 같으며 우리나라의

동삼성(東三省)을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으니 … 귀국의 근심이 곧 중국의 근심”<sup>7</sup>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들의 인식에 따르면 동쪽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는 일은 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에 중요하다. 청이 조선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동쪽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안위는 청의 안보라는 맥락 속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이 조선으로 하여금 각국과 통상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바로 이 동쪽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실로 여서창은 조선의 외교 사무를 지도하는 일을 조선에의 군함 파견이라는 또 다른 울타리 보호 정책과 병치하고 있다. 이홍장도 조선이 청의 지도를 받아 능히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청의 동쪽 울타리가 강고해지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울타리를 튼튼하게 유지함으로써 청의 안보를 구축한다는 이해는 이홍장이나 여서창 등 특정 고위 대신들의 특수한 의견이기보다 청의 정치엘리트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했던 것이다. 일례로 1881 년 청이 베트남을 보호할 필요성을 논하며 류장우는 다음과 같이 울타리의 안보적 중요성을 정식화한 바 있다. “邊省이라는 것은 중국의 문호이고 外藩이라는 것은 중국의 藩籬입니다. 藩籬가 무너지면 문호가 위협에 빠지고 문호가

---

<sup>7</sup> 이홍장이 이유원에게 보낸 편지, 『고종실록』 16 권, 고종 16 년 7 월 9 일 신사 1 번째기사

위험하면 堂室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sup>8</sup> 또한 청이 주변 소국을 ‘울타리’로 삼는 것이 비단 조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청은 베트남도 청의 ‘울타리’로 여겼으며, 그 울타리의 안위가 프랑스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대를 파병해서 베트남을 보호하고자 했다. 청이 조선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동쪽의 울타리를 방비하는 맥락에서 논의되었다면, 베트남의 퉁킹 지역이 프랑스에 의해 점령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청이 군대를 파병해서 베트남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남쪽의 울타리를 방비하는 맥락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sup>9</sup>

이처럼 청은 주변의 울타리들을 방비하기 위해 해당 소국에 군대를 파병하거나 외교를 주선하고자 했다. 청이 조선과 베트남과 같은 소국에 대해 ‘보호’를 자청했던 한 가지 주요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청의 안보적 고려에서 연유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청이 울타리를 방비하지 못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청에게 어떠한 안보 위협을 제기했던 것일까? 한 가지 단서는 베트남과 조선의 지리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1882 년 장수성은 베트남이 중국의 버퍼존(buffer zone)이 되는 지리적 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베트남 통칭 각성과 운남과 양광 지역은 서로 맞닿아

<sup>8</sup> 『淸史稿』 卷 527 「屬國」 「越南」；홍성화(2019, 476 쪽)에서 재인용.

<sup>9</sup> 장수성: 베트남의 국력은 매우 약하니 만약 프랑스인들의 뜻이 (베트남의) 병탄에 있다면 이 나라는 스스로 보전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변속의 의의를 논한다면, 중국은 즉각 파병하여 구원하여야 하는데, … [1882 년 3 월] (『淸光緒實錄』 卷 144 「光緒 8 年 3 月 辛亥」；홍성화(2019, 480 쪽)에서 재인용)

있으므로 만약 프랑스가 통킹 지역(‘北圻’)을 점령한다면, 국경의 울타리가 모두 철거 된 뒤이니 후환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sup>10</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청의 입장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 전체의 안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의 북부의 통킹 지역의 안위가 중요했다는 것이다. 청의 국경과 접한 지역의 영토가 청의 잠재적 적국에 의해 점령되거나 그 간접적인 관할권 하에 종속되는 상황이 청에게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하여장: 지금 러시아의 해군제독 레오폴스키가  
 군함 10 여 척을 거느리고 훈춘 부근에 정박하고  
 있는데, 날이 추워지고 얼음이 얼면 반드시 남하할  
 것입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조선을 침범하여 차지하는  
 등 해악을 끼치려 한다면 조선은 반드시 땅을 나누어  
 주어 스스로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침대 옆에 남이  
 누워서 코를 골며 자도록 놔두어서는 후환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만약 다행스럽게 이러한 일이  
 없더라도,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조선 백성의 힘을 빌려  
 개척하고 조선의 쌀을 옮겨 나르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뜻을 품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 무릇  
 아시아의 여러 소국은 쇠미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

<sup>10</sup> 『淸光緒實錄』 卷 144 「光緒 8 年 3 月 辛亥」; 홍성화(2019, 480 쪽)에서 재인용.

월남은 이미 프랑스와 땅을 나누었고, 버마는 다시  
영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천행으로 조선은 간신히  
영토를 보전하고 있으나, 구습을 굳게 지키고 잘못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권해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880년 10월 16일] (『국역  
청제중일한관계사료 3』, 101 쪽)

하여장의 논의는 청이 ‘울타리’로서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청의 속국인 조선, 베트남 등의 정치체가 아니라 청이 상상하는 스스로의 외연과 맞닿아 있는 지역의 ‘영토’였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1880년대 이래 청이 이전과는 달리 조선의 ‘영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청이 전통적 제국에서 근대적 제국으로 자신을 변모시켜 가는 양상, 그리하여 자주적 속방이었던 조선을 종속적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의도와 관련되어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위 사료에서 보듯이, 청이 주변 소국들의 영토에 관심을 가졌던 까닭은 바로 해당 영토가 타국의 직접적인 관할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의 ‘울타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청이 소국들의 영토가 타국의 관할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자 했던 까닭은 해당 영토를 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야심의 발로가 아니라 해당 영토를 청의 울타리로 존속시키기 위한 안보적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속방의 영토에 대한 청의 이러한 인식은 베트남에 대한 이홍장의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불전쟁 발발 직전인 1883 년, 이홍장은 프랑스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베트남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프랑스 사신 트리코(Tricou)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의 “모든 땅은 중국의 屬土이나 본래부터 그 영토로 이익을 볼 생각은 없다. … 오늘날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베트남을 보호하는 경계에 대한 것이다. 경내 토지는 여전히 베트남이 소유한다. 다만 (베트남 경내에서) 土匪가 소요를 일으킨다면, 중국은 파병을 해서 소탕할 수 있게 한다.”<sup>11</sup> 이러한 점에서 조공책봉체제에서 속방의 자주성은 제국이 ‘허용’해주었다고 보기보다 제국의 안보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속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하지 못해서 영토 내의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거나 타국에 영토를 빼앗기는 상황은 해당 영토를 자신의 울타리로 삼고 있던 제국의 입장에서 안보 체제에 비상불이 들어온 상황인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안보 비용을 증대시켜야 하는 문제적 상황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조선이나 베트남과 같은 속방들의 안위가 중요한 맥락은 어디까지나 그 속방들이 해당 ‘영토’를 직접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주체라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속방들이 스스로를 보전하기 위해 청의 울타리가 되는

---

<sup>11</sup> [1883 년 8 월 25 일] 『李鴻章全集』, 권 33, 273 쪽; 홍성화(2019, 484 쪽)에서 재인용.

영토를 타국에 넘기거나(“조선은 반드시 땅을 나누어 주어 스스로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월남은 이미 프랑스와 땅을 나누었고”)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상황(“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조선 백성의 힘을 빌려 개척하고 조선의 쌀을 옮겨 나르고자 할 것이며,” “버마는 영국의 통제를 받습니다.”)에서는 속방의 보전이나 안위 그 자체는 더 이상 청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은 자신의 울타리인 영토를 지키기 위해 속국의 멸망을 방관하거나 주도하기도 한다. 실로 청과 같은 조공책봉체제를 운영했던 명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울타리가 되는 영토를 지키고자 조선에 군대를 파병했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일본에게 조선 이남을 할양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타협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류성룡을 위시한 조선의 정치 엘리트 다수는 이 전쟁이 ‘번리지전(藩籬之戰)’, 즉 울타리 전쟁이며 명의 목표가 조선이라는 정치체의 존속이 아니라 조선의 북쪽 지역을 명의 울타리로 삼는 데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송복, 2014).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청이 울타리로 삼는 ‘영토’는 청과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류큐의 경우, 조선이나 베트남처럼 청의 ‘속방’이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류큐 병합에 나섰을 때 청은 고심 끝에 류큐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 데에 이르렀다. 류큐 또한 오랜 기간 청의 조공국이었지만 청이 안보의 관점에서 수선하고 지켜내야 할 ‘울타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실로 일본이 류큐를 병탄하려는 사태에



대해 여서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실 류큐의 존망은 중국의 득실에 그리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줄어드는 것은 중국의 체면일 뿐입니다(『국역 청계증일한관계사료 4』, 306 쪽).” 여서창의 의견이 당시 청의 정치 엘리트들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여서창의 이러한 발언은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을 직접 다스리자는 주장이 있었을지언정 조선을 버리자는 직접적인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로써 보건대, 류큐에 대한 청의 종주권 주장이야말로 안보적 고려가 크게 매개되지 않은 상징적 차원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은 류큐가 일본에 장악되는 상황을 위협으로 인지했지만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조선에 대해서처럼 많은 자원을 쏟지 않았다.<sup>12</sup> 조선이나 베트남과 달리, 류큐는 청의 실질적인 ‘울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의

---

<sup>12</sup> 그런 의미에서 후마 스스무(2019)가 류큐에 대한 청의 종주권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청의 조공-책봉 체제의 허구성을 비판한 것은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는 류큐가 오랜 기간 청과 일본과 동시에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왔으며 청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서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라는 것의 허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청과 같은 대륙형 제국의 ‘울타리’ 안보 체제를 고려하면, 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류큐는 해당 안보 체제 내에서 원래부터 그 안보적 중요성이 크지 않았던 존재였던 것이다. 비록 중국 주변의 소국들이 중국의 ‘조공국’이라는 이름은 공유했더라도, 해당 소국들이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중국의 ‘울타리’로 간주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중국이 해당 소국들과 맺는 관계의 양상은 달랐던 것이다.

입장에서는 안보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릴 수 있는 카드였던 것이다. 이처럼 청이 류큐에 대한 관할권을 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청이 스스로를 상상함에 있어 정치체의 외연이 육지를 통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외연이 바다를 통해 확장될 수 있다고 상상했던 영국을 위시한 해상 제국들의 상상과는 상이하다. 이를 고려하면 청이 운영하고자 했던 울타리 체제는 어디까지나 대륙형 제국-즉 육지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장하는 제국-의 안보 패러다임이었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홍장의 주도로 청이 조선과 각국의 통상을 지도했던 일은 청이 이러한 울타리 체제 속에서 동쪽 울타리를 보수하고자 했던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청의 행정구역 지도

이제 이처럼 ‘번리’를 지키려는 안보적 고려를 맥락으로 삼아, 이홍장의 조선 속방론과 입약 권도책을 사료를 통해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홍장: 조선이 전에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때,  
중국은 곁에서 완곡히 권유한 데 지나지 않아, 결코

관원을 파견하여 주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약문에서도 또한 “중국정부의 명을 받든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지금 조선이 서양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중국정부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기꺼이 따르겠지만 서양 국가가 반드시 기꺼이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하여장은 조선이 스스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그 자주를 인정하면 중국의 속방이라는 명분이 돌연 제거될 것이라 우려하는데, 본디 견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선이 능히 다른 나라와 접 촉하고 외교를 하여 스스로 울타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면 곧 천진, 길림, 산둥, 직예가 모두 울타리의 보호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이 우리에게 공손히 대해온 예절을 보건대, 서양 국가와의 조약 체결 때문에 조선의 태도가 즉시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중국이 내정을 정비하고 외적을 몰아내며, 군대를 조련하고 해안을 방어하여 나날이 자강을 도모하면 조선이 비록 약소하다고 (중국을) 감히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구 대국 또한 (중국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자강의 대책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끝내 자립을 할 수 없을까 우려되는데, 이 또한 어찌 속방이 우리말을 따르는지의 여부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재삼 해아려보면 총리아문의 지시처럼 단지 은밀하게 도우며 보호하는 것만 가능할 듯합니다. [1880 년 11 월 22 일] (『국역 청계 증일한관계사료 3』, 111-112 쪽)

위의 사료에서 이홍장이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명분’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선의 자립을 통해 청의 울타리를 보호하는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자강 노력 그 자체이다. 두 가지 모두 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홍장이 보기에, 하여장이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까닭은 “속방이 우리말을 따르는지의 여부,” 즉 중국의 권위와 체면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홍장은 속방에 대한 중국의 권위와 체면은 중국의 자강과 자립 문제, 즉 안보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본다. 이홍장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안보이고, 중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조선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 드는 일이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명분’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사료를 통해 보건대, 이홍장은 조선으로 하여금 각국과 통상 조약을 맺게 하는 것을 조선의 자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청의 안보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여장은 조선에 청의 관리를 직접 파견하거나 혹은 최소한 조약에 조선이 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 그 까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선으로 하여금 각국과 조약을 맺게 하면, 여러 국가들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식하고 청의 속방으로 인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즉 속방이라는 명분이 사라 지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홍장은 두 가지 조치가 모두 조선이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에 반대했다. 대신에 그는 조선의 주요 대신에게 편지를 보내 외교를 권하고 지도함으로써 “단지 은밀하게 도우며 보호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여장: 서양의 통례를 살펴보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는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한 쪽을 도울 수 없지만 속국만은 예외입니다. 지금  
조선을 러시아가 삼키려 하는 위급함에서 구하려면,  
부득불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서로 버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이 스스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게  
하면 다른 나라들은 모두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식하여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름은 홀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다급한 일을 구하자고 근심을  
뒷날까지 남기게 되니,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80년 10월 16일] (『국역  
청계증일한관계사료 3』, 100쪽)

그러나 하여장이 실제 구사했던 논리는 이홍장이 이해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하여장이 조선에 청 관리를 파견하거나 적어도 조약에 관련 문구를 써넣음으로써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까닭은 각국과의 통상을 통한 조선의 자립이라는 청의 안보 정책이 가지는 딜레마에서 연유했다. 하여장이 보기에, 러시아의 조선 침략 혹은 서북 변경 소요라는 다급한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에 타국들의 이해관계를 끌어들여 세력균형의 형세를 만드는 일은 청의 단기적 안보 정책에 해당한다. 그리고 막상 조선에서 진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청이 직접 군대를 파병하여 조선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일은 청의 장기적 안보 정책에 해당한다. 문제는 단기적 안보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하여금 각국과 통상 조약을 맺게 만들면 향후 청이 장기적 안보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진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동아시아 각국 간의 관계에서 타국에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도덕적 정벌론의 논리로 정당화되었지만, 서양 각국 간의 관계에서 타국에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만국공법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장은 향후 청이 조선에 군대를 파병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비단 동아시아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서양의 각국도 그러한 파병을 문제시할 수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하여장도 이홍장과 같이 조선의 외교를 지도하는 문제를 청의 안보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고, 다만 그 안보 정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장기적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명분'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하여장에게도 조선이 청의 속방/속국인지의 이슈는 어디까지나 청의 안보를 구축하는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홍장은 1880년 겨울의 시점에서 하여장의 이러한 논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 이홍장은 하여장의 논리를 수용했는데, 1882년 2월 10일 이홍장이

총리아문에 조미조약 초안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슈펠트가 보내온 조미조약 초안에) 중국의 속방이라는 구절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저희 쪽에서 이 문제에 간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이 이를 본받고 시간이 지나면 조선이 우리의 속토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니 후환은 더욱 커집니다. (만일 속방이라는 구절을 넣는다면) 만국공법에서는 무릇 자주할 수 없는 부용소국은 다른 큰 나라들과 조약을 맺기도 불편하므로,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3』, 230 쪽).”

이후 청이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속방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홍장은 이처럼 청이 속방에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례로 청불전쟁 발발 직전인 1883 년, 이홍장은 프랑스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베트남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프랑스 사신 트리코(Tricou)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은 본래 우리의 속국이고 그 모든 땅은 중국의 屬土이나 본래부터 그 영토로 이익을 볼 생각은 없다. ... 오늘날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베트남을 보호하는 경계에 대한 것이다. 경내 토지는 여전히 베트남이 소유한다. 다만 (베트남 경내에서) 土匪가 소요를 일으킨다면, 중국은 파병을 해서 소탕할 수 있게 한다.”<sup>13</sup> 이홍장이 베트남이 청의

<sup>13</sup> 『李鴻章全集』, 권 33, 273 쪽; 홍성화(2019, 484 쪽)에서 재인용.



속국임을 강조하는 까닭은 베트남에 대한 청의 파병 권리를 지키는 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서양 각국에 주지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홍장은 줄곧 하여장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그것을 주지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여장이 제안한 것보다는 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일례로 이홍장은 미국 대신 슈펠트가 조선이 청의 속국 이라는 문구를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강경하게 반대하자 각국에 속방 조회를 보내는 것으로 타협한 바 있다. 또한 임오군란으로 인해 사태가 급박해지기 이전까지 이홍장은 조선에 외교 사무를 지도할 청의 관리를 파견하는 문제에 있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오히려 통상 조약의 지도를 위해 청의 관리 파견을 누차 비밀리에 요청한 측은 조선의 왕실 측근 세력이었으며, 이홍장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마건충을 파견했을 때 마건충의 천진으로의 복귀를 늦추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조선 측이었다. 조선 측에서 통상 조약 체결을 도와줄 청의 관리를 파병해줄 것을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을 보내옴으로써 속방이 도움을 요청하면 청은 속방에게 도움을 베푼다는 종래의 전례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이홍장은 관리 파견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다. 정리하면, 이처럼 변리체제의 운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홍장의 조선 속방론과 입약 권도책은 일관된 일련의 안보정책들로 이해될 수 있다.

### 3. 번리체제의 양무적 운용

번리체제가 이홍장의 고유한 발명품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규정해온 하나의 맥락이었다면, 당시 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원하는 이홍장의 제안에 대해 조선 내에서 저항이 거세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홍장이 이유원에게 조선이 각국과 통상할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려 한 편지와 그에 대한 조선 내의 저항을 살펴보면, 이홍장의 조선 통상 지도가 어떤 점에서 전통적인 번리체제 운용의 프레임 내에 있으면서 어떤 점에서 새로웠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이홍장: 귀국에서도 어떻게 진실로 방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이 겁을 내고 있는 것이  
서양입니다. 조선의 힘만으로 일본을 제압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서양과 통상하면서 일본을 견제한다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서양의 일반  
관례로는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대체로 각 나라들이 서로 통상을 하면 그 사이에  
공법(公法)이 자연히 실행되게 됩니다. 작년에 터키가  
러시아의 침범을 당하여 사태가 매우 위험하였을 때에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나서서  
쟁론(爭論)하자 비로소 러시아는 군사를 거느리고

물리났습니다. 저번에 터키가  
 고립무원(孤立無援)이었다면 러시아인들이 벌써 제  
 욕심을 채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구라파의 벨기에와  
덴마크도 다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자체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자 함부로 침략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강자와 약자가 서로 견제하면서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남의 나라를  
뛰어넘어서 먼 곳을 치려 하는 것은 옛사람들도 어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서양의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은 귀국과 수만리 떨어져 있고 본래 다른  
요구가 없으며 그 목적은 통상을 하자는 것뿐이고  
귀국의 경내를 지나다니는 배들을 보호하자는  
것뿐입니다. ... 만약 귀국에서 먼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관계를 가진다면 비단 일본만 견제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엿보는 것까지 아울러 막아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반드시 뒤따라서 강화를 하고  
통상을 할 것입니다. [1879 년] (이홍장이 이유원에게  
 보낸 편지, 『고종실록』 16 권, 고종 16 년 7 월 9 일  
 신사 1 번째기사)

이홍장이 제시하는 조선이 각국과 통상해야 하는 이유는  
 서양 각국과 통상 조약을 맺는 일이 서양 각국을 끌어들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세력 균형의 형세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홍장은 만국공법이라는 명분을 활용할  
 것과 해상 함대의 상호 견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이홍장은 서양의 만국공법은 나라들이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조선이 서양 국가들과 통상을 할 경우 이러한 만국공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홍장이 만국공법을 현실의 힘의 논리를 대체할 수 있는 힘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만국공법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이 서양 국가들에게는 세력균형의 명분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있다. 만국공법은 러시아가 터키를 멸망시키려고 들었을 때 다른 강국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쟁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쟁론으로 인해 러시아의 침탈 의지가 저지되었던 것은 터키가 “고립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터키가 여러 강국들의 상호 견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홍장의 요지는 터키가 만국공법에 의해 구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대해 서양 각국의 상호 견제가 작동하기 위한 명분을 만국공법이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침탈 의지를 서양의 다른 각국이 견제하고자 하더라도 조선이 만국공법의 질서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러시아의 의지에 간섭할 명분이 없다. 이에 이홍장은 조선에게 서양 각국과 통상 조약을 맺음으로써 만국공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가 되어 서양 각국을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에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원: 한 가지 어리둥절하여 의심이 가면서  
 석연치 않는 점이 있습니다. … 벨기에와 덴마크는  
 사마귀만 한 작은 나라로서 여러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강자와 약자가 서로 견제함으로써 지탱되는데  
 유구왕은 수 백 년의 오랜 나라로서 그대로 지탱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고 여러  
나라들과 격리되어 있어서 공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기구하게도  
 지구의 맨 꼬트머리에 놓여 있어 터키, 유구국, 벨기에,  
 덴마크와 같은 작은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하고  
 약소합니다. 게다가 서양과의 거리도 아주 멍니다.

[1879 년] (이유원이 이홍장에게 보낸 답서,  
 『고종실록』 16 권, 고종 16 년 7 월 9 일 신사  
 1 번째기사)

이만손 외: 진실로 황준헌의 말처럼 러시아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힘이 있고 우리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해도 만 리 밖의 구원을 앓아 기다리면서  
 혼자서 가까이 있는 오랑캐 무리들과 싸우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해관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 옛적에  
 6 국六國이 연합하여 진秦을 물리친 것은 모두 영토가  
 서로 연결하여 있고 풍속이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일찍이 겹겹이 막혀 있는 국경을 넘어  
 만리 바다를 건너서 순치脣齒의 외교를 맺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나이다. [1881 년]

(『사의조선책략』을 비판하는 영남만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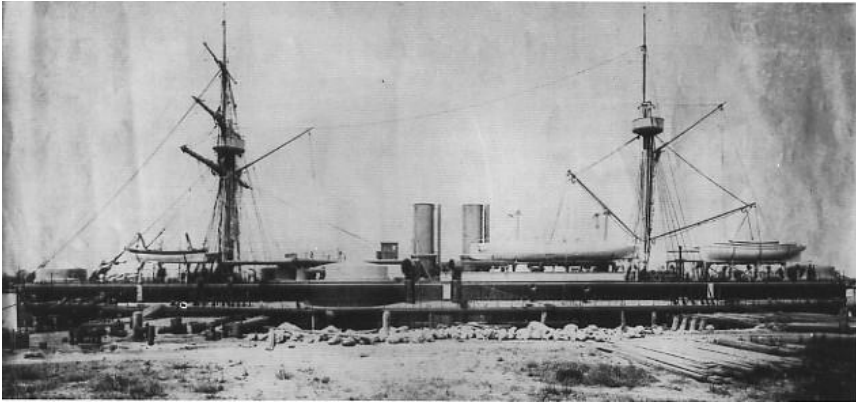
조선은 이홍장의 제언을 정확하게 세력 균형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서양 각국과 통상을 함으로써 그들을 러시아에 대한 세력 균형의 형세를 만드는 데에 끌어들이라는 이홍장의 제언에 대해 조선의 지식인들이 동의하지 못했던 것은 서양 각국을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의 형세를 만드는 일에 끌어들이는 것의 효용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바다를 건너서 존재하는 국가들을 동아시아 대륙의 상호 견제에 동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군대를 파병해서 조선까지 오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홍장이 사례로 든 벨기에와 덴마크 같은 소국들은 강국들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거리도 매우 가까웠다. 강국들이 소국에 대해 상호 견제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처럼 군대를 움직여 서로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각국간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이 류큐를 침략했을 때 서양의 어떤 나라도 제 시간 내에 움직일 수 없었던 까닭은 류큐가 서양 각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일본이 조선에 침략하게 된다면, 서양 각국이 군사적 지원을 보내는 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미 멸망한 국가에 대해서는 공법이 시행되지 않는다.<sup>14</sup> 그렇다면 조선이 서양 각국과 통상을 하더라도

---

<sup>14</sup> 이유원은 해당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물은 바 있다. “터키를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으로 보아서는 공법이 믿을 만한데, 멸망한 유구국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공법이 그 무슨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까?”

이홍장이 기대한 것과 같은 세력균형의 형세를 만드는 데에는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홍장은 바다 건너 있는 국가들을 세력균형의 형세에 동원하는 일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조선 지식인들은 보지 못하고 이홍장은 보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함대의 운용이었다. 앞선 편지에서 이홍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귀국의 경내를 지나다니는 배들을 보호하자는 것뿐입니다.” 이홍장이 의도했던 바는 각국의 함대 간의 형세가 상호 견제를 이루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그간 관계를 맺었던 명나라와 청나라는 오랜 기간 대륙형 제국으로 남기를 자처해왔으며 해상에서의 병력 운용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나가지 않았다. 이에 조선은 상호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세력 균형의 형세를 만든다는 이홍장의 방침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 군사력의 범위에 먼 나라의 함대 운용이 포함된다는 이홍장의 인식은 쉽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북양함대 정원호

나는 이홍장이 이처럼 번리체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조선 문제를 처리해나감에 있어 함대의 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을 그가 번리체제를 ‘양무’적으로 운용했다고 지칭하는 것으로 본고의 시론적 논의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양계초가 이홍장에 대한 평전을 쓰던 시점까지 “‘양무’란 말은 명사가 되지 못했다(량치차오, 2013, 137 쪽).” 다만 양계초는 “이름은 주인이 지은 대로 부른다는 원칙에 따라 ‘양무’라는 말을 사용해 그(이홍장)의 20 여 년간의 활동을 정리(량치차오, 2013, 137 쪽)”하면서, 이홍장이 했던 ‘양무’ 사업들을 표(139 쪽)로 열거한다. 해당 표에 열거된 일들 중 절반 이상이 함대의 건설과 운용,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 정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실로 ‘양무’는 서양의 군사 기술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조명되어



왔지만, 이때 이홍장이 종사했던 ‘양무’의 상당 부분은 함대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을 ‘양무’의 의미를 음미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무’의 개념사는 별도의 연구를 요청하지만, 양계초가 ‘서양’에 방점을 찍어 ‘양무’를 개념화했던 것과 달리 ‘바다’에 방점을 찍어 ‘양무’를 개념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실로 새방론자 좌종당과 대립했던 이홍장의 입장은 ‘해방론(海防論)’으로 당대에 일컬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조선 입약 권도책에 있어 이홍장이 각국의 함대 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전통적인 세력 균형의 논리를 보강해나가고 있었던 면모들을 “번리체제의 양무적 운용”이라 명명함으로써 향후 탐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8. 번리(藩籬)체제의 양무(洋務)적 운용\_일청강화기념관



참고문헌

김형종 외 역. 2016.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

동북아역사재단.

김형종 외 역. 2018.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

동북아역사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이홍장전집》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량치차오, 2013, 《리홍장 평전》, 박희성·문세나 역, 프리스마.

茂木敏夫, 1987, “李鴻章の属国支配觀. 一八八〇年前後の. 琉球・朝

鮮をめぐる,” 中国: 社会と文化, 第二号, 九五~九六  
頁.

송복, 2014, 《류성룡,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나이다》, 시루.

유바다, 2016, “1882 년 조약장정의 체결과 속국(屬國) 반주지국(半  
主之國) 조선의 국제법적지위,” 역사와 현실 99.

하영선, 2019, 한국외교사 바로보기: 전통과 근대, 한울아카데미

홍성화, 2019, “청말 베트남 사태에 관한 인식과 대응,” 명청사연구  
52.

후마 스스무, 2019,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신로사 외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